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목 차

01

| | |
|-----------------|-----|
| 서론 | 001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001 |
| 1.1 연구의 배경 | 001 |
| 1.2 연구의 목적 | 002 |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003 |
| 2.1 연구의 범위 | 003 |
| 2.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004 |

02

| | |
|------------------------|-----|
|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 007 |
| 1. 관련 법 분석 | 007 |
| 1.1 디자인 개념 | 007 |
| 1.2 구성 | 010 |
| 2. 관련 연구 분석 | 012 |
| 2.1 선행연구 | 012 |
| 2.2 시사점 | 016 |
| 3.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연계 | 017 |
| 3.1 디자인 방향 | 017 |
| 3.2 디자인 연계의 개념 정의 | 019 |
| 4. 선진사례 분석 | 020 |
| 4.1 분석 틀 | 020 |
| 4.2 국외 사례 : 일본 고베시 | 021 |
| 4.3 국내 사례 : 서울로 7017사업 | 031 |
| 4.4 시사점 | 038 |

03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추진 현황 040

- 1. 사업개요 041
 - 1.1 건축도시과 041
 - 1.2 건설정책과 046
 - 1.3 농촌마을지원과 050
 - 1.4 자치행정과 052
- 2. 유형별 사업 추진사례 054
 - 2.1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054
 - 2.2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 060
 - 2.3 디자인 아카데미 064
 - 2.4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 064
- 3. 종합분석 및 문제점 도출 065
 - 3.1 사업 간 추진체계 비교 분석 065
 - 3.2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067

04

충청남도 사업 담당자 인식조사 070

- 1. 조사 개요 070
 - 1.1 조사목적 070
 - 1.2 조사방법 및 내용 070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072
 - 2.1 설문항목 도출 프로세스 072
 - 2.2 설문결과 분석 073
- 3. 인터뷰조사 결과 분석 096
 - 3.1 경관/디자인 주무부서 담당자 096
 - 3.2 건설/농촌/자치행정 주무부서 담당자 099
-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101

05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방안 103

- 1. 추진방향 103
 - 1.1 프로세스 103
 - 1.2 기본방향 설정 104
- 2. 실행방안 108
 - 2.1 의사소통체계 구축 108
 - 2.2 다양한 분야 간 연계 113
 - 2.3 법 제도적 지원 116

06

결론 119

- 1. 연구의 성과 119
- 2.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121

■ 참고문헌 및 자료 122

■ 부록 123

- 1. 사업 담당자 인식조사 설문지(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 123
- 2. 사업 담당자 인식조사 설문지(건설/농촌/자치행정 부서 담당자) 127
- 3. 사업 담당자 인터뷰조사 결과 131

표목차

| | |
|---|-----|
| [표 2-1] 디자인 관련법 상 주요개념 | 008 |
| [표 2-2] 각 관련 법의 특징 | 011 |
| [표 2-3] 사업의 연계 및 통합추진 관련 선행연구 | 013 |
| [표 2-4] 시사점 | 016 |
| [표 2-5]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 | 018 |
| [표 2-6] 추진과정 | 023 |
| [표 2-7]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주요내용 | 032 |
| [표 2-8] 추진과정 | 033 |
| [표 3-1] 충남 디자인연계 가능한 부서별 공모사업 | 040 |
| [표 3-2] 유형별 조사 및 분석대상 사업 | 054 |
| [표 3-3] 충남 00읍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개요 | 055 |
| [표 3-4] 사업 간 추진체계 비교 | 066 |
| [표 3-5] 사업별 한계 및 문제점 | 068 |
| [표 4-1] 조사 대상 및 내용 | 071 |
| [표 4-2] 기본정보 | 073 |
| [표 4-3]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관 및 디자인의 중요성(경관/디자인) | 075 |
| [표 4-4]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관 및 디자인의 중요성(타 부서) | 075 |
| [표 4-5] 경관 및 디자인 관련 교육 경험(경관/디자인) | 076 |
| [표 4-6] 경관 및 디자인 관련 교육 경험(타 부서) | 076 |
| [표 4-7] 도 또는 해당 시·군의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경관/디자인) | 077 |
| [표 4-8] 도 또는 해당 시·군의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타 부서) | 077 |
| [표 4-9] 사업 추진 시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복수)(경관/디자인) | 078 |
| [표 4-10] 사업 추진 시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복수)(타 부서) | 078 |
| [표 4-11] 향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 의향(복수)(경관/디자인) | 079 |

| | |
|---|-----|
| [표 4-12] 향후 경관 및 디자인 및 관련 법 제도 활용 의향(복수)(타 부서) | 079 |
| [표 4-13] 사업추진 시 부서 간 협업 진행 여부(경관/디자인) | 080 |
| [표 4-14] 사업추진 시 부서 간 협업 진행 여부(타 부서) | 081 |
| [표 4-15] 협업 내용(그렇다 답한 경우)(복수)(타 부서) | 083 |
| [표 4-16] 타 부서와의 협업 의향(경관/디자인) | 083 |
| [표 4-17]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부서와의 협업 의향(타 부서) | 083 |
| [표 4-18] 향후 타 부서와 협업 의향 내용(복수)(경관/디자인) | 084 |
| [표 4-19] 향후 경관·디자인 관련 부서와 협업 의향 내용(복수)(타 부서) | 085 |
| [표 4-20] 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활용(경관/디자인) | 085 |
| [표 4-21] 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활용(타 부서) | 086 |
| [표 4-22] 전문가 활용 방법(복수)(타 부서) | 087 |
| [표 4-23] 전문가 구성 분야(복수)(경관/디자인) | 087 |
| [표 4-24] 전문가 구성 분야(복수)(타 부서) | 088 |
| [표 4-25] 향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활용 의향(경관/디자인) | 088 |
| [표 4-26] 향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활용 의향(타 부서) | 089 |
| [표 4-27] 향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활용 방법(복수)(타 부서) | 090 |
| [표 4-28] 향후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구성 의향(경관/디자인) | 090 |
| [표 4-29] 향후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구성 의향(타 부서) | 091 |
| [표 4-30] 타 부서 사업과의 연계 및 부서 간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우선순위) | 093 |
| [표 4-31]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력에 대한 의견 | 094 |
| [표 4-32] 사업 담당자 인터뷰 조사(경관/디자인 주무부서) | 097 |
| [표 4-33] 사업 담당자 인터뷰 조사(건설/농촌/자치행정 주무부서) | 100 |
| [표 5-1] 시·군 종합평가에 디자인지표 적용 | 117 |
| [표 5-2] 각 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및 개정 | 117 |

그림목차

| | |
|--|-----|
| [그림 1-1] 연구체계도 | 006 |
| [그림 2-1] 관련법 상 디자인 범위 | 009 |
| [그림 2-2] 「건축기본법」 상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규정 | 011 |
| [그림 2-3] 디자인연계 개념 | 019 |
| [그림 2-4] 분석 틀 | 020 |
| [그림 2-5] 고베시의 위치 | 021 |
| [그림 2-6] “디자인 도시 고베”의 초점 | 022 |
| [그림 2-7] 고베시 디자인부서 업무영역 개념도 | 024 |
| [그림 2-8] “Design City KOBE” 추진체계 | 025 |
| [그림 2-9] 디자인 전담부서 조직도와 업무현황 | 026 |
| [그림 2-10] KITTO의 자체 기획사업 | 027 |
| [그림 2-11] 디자인허브의 “Design City KOBE”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 029 |
| [그림 2-12] 서울로 7017의 17개 보행길 프로젝트 | 031 |
| [그림 2-13]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비전 및 계획방향 | 032 |
| [그림 2-14] 서울시 조직도 | 034 |
| [그림 2-15]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 | 035 |
| [그림 2-16] 사업 추진 및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 | 035 |
| [그림 2-17] 서울로 7017 추진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조 | 036 |
| [그림 2-18] 서울로 7017 사업추진 과정별 참여주체 | 037 |
| [그림 3-1] A군 사업 추진 전 현황 | 056 |
| [그림 3-2] B군 사업 추진 전 현황 | 058 |
| [그림 3-3] B군 사업 추진 후 현황 | 059 |
| [그림 3-4] 사업 추진 전 대상지 및 주변 현황 | 061 |
| [그림 3-5] 충남 00군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 프로세스 | 062 |

| | |
|--|-----|
| [그림 3-6] 어린이공원 시설 배치도(당초 계획과 공공디자인 컨설팅 진행 결과) | 062 |
| [그림 3-7] 사업 완료 후 현황 | 063 |
| [그림 4-1] 설문항목 도출 프로세스 | 072 |
| [그림 4-2] 협업진행 부서(복수)(경관/디자인) | 080 |
| [그림 4-3] 협업내용(복수)(경관/디자인) | 081 |
| [그림 4-4] 협업진행 부서(복수)(타 부서) | 082 |
| [그림 4-5] 협업내용(복수)(타 부서) | 082 |
| [그림 4-6] 향후 타 부서와 협업 의향 내용(복수) | 084 |
| [그림 4-7] 전문가 활용(복수) | 086 |
| [그림 4-8] 향후 경관 및 디자인 전문가 활용 방법(복수) | 089 |
| [그림 4-9] 향후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력 시 예상되는 어려움(복수)(경관/디자인) | 092 |
| [그림 4-10] 향후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력 시 예상되는 어려움(복수)(타 부서) | 092 |
| [그림 5-1] 충남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도출 프로세스 | 103 |
| [그림 5-2] 충남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향 도출 | 105 |
| [그림 5-3] 충남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향 | 106 |
| [그림 5-4] 충남 시·군 디자인 업무 현황 유형(현재) | 108 |
| [그림 5-5] 충남 시·군 디자인 전담인력 배치 및 업무 제시안 | 109 |
| [그림 5-6] 충남형 디자인 관련 사업 연계추진 시스템 제시안 | 111 |
| [그림 5-7] 충남 디자인 관련 사업 연계 및 부서 간 협업을 위한 도 T/F팀 구성 | 112 |
| [그림 5-8] 충남형 디자인 관련 사업의 디자인연계 | 115 |
| [그림 5-9] 충남형 디자인 관련 사업추진 시 전문가 활용 | 116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의 산발적 추진

충남에서는 공공디자인, 경관, 녹지, 마을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축도시 관련 부서에서는 경관과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주택 등의 사업, 건설정책 관련 부서에서는 공원 및 마을조성 등의 사업, 농촌 관련 부서에서는 농촌주택 및 마을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서 개별적 추진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저하 및 유지 관리 미흡 등은 충남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중앙부처에서도 꾸준히 문제시되어 왔다.

또한 경관 및 디자인 측면에서 본다면, 충남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수립되는 계획과 가이드라인은 주관부서 이외 부서에서의 활용도는 물론 인지도도 낮아 디자인 일관성 결여와 공간이용 활용도가 저하 되는 등의 문제도 있는 상황이다.

□ 디자인 관련 사업은 대부분 공적영역 대상의 H/W중심으로 추진

지역경관에서 민간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등 사적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도시 및 경관, 디자인 등 관련 계획에서 사적영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나 유도사항, 방향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물론 경관 및 디자인 관련 계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유도를 하고는 있지만, 이는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는 있으나 관리 및 운영, 이용 측면에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것이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관 및 디자인 개선과 유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가 디자인 사업 추진 시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라 할 것이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지만 충남에서 추진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주무부서 공모사업은 공적영역의 H/W중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의 어려움 역시 꾸준히 문제시되고 있다.

□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의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생활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들은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경관 및 디자인 주무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의 디자인 질 향상은 물론 디자인 사업 결과물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S/W사업과의 연계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체계 확립은 물론 디자인의 일관성 및 경관형성을 통한 충남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디자인 사업 간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주무부서와 타 부서 간 협업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충남에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한 것은 꽤 오래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충남의 정체성 확립 및 사후 운영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들 중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 간 연계 추진방안 제시를 통해 충남의 정체성 확립 및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 간 연계 추진을 위해, 충남 여건에 맞는 부서 간 협업 및 분야 간 연계 방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충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과, 충남도 각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여 추진되는 사업,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자체장의 시정정책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충남도 각 부서의 예산 지원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을 연구범위로 하여, 충남형 사업 연계 추진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디자인 개념 및 특성, 범위
- 관련 법 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 디자인 사업 연계 및 통합 국내외 선진사례
 - : 일본 고베시 디자인 정책 사례, 서울시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사례
- 충남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추진 현황
 - : 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개요(5개 팀 9개 사업)
 - : 사업 특성 분석(사례 분석)
- 충남 디자인 관련 사업 담당자 인식조사
 - : 사업 담당자 대상 심층인터뷰(도/시·군, 디자인 및 경관 관련 부서 3명과 타 부서 3명 총 6명)
 - :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101명)
- 충남 디자인 공모사업 연계추진 및 실행방안
 - : 사업 유형별 추진 방식
 - : 관련 부서 간 협력 방안 및 주체별 역할

2.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디자인 개념 및 특성 분석

- 1단계 : 디자인 개념 및 특성 분석(문헌분석)
 - 「경관법」, 경관기본계획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건축기본법」, 건축기본계획
- 2단계 : 선행연구 분석(문헌분석)
 - 디자인 사업, 문제점 분석
 - 디자인 사업 추진 방향 도출

2) 국내외 디자인연계 통합 추진사례 분석

- 추진과정, 거버넌스 및 주체(문헌분석)
 - 국외 사례 분석 : 일본 고베시(조직 구성 및 역할, 추진내용 등)
 - 국내 사례 분석 : 서울시 서울로 7017 프로젝트(조직 구성 및 역할, 추진내용 등)

3) 충남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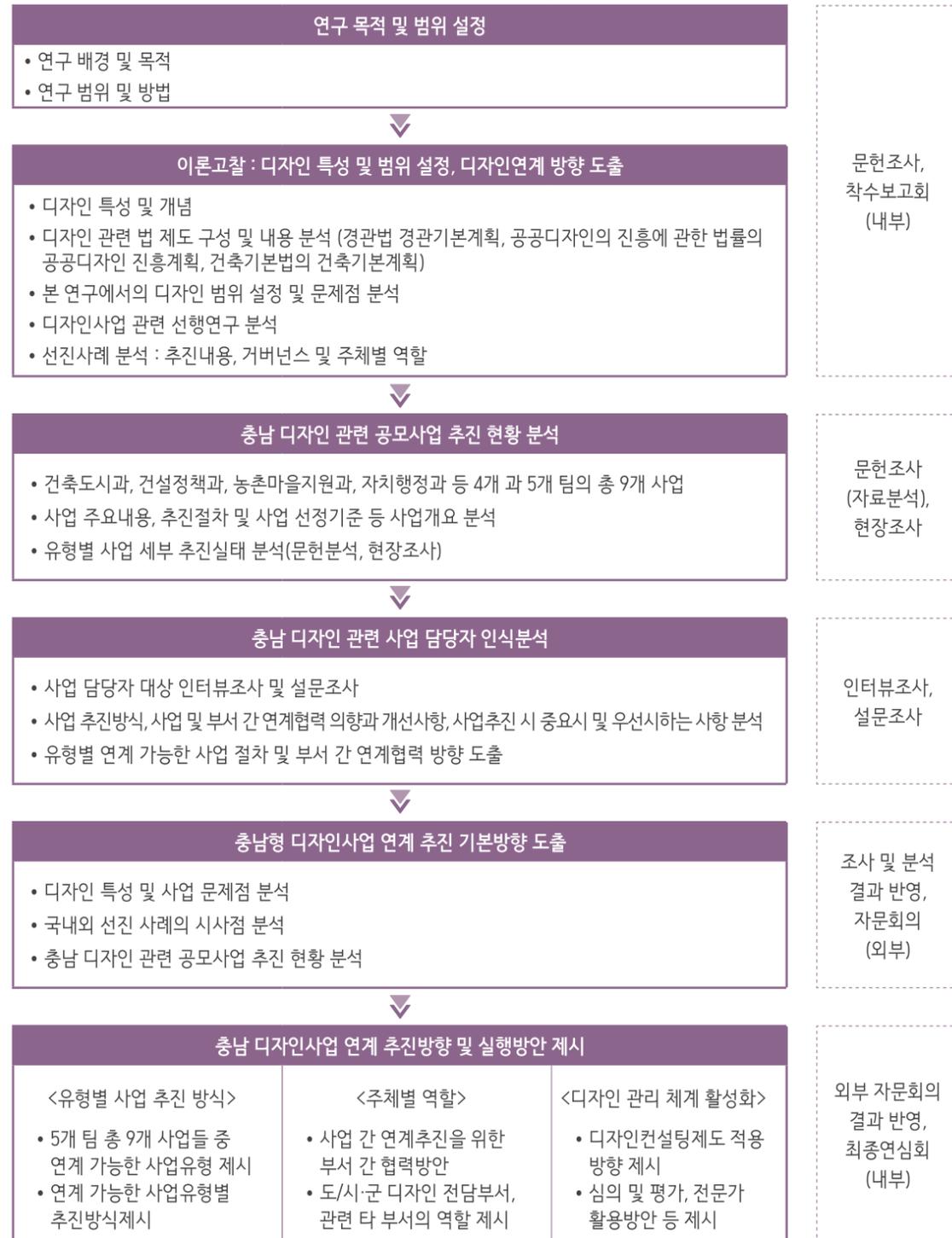
- 1단계 : 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자료수집 및 분석, 도 및 시·군 홈페이지)
 - 충남도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주요내용 및 목표,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예산 및 사업기간 등
- 2단계 : 사업특성 분석(자료분석, 현장조사)
 - 사업 세부 추진내용 및 현황
 - 사업유형별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

4) 충남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담당자 인식조사

- 사업 추진실태 및 부서 간 연계협력 의향
 - 사업유형별 사업 담당자 인터뷰조사 및 설문조사
 - 사업의 추진방식, 사업 및 부서 간 연계협력 의향, 사업추진 시 중요시 및 우선시 하는 사항

5) 충남형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제시

- 1단계 : 디자인 공모사업 연계추진 기본방향 설정(외부 자문회의)
 -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특성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선진 사례의 시사점 분석
 - 충남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추진 실태 분석
 - 충남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추진 사업 담당자 인식 분석
 - 자문회의를 통한 기본방향 검토 및 실행방안 도출
- 2단계 :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 연계 가능한 사업유형별 추진 방식 제시
 - 관련 부서 간 협력방안 및 주체별 역할 제시(도/시·군 디자인 전담부서, 관련 타 부서)



▲ [그림 1-1] 연구체계도

II.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1. 관련 법 분석

1.1 디자인 개념

최근 디자인을 통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디자인을 단순히 심미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그 영역 또한 더욱 광범위해져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환경 및 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적합하게 하기 위한 넓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현재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경관, 공공디자인, 공공공간, 공간환경 등 사업의 성격 또는 추진부서, 사업대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각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은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을 들 수 있다.¹⁾

우선 국토부에서는 「경관법」을 제정하여 경관을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경관, 시가지 경관에 대하여 관리 및 보존, 형성하도록 규정하며 시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요소들뿐만 역사 및 문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보존 및 관리, 이들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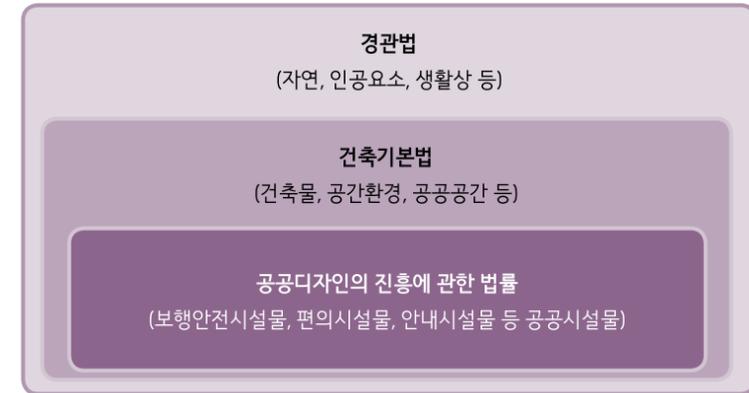
문체부에서는 2016년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디자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에 의해 조성 및 운영되는 공공시설물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편의시설물 및 안내시설물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공공시설물을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관이 유무형적 요소의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공공디자인은 보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시설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에서 제정한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물, 공간환경, 공공공간, 건축디자인, 건축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포함하는 주변 공간 및 경관, 그리고 공공공간까지 다루고 있다. 즉,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이 주변 공간 및 경관과 조화롭게 조성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은 포함하지 않기로 함

▼ [표 2-1] 디자인 관련법 상 주요개념

| 구분 | 개념 |
|-------------------------------|--|
| 경관법 (제2조 제1항) |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p>“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p> <p>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p> <p>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p> <p>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p> <p>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p> <p>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p> <p>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p> <p>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p> |
| 건축기본법 (제3조) | <p>-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p> <p>- “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p> <p>-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



▲ [그림 2-1] 관련법 상 디자인 범위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의 범위를 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규정, 「건축기본법」은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건축물,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주변 공간 및 경관과의 관계, 「경관법」에서는 두 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모두 포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역사, 문화, 생활습관 등 무형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서로 중복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준걸(2008)은 도시 및 건축, 경관 관련 법 제도의 유기적인 관계가 미약하며 중복되는 사항이 많음을 지적하며, 일관성을 가진 도시의 정체성 정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을 통합 및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영역 간 협업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디자인은 공공시설물부터 건축물, 공공공간, 자연 등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역사와 문화, 지역의 전통 및 관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각 영역 간 연계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은 한 전문영역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국토계획,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인테리어, 조경, 공공예술 등 다양한 전문영역이 각자 제 몫을 하면서 서로 오픈하여 하나로 통합되어 디자인될 때 고도로 성숙된 도시로 창조될 것이다(이영한, 2010).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을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물, 건축물, 공간,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는 주변 자연과 경관, 문화 등 눈에 보이는 것과 이들을 만들어내는 행위 또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2 구성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디자인과 관련된 법인 「경관법」, 「건축기본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경관법」은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경관위원회, 보칙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계획에 의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 및 협의체, 예산확보 근거를 규정해놓고 있다. 특히 경관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관협정을 제도로서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 경관관리 유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경관 심의와 이들을 심의할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지역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디자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에서 역시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관법」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토부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역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사업 지원 및 민간전문가 참여 촉진,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디자인 기준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자체에서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타 법과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써, 타 부처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건축 및 공공공간 디자인 관리 시스템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관부처인 문체부와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따르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자격기준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육성을 위해 법 소관부처인 문체부에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 및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를 규정하여 보다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즉 관련 법에서는 디자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심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자발적 관리, 민간전문가 및 전담부서의 역할 강화, 디자인 기준 설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축기본법」에서의 디자인 기준 설정을 위해 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규정하면서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2] 각 관련 법의 특징

| 구분 | 구성 | |
|------------------|--------------------|---|
| 경관법 | 제4장 경관협정 | 경관협정의 체결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 경관협정의 인가 / 경관협정의 변경 / 경관협정의 폐지 /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
| 건축기본법 |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민간전문가의 참여 / 설계공모의 시행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 공공디자인 용역 /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 제안서의 보상 / 공청회 / 추진협의체 / 전문가의 참여 /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
| |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

-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을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림 2-2] 「건축기본법」상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규정

2. 관련 연구 분석

2.1 선행연구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디자인 사업은 가로공간을 비롯한 상업가로, 주거지 등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주관부처 및 지자체에 따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명칭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명칭, 범위 및 대상 등 사업주관에 따라 다를 뿐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그동안 진행된 많은 디자인 사업 관련 연구는 주로 다양한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성과 및 문제점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제도 및 계획 수립, 다양한 주체들 간 거버넌스 및 주민참여, 조직 및 프로세스의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오준걸(2008)은 도시 및 건축과 관련하여 관련 분야들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부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재 관련 법 제도들 간 유기적 관계가 미약함을 지적하며 관련 법 제도의 통합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조준배(2009)는 공공건축을 대상으로 시설 간 연계이용 차단에 따른 효율성 저하 및 행정의 칸막이식 사업 추진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김상희 외(2013)의 연구에서도 상업가로의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간을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의 요구, 공간과 운영 프로그램과의 연계,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통합적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 간 연계 및 통합디자인을 위해 이여경 외(2014)는 미국의 정책과 제도 사례분석을 통해 관련 행정주체 간 협력에 의해 통합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와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관련 주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계획과 이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체들 간 거버넌스 및 주민참여 관련 연구들 중, 이상민 외(2008)는 총체적인 접근에서의 장기적인 통합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정 및 행정 주체들 간의 협의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 안수지 외(2011)는 국내외 디자인조직 현황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는 디자인 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디자인 영역을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환경, 생활 등 통합적 개념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권영상 외(2011)의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 프로그램 적용 및 이와 연계한 공간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통합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최강림(2013) 역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연계 및 통합디자인적 접근, 주민참여 및 다양한 주체의 거버넌스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업완료 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민참여 및 이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공간과 연계한 프로그램 계획, 다양한 분야 간 연계 및 통합디자인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 및 프로세스의 시스템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김연금 외(2010)는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디자인 정책을 시각적 관점이 아닌 문화와 삶의 질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접근, 통합디자인을 위한 추진기구 및 주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주민참여 커뮤니티에 기반한 디자인 형성이 중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안수지(2011)의 연구에서는 통합디자인은 종합적인 디자인 관리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며, 디자인지원 및 협의, 마인드 함양교육의 통합디자인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디자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자인 전담부서의 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 [표 2-3] 사업의 연계 및 통합추진 관련 선행연구

| 구분 | 연구자 | 주요 내용 | 연구 결과 |
|---------|--------------|--|--|
| 제도 및 계획 | 오준걸 (2008) | 서울시 도시 및 건축 관련 제도와 계획 분석을 통해 도시의 공공공간을 효율적 및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모색 | - 관련 법 제도들 간 유기적 관계가 미약하며 중복되는 사항이 많음 - 관련 법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지속적인 개정과 각 부분의 전문가 참여 요구 - 관련 분야들의 이해와 협업을 통해 도시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존중하여 정체성을 부여할 필요 |
| | 조준배 (2009) | 관리주체별로 공급 및 관리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공급과 이용에 관한 결정의 통합·조정할 수 있는 계획 체계 제시 | - 지금까지의 공공건축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 시설 간 연계이용 차단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 지자체 내 칸막이식 행정에 의한 문제 발생 - 도시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개별 공공건축물들의 이용계획을 협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획 체계 필요 - 통합계획 대상범위 선정과 목표에 따른 전략계획 수립, 중요 거점 프로젝트 선정과 실행전략 수립을 통해 관련 사업과의 연계, 거점 중에서도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 추진계획 작성 등의 프로세스 필요 |
| | 김상희 외 (2013) | 공공가로의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제시 | - 지역성 요소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 제시 필요 -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민 및 건물주와 상인 등 공간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요구 반영 필요 - 가로공간 구성요소에 대한 통합적 계획 필요 - 공간계획과 함께 상세한 문화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프로그램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공간을 활성화시킬 필요 - 사업대상 가로공간과 주변 영역의 연계성은 물론 지역 내 타 지역 또는 공간, 타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고려 필요 |

| 구분 | 연구자 | 주요 내용 | 연구 결과 |
|-----------|--------------|--|--|
| 제도 및 계획 | 이여경 외 (2014) | 미국의 'complete streets' 정책과 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로공간 관리체계 시사점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경우 가로를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시 정책에 근거해 통합적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용하거나 또는 도시 기본 계획 및 관련 법령의 기존 제도와 연계시켜 디자인가이드 라인을 적용 - 통합가로 디자인가이드라인의 관리기준을 관련주체 간 협력에 의해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주체별로 관리함으로써 일관된 디자인 품질 확보와 시설물 간 조화 유지 - 가로유형 및 가로영역별 관리원칙에 따라 특성을 반영한 가로공간 관리체계 제시 - 우리나라의 통합적 가로공간 관리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 | 이상민 외 (2008) | 도시공공공간(공원, 녹지, 도로, 하천, 유수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방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대상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는 물리적 대상의 통합 필요 - 공공공간 계획과정을 통합적으로 조정 및 이를 위한 관련 행정 주체들 간의 협의 체계 구축 필요 - 공공공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총체적인 접근,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행정 주체들간의 통합이 중요 |
| 거버넌스 및 주체 | 안수지 외 (2011) | 국내외 디자인조직 현황분석을 통한 디자인 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을 통한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정체성 정립을 위해 디자인 조직 및 담당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도시경관분야뿐만 아니라 생활, 커뮤니티, 생산시설, 환경 등 통합적 개념으로 영역 확장 필요 |
| | 권영상 외 (2011) |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디자인 방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 대상 다양한 조사를 통해 공간프로그램 도입하는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식 적용 - 공간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공간계획으로 장소성 부여 - 공간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 토목, 조경, 건축을 융복합 디자인하는 통합디자인 제시 - 각 부서별 전문영역에 따라 별도 발주방식이 아닌 다양한 주민요 구기능을 반영 및 복합화하여 공간계획에 반영 |

| 구분 | 연구자 | 주요 내용 | 연구 결과 |
|-----|--------------|---|---|
| 시스템 | 최강림 (2013) |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한 구도심 상업가로 도시재생 방법론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인 사업들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가로 단위의 통합적 디자인에 대한 접근, 그리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체계 필요 - 공공, 민간, 주민 및 상인, 전문가로 구성된 협치 체계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주체 및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구 필요 -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콘텐츠 개발, 이를 위한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 |
| | 김연금 외 (2010) | 경기도의 통합적 및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의 사례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사례는 물리적이고 시각적 측면에서 벗어나 문화, 삶의 질을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 추구 -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통합디자인을 위해 건축과 문화정책의 통합, 정부 부처간의 협력적 접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건축정책'을 추진 - 통합디자인 지원 추진기구와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세스의 체계적 시스템, 정부와 민간 등 주체의 명확한 역할에 의해 추진 - 주민참여 방안 확대를 통해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색과 커뮤니티에 기반한 디자인 형성 토대 마련 |
| | 안수지 (2011) | 기초자치단체에 필요한 전략적인 도구로서의 디자인, 디자인경영 개념을 도입한 통합디자인 개념 제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디자인은 소통의 역할, 기획과 통제 등 전체 프로세스 내에서 디자인 관리하는 디자인경영 도구의 역할 - 통합디자인시스템을 통한 디자인지원 및 협의, 마인드 함양교육의 필요성 제시 - 통합디자인 로드맵으로 디자인마인드, 디자인시스템, 디자인 프로세스가 조직내에 통합되는 구조 제시 |
| | 안수지 외 (2011) | 다양한 디자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디자인전담부서의 유형 제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담당을 단체장 직속부서에 배치하거나 기획조정실에 두는 형태 제시 - 디자인 담당부서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되 디자인기획 및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통합디자인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역할 담당 |

2.2 시사점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 건축, 공간 등 각 관련 부처 및 부서의 행정 칸막이식으로 추진되는 디자인 관련 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련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관련 주체들 간 거버넌스, 다양한 분야 간 연계를 바탕으로 통합적 공간계획 수립 및 이와 연계한 프로그램 계획,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와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즉, 영역 및 부서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 주민참여와 주체들 간 협력,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및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2-4] 시사점

| 구분 | 시사점 |
|-----------------|--|
| 제도 및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 제도의 통합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참여 - 통합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관련 계획 간 연계성 부여 및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 참여 - 통합적 공간계획 및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 계획 필요 - 다양한 분야 간 연계 및 통합디자인 |
| 거버넌스 및 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계획의 조정 및 행정 주체들 간 협의체계 구축 - 디자인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 중요 - 디자인 영역을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환경, 생활 등 통합적 개념으로 확장 - 주민참여 및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 거버넌스 |
| 조직 및 프로세스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시각적 관점이 아닌 문화와 삶의 질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 필요 - 통합디자인을 위한 추진기구 및 주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 - 주민참여 커뮤니티에 기반한 디자인 형성 프로세스 - 디자인 지원 및 협의, 마인드 함양 교육의 통합디자인시스템 필요 |

3.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연계

3.1 디자인 방향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은 앞에서 언급했던 디자인 관련 법 소관부처인 문체부 및 국토부, 그리고 농식품부, 행안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유사한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부처 간 연계와 통합 추진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상민 외(2008)는 공공공간과 관련된 개선사업들은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단시일 내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위주로 추진되거나 비슷한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칸막이식 행정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염철호 외(2013)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요구되나,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주민협의회를 구성, 또는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하더라도 일회성의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완료 이후 주민협의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드문 실정이라며 사후관리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사업추진 방식과 관리주체의 역량 미흡에 따른 사후관리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축 및 조경, 시각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 간 연계를 전제로 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사업주체(공무원)·전문가·주민·민간기업 및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과 의사소통체계, 시각적인 결과물뿐만 아니라 장소성에 초점을 두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디자인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각 영역 간 연계를 통해 통합된 디자인을 추구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관련 전문가는 물론 관련 행정부서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계획의 중복성이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활동을 유발하여 유지관리가 쉬워야 한다(이상민 외, 2008). 미국의 경우 통합디자인을 위해 관련 각 부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관리부서별로 관련 사업 시행 또는 허가 발행 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진행하도록 하여 일관된 디자인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이여경 외, 2014).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사후관리 개선 및 통합계획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권영상 외(2013)는 광양시 구도심 폐선부지공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방식의 새로운 방안으로서 주민들이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도입 및 통합디자인 방안을 적용하였다. 어른, 청소년, 어린이의 다양한 대상의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다양한 관련 분야 간 융복합하여 추진하는 통합디자인 프로세스 적용으로 주민에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 장소성을 가진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 개발 및 적용의 시도가 있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추진방식 역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2014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 및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주민참여와 주민역량을 중요시하면서 사후관리의 문제에 대해 조금씩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추진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부처 간 칸막이식 사업기획 개선을 위한 다부처 패키지 사업을 계획하는 등²⁾ 사업 간 연계와 사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시도가 있다. 국토부 역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광, 문화, 디자인의 분야 간 융합, 그리고 관광공사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계획학회, 토지주택연구원 등 관련 분야 주체의 연계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 [표 2-5]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

| 구분 | 내용 |
|--------------|---|
| 이상민 (2008) | - 관이나 민 또는 건축가, 조경가, 시각디자이너, 도시설계가, 환경조각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적 작업체계가 필요 - 현재 공간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각적인 결과물보다 그 장소의 체험적, 장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시 - 공간환경을 만드는 전 과정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 |
| 이상민 외 (2008) | - 다양한 행위를 담고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 및 각기 다른 주체들에 의해 조성 및 관리되는 공공공간은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 |
| 신예철 외 (2010) | - 큰 틀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영역들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 -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조정이 필요 |
| 최강림 (2013) | - 공적영역·사적영역 및 공공공간·공공매체·공공시설물이 함께 이루어진 통합디자인의 구현 필요 - 주민참여, 공공·민간·전문가 협력의 협치 체계의 구축 - 계획·시공과 연계된 사후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 송영민 (2014) | - 도시디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법규 및 시행주체, 계획 분야별 논의에서의 상호 협의체계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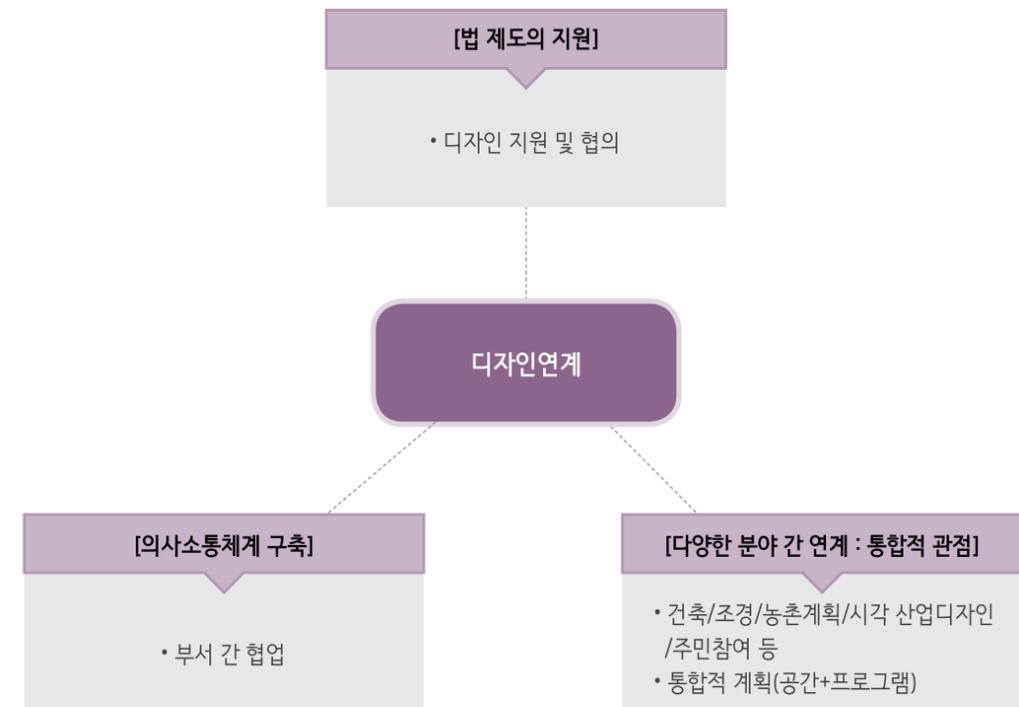
2)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마중물로 다분야를 연계한 통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역량강화와 계획협약을 통해 실행력 제고(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촌 활성화의 길, 신활력 플러스에서 찾는다」자료집 중)

3.2 디자인 연계의 개념 정의

본 연구는 충청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들 중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들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관련 선행연구 및 전문가가 언급한 바와 같이,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법 제도 및 계획의 통합, 다양한 영역 및 주체들 간 연계, 주민참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우선 부서 간 협력을 통한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 간 연계추진 방안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즉,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 간 연계 및 디자인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부서 간 협력방안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범위 및 방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연계를 충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의 지원과 협의를 위한 법 제도적 지원,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를 위한 부서 간 의사소통체계 구축, 다양한 분야 간 연계를 위한 통합적 관점이라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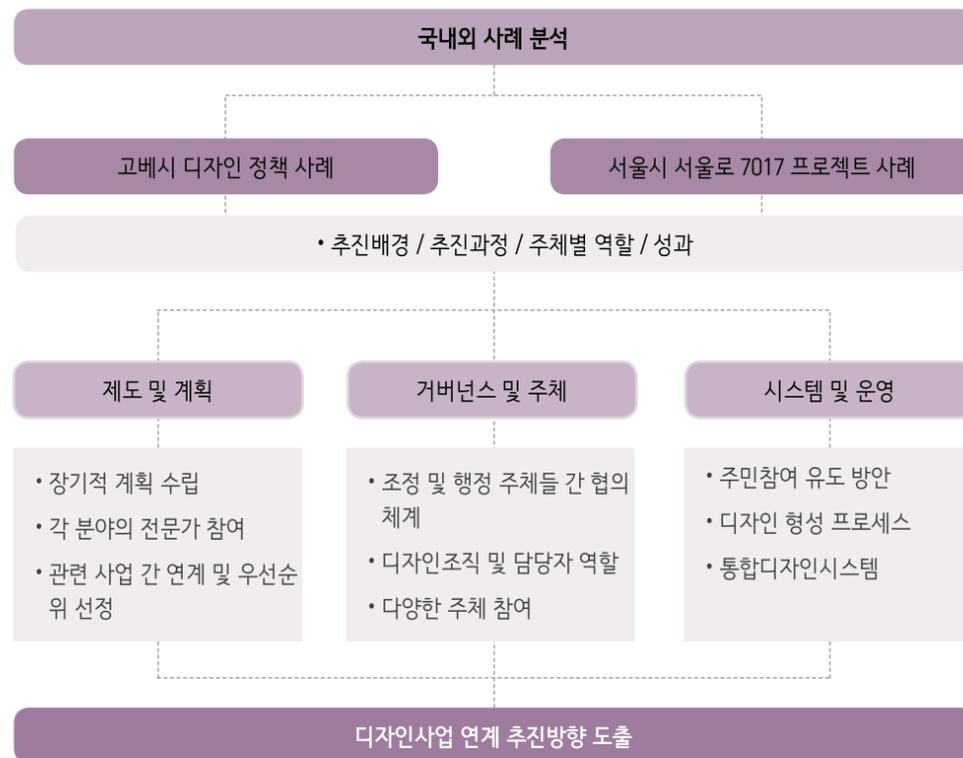
▲ [그림 2-3] 디자인연계 개념

4. 선진사례 분석

4.1 분석틀

2장에서 선행연구의 시사점으로서 디자인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 및 계획, 거버넌스 및 주체, 시스템 및 운영의 3가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이에, 우선 국내외 선진사례를 이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에서 범위로 한정된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충남 디자인사업 연계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반영하고자 한다.

선진사례는 “Design City KOBE”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던 일본 고베시, 그리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도시재생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서울로 7017”을 추진한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 [그림 2-4] 분석 틀

4.2 국외 사례 : 일본 고베시³⁾

1) 추진배경 및 목적

고베시는 효고현[兵庫縣]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를 이루는 국제무역도시이자 일본 제3위의 무역항으로, 1995년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지진이 발생한 후 2년 만에 항만, 도로, 철도 등의 공익 시설을 모두 재건했다. 그러나 도시고유의 문화가 사라졌고 일본 전반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고베시의 재정이 고갈되었다. 이에 고베시는 시청과 시의회뿐 아니라 전 고베시민이 참여하여 통합적으로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노력하여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선 창의적인 인재를 모으고 이들이 모여 새로운 경제·산업 모델을 창출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이는 일본 전역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생기를 잃은 도시 전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고베시의 매력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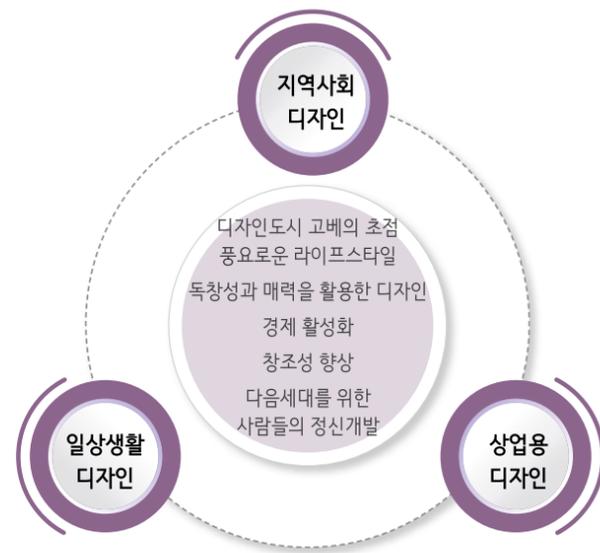
단순히 외관을 장식하는 수준의 디자인이 아닌 경관,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여 “Design City KOBE”의 다차원적 수준의 적용이 시도되었다.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베 고유의 것들”을 여러 선구적인 접근법을 통해 “선도지역”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려는 시도였다. 도시의 특성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디자인적 관점에서 고베시 고유의 자산들을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2-5] 고베시의 위치

3) 안수지 (주)아라디자인&ENG 디자인연구소 소장의 원고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Design City KOBE”추진을 위해 [그림 2-6]과 같이 5가지 목표와 3개의 실천단계를 설정하였다. 5가지 목표는 ‘라이프스타일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 ‘고베시의 독창성과 매력을 활용한 디자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디자인’, ‘창조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다음세대를 위한 사람들의 정신을 계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3개의 실천단계는 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활력과 즐거움이 넘치고 시민들이 안락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지역사회 디자인’, 라이프스타일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일상생활 디자인’, 디자인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건강한 산업 도시를 목표로 하는 ‘상업용 디자인’으로 설정하여 H/W와 S/W를 함께 중요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림 2-6] “디자인 도시 고베”의 초점

2)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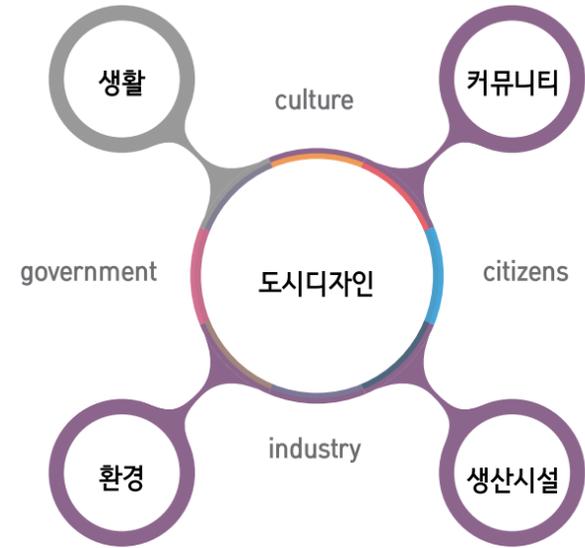
고베시는 일본에서 최초로 경관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로서 마을만들기조례까지 제정하여 도시의 경관과 주민참여를 위해 일본에서도 선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한 도시이다. 이러한 기반은 추후 지진피해부흥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검증되기도 했다. 2000년에는 도시계획단계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화, 정보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경제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기능의 고도화 및 주거환경의 향상을 꾀하고 이러한 이점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도시만들기를 추진하였다. 일본에서도 선도적

으로 도시디자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고베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개성있는 도시공간 형성, 중심역 주변을 시민 및 방문객 모두 쾌적하고 안심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와 함께 휴식과 안락함이 있는 도시미관 창출을 기본으로 도시디자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2007년 디자인부서를 기획조정국에 배치하여 시의 다양한 정책사안은 물론 전략적 및 통합적으로 디자인 분야를 다루도록 했다. 환경 및 산업과 연계된 생산시설, 시민의 삶, 시민과 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를 모두 포함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체계화 된 디자인 개념을 보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참여형 지역사회문제 해결 형태로 도시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해 2012년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센터 고베(KIITO)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이 전문기관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 [표 2-6] 추진과정

| 년도 | 주요내용 |
|-----------|--|
| 1978년 | - 「고베시 도시경관 조례」를 제정 : 일본 최초로 지자체에서 제정 |
| 1981년 |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조례」를 제정 : 지진피해 부흥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마을만들기의 유효성이 많은 부분에서 검증 |
| 1992년 | - 하버랜드 완성을 통한 거점개발로 거점지구 형성 |
| 2000년 | - “앞으로의 고베 도시만들기”를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협력체계 구축 |
| 2002년 | - “고베 의료산업 도시구상”을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결정 - 고베 산노미야역 남쪽지구, 고베 포토아일랜드 서쪽지구가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 |
| 2007년 | - 기획조정국 산하에 디자인도시추진실을 설치하여 시장 직속의 디자인도시 추진체계 구축 |
| 2008년 | - 유네스코 디자인도시로 선정 |
| 2012년~ 현재 | - 디자인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진흥하는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센터 고베(KIITO) 설립, 고베 디자인 전담기구로서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 - 기획조정국 산하 디자인도시추진실의 규모 축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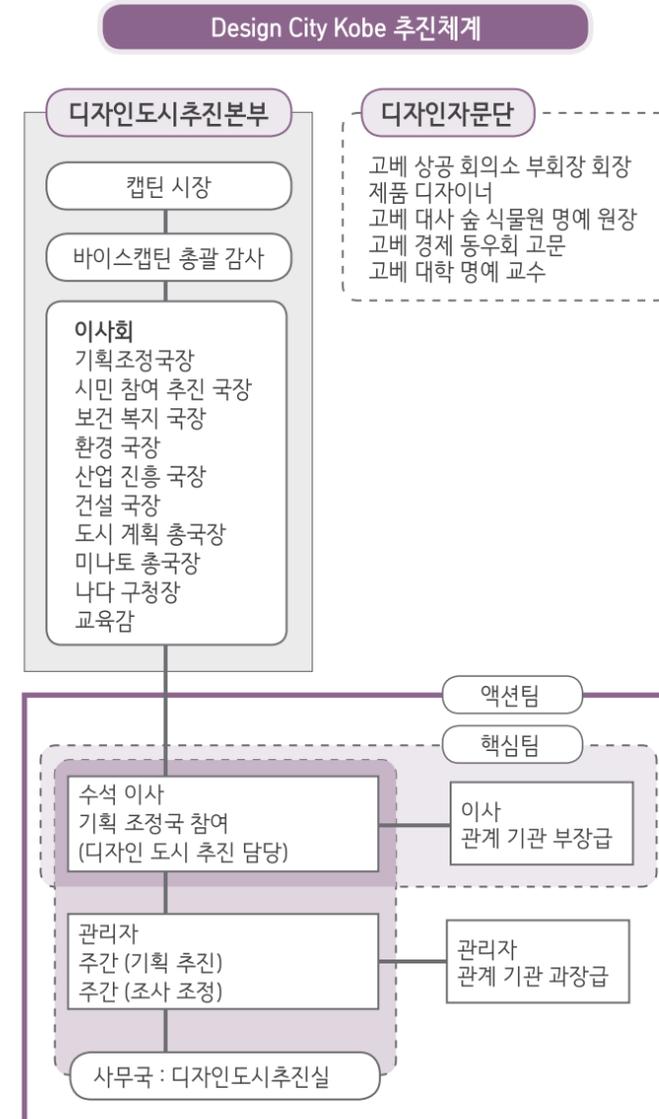
▲ [그림 2-7] 고베시 디자인부서 업무영역 개념도

3) 주체별 역할

① 디자인조직 및 부서별 역할

2006년 도시디자인의 개념을 시 차원에서 선포하고 2007년 기획조정국 산하에 설치된 디자인도시 추진실은 시장 직속 기관으로서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이런 노력으로 2008년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로 선정되었다.

2006년 당시 추진체계는 디자인도시추진본부와 액션팀, 디자인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디자인도시추진본부는 고베시장을 중심으로 기획조정국장, 시민참여추진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산업진흥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총국장, 미나토총국장, 나다구청장, 교육감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었다. 즉 모든 분야의 책임자로 구성된 조직이 디자인 이사회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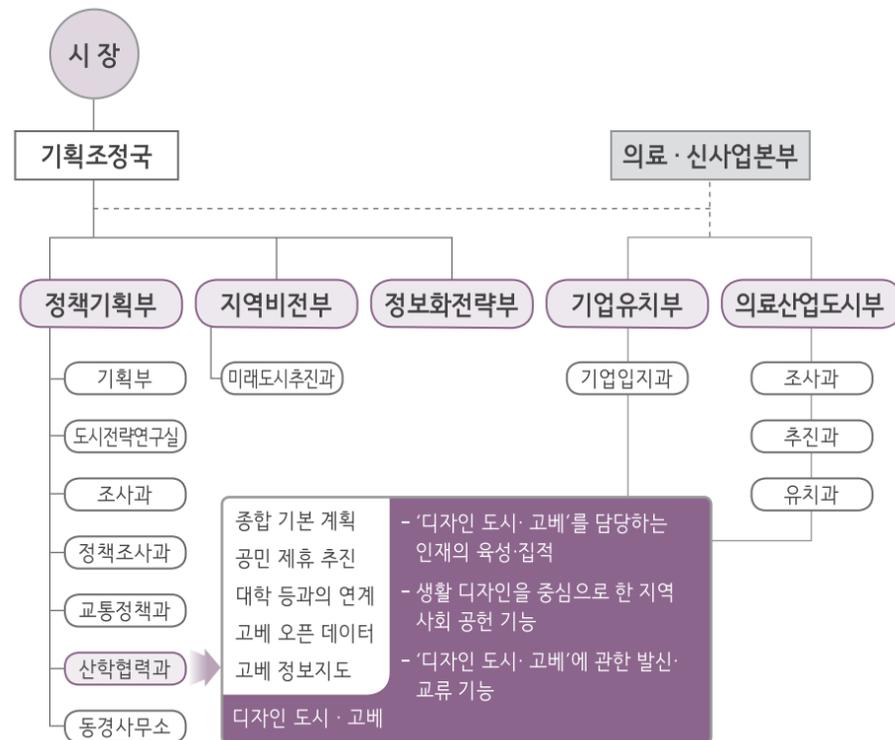


▲ [그림 2-8] "Design City KOBE" 추진체계

또한 액션팀은 디자인도시추진실을 사무국으로 기획조정국 디자인 도시 추진담당과 핵심사안에 따라 관계기관의 부장급이 이사로 참여하여 디자이너,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 자문단이 자문역할을 맡아 전체적인 고베시 디자인사업의 핵심사안을 추진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 이는 “Design City KOBE”추진에 있어서 한 부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도시행정 전반에 걸친 디자인 관련 이슈를 협치를 통해 연계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Design City KOBE”를 추진하는 시청 내 조직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관련 업무와 사업은 유지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센터 고베(KIITO)에 이관되어 실행되고 있다.

현재 디자인 담당부서는 기획조정국내 정책기획부 산하협력과내에서 시의 전략적인 핵심사안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획조정국이 기획 입안, 중요 시책의 조정, 창조 도시 전략 “Design City KOBE”추진, 의료산업도시 구상 등 전 기관적인 프로젝트 추진, 각종 통계, 정보화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것은 디자인도시 전략 추진에 있어서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어 목표를 향해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 및 행정 전반에서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고베시 정체성 확립과 “Design City KOBE”를 실현시켜 가고 있다.



▲ [그림 2-9] 디자인 전담부서 조직도와 업무현황

②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센터 고베(KIITO)

KIITO는 2012년에 설립된 산하기관이지만 시청 내 디자인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보완적, 협력적 체제를 구축하며 고베시의 디자인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다양한 디자인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즉, 디자인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진흥하는 전문기관으로 고베 생사 검사소를 개조한 창조와 교류의 거점으로 2012년 8월에 개설되었다.

“Design City KOBE”를 추진하기 위한 자체 기획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민,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와 고령자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프로그램, 방재, 제조, 교육, 예술문화 등 사회전반의 이슈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마을의 문제를 교육과 연결하여 어린이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미래와 연결시켜 문제해결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KIITO는 행정에서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 밀착형 실행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로 고베 디자인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2-10] KIITO의 자체 기획사업

•“디자인 도시 고베”창조 회의

도시, 생활, 만들기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디자인을 기본 방침으로 하는 <디자인 도시·고베>의 추진과 관련하여 고베시가 실시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 그리고 향후의 방침에 대해 디자인의 관점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초빙하여 2014년도부터 개최

•어린이 SOZO 프로젝트

마을의 폐기물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상상(창조와 상상)의 힘을 키우는 워크숍 개최

•잡지 디자인 잡담회

디자인전문가를 고베에 초청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의 에피소드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이벤트

•CROSS

디자인을 활용한 생산기업이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과 크리에이터가 이어지는 계기 만들기를 진행, 토크 이벤트를 중심으로 미니워크숍 개최

•디자인 코랴 LAB KOBE

디자인(=전략)의 관점에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제품과 브랜드 컨셉, 구체적인 상품개발 등 제품개발 프로그램을 실시

•마을안내 사인 검토 프로젝트

“안내사인 공통시방서”를 재검토하여 디자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사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설계를 실시

•청사공간 재검토 프로젝트

<디자인 도시·고베>에 어울리는 시청 공간의 검토

•issue + design

시민·사업자·행정이 협업하여 생활과 밀접한 과제(방재, 의료, 환경, 식품 등)에 대해 “디자인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공감의 힘”이라는 개념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표로 하는 소셜디자인프로젝트

•고베 그래픽 디자인 공모전

젊은 크리에이터의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래픽디자인 공모전 개최

•유네스코 창조 도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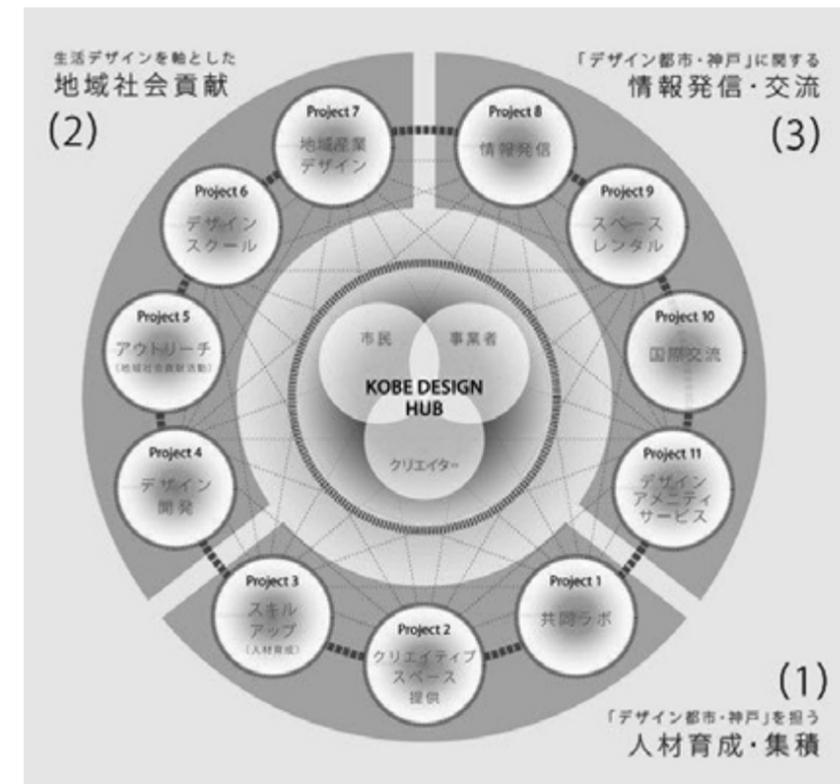
유네스코 창조도시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문화의 상호이해를 목표로 유네스코(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가 문화산업의 강화, 도시의 활성화를 목표로 세계 “창조 도시”의 연계를 통한 상호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교류 사업 실시

•디자인의 날 기념행사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창조 도시 네트워크의 <디자인 도시>로 선정된 날(2008년 10월 16일)을 “KOBE 디자인의 날”로 지정하고 시민이 디자인을 친근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③ 고베 디자인 허브(KOBE DESIGN HUB)

고베 디자인 허브는 KIITO와 시민 및 사업자가 “Design City KOBE”를 담당할 ‘인재육성·집적’, “Design City KOBE”를 둘러싼 ‘지역사회 공헌’, “Design City KOBE”에 관한 ‘정보 발신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이다.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의 다양한 측면에서 디자인 살리기 “+ DESIGN”의 선순환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로서 고베시 디자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림 2-11] 디자인허브의 “Design City KOBE”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4) 성과

지자체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대중의 주목을 끌기 쉬운 디자인 정책은 그 높낮이에 현저히 차이가 난다. 고베시의 경우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서 꾸준히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해 왔으며, 2006년 “Design City KOBE”정책을 추진할 때 행정-사업자-시민이 협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2008년 유네스코 디자인도시로 선정되기까지 지자체의 핵심조직에 추진부서가 설치되어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현재 그러한 성과로 도시의 이미지는 대지진의 폐허를 극복함은 물론 개성있고 새로운 문화를 내포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고베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디자인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 역시 그 동안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KIITO는 고베시와 협력적으로 다양한 디자인 사업과 디자인 문화 확산, 그리고 산업에 디자인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을 통해 도시는 물론 도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문화속에서 시민의 거주권이 향상되게 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 정책을 통해 창의적인 문화가 확산되었고, 전문가와 행정, 그리고 시민이 함께 방재 및 안전 부분에서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한 성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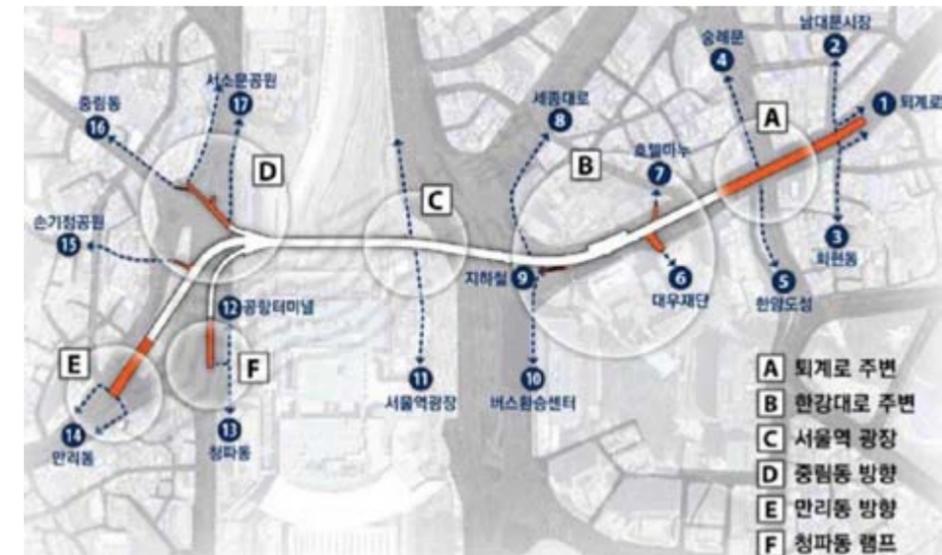
정부의 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시민의 요구에 따라 지자체 정책도 변화하여, 고베시의 경우에도 의료 관련 신산업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우며 기획조정국 핵심부서를 의료 신사업부로 두고 있다. 물론 기획조정국 내에서 디자인부서가 각 부서 정책을 총괄하며, KIITO를 설립하여 정책 실행 전문기관에 역할의 비중을 두고 있다. 디자인이 시각적인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닌 기획과 전략, 정책수립 단계에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발견과 해결하는 프로세스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4.3 국내 사례 : 서울로 7017사업 4)

1) 추진배경 및 목적

서울역 고가도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교통난 해결을 위해 서울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계되어 1970년에 준공된 서울의 상징적 구조물이었다. 1990년대 말부터 서울역 고가도로의 안전성 문제는 매년 제기되었으며, 서울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을 통해 매년 보수공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2006년 고가도로의 바닥판이 떨어져나가는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차량운행을 전면 통제하고 8년간 철거수순을 밟게 되었다. 철거가 논의되던 서울역 고가는 2014년 박원순 시장의 재선으로 노후도로의 안전성 문제가 하중 때문이라면 자동차도로에서 사람이 걷는 도로로의 전환을 제안하게 된다. 이후 고가도로에 대한 논의는 철거에서 재생으로 바뀌게 되고 민선 6기 공약으로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를 제시하게 되었다.

2014년 9월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방문해서 서울역 고가를 사람중심의 녹색 시민 보행공간으로 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고가도로 철거문제로 주변 상권과 붕괴공장 등의 이권이 맞물려 여러 논란과 민원이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전면철거가 아닌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서울역 일대를 통합적으로 재생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성화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으로 2015년 1월 서울역 고가를 재생하는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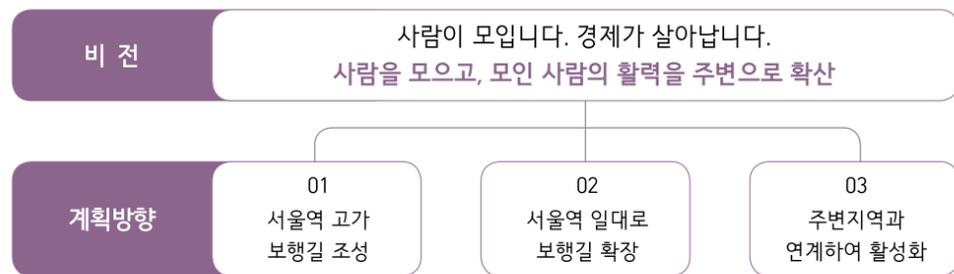
▲ [그림 2-12] 서울로 7017의 17개 보행길 프로젝트

4) 안수지 (주)아라디자인&ENG 디자인연구소 소장의 원고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2) 추진과정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를 서울역 일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개발과 재생의 관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1단계로 서울역 고가 보행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총 206회 다양한 주체들 간 소통, 34회의 회의를 거쳐 “서울역 7017 프로젝트”기본설계안을 확정하였으며, 17개 보행길이 이어지도록 계단, 브릿지, 엘리베이터 등으로 7개 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보행공간이 조성되었다. 카페와 도서관 등 20여개 편의시설, 135개 벤치, 전망대 및 투명바닥 등을 갖춘 공간이 만들어졌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서울역 일대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그림 2-13]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비전 및 계획방향

▼ [표 2-7]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주요내용

| 01 서울역 고가 보행길 조성 | 02 서울역 일대로 보행길 확장 | 0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활성화 |
|--|--|---|
| - 쉬고, 거닐며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 활력있고 매력적 공간 조성 | - 단절된 동서를 연결 - 주변지역으로 스며드는 보행길 조성하고, 서울역 일대로 확장 | - 남대문시장 등 주변지역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 |
| - 관광안내소 및 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 - 원형화분에 서울지역에 식생 가능한 다양한 수목 식재 | - 유동인구 증가로 명동, 남대문시장 등 주변상권 재도약 - 효창공원, 남산, 용산공원 등 주변 공원을 연결하여 녹지축 구축 | - 서울역 일대 재생을 통해 도심 활력을 주변지역으로 확산 - 1단계 : 청계천, 서울역광장 - 2단계 : 서울성곽 - 3단계 : DDP, 남산예정자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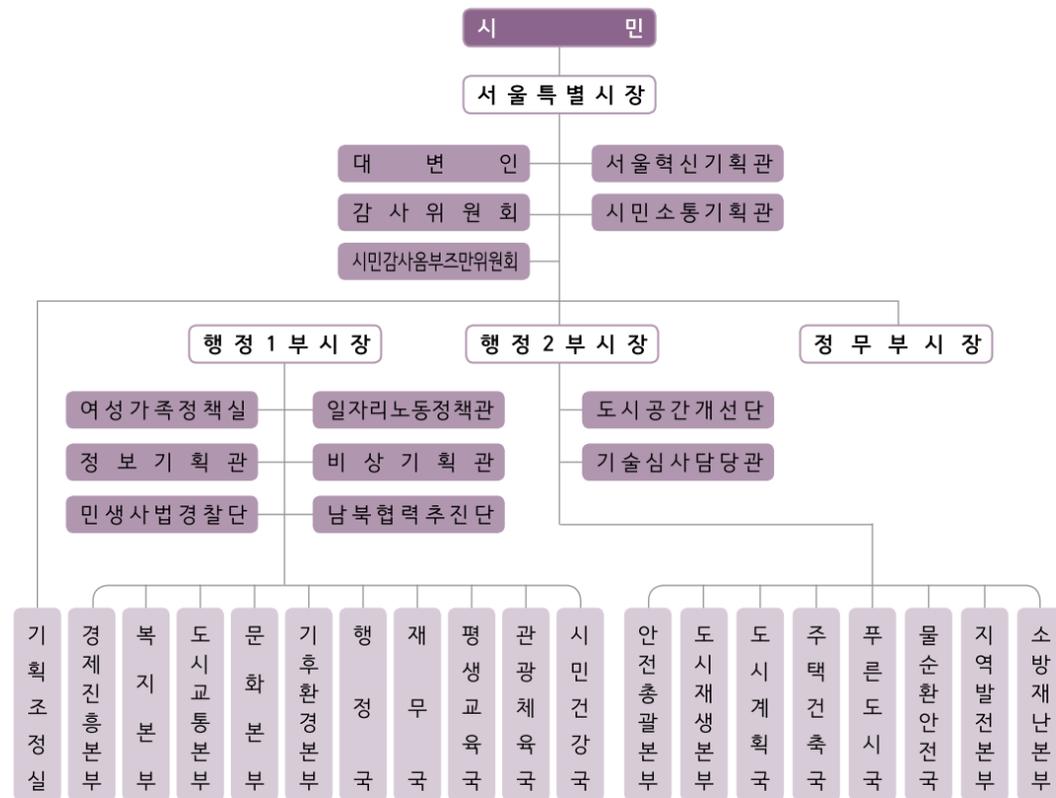
▼ [표 2-8] 추진과정

| 년도 | 주요내용 |
|------|--|
| 2006 | -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D 판정 |
| 2008 | -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연계 대체교량 설치 |
| 2009 | - 서울역 고가는 북부역세권과 연계 철거 추진 |
| 2014 | - 교량 안전성 문제제기(바닥판 콘크리트 탈락) - 서울역 고가차도 조기 철거 검토 - 서울역 고가 재활용 관련 구조안전성 검토(2회) - 민선 6기 공약으로 채택 - 민선 6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반영(시정계획자문단 운영) - 서울역 고가 재활용 관련 디자인·구조 전문가 합동회의(4회) - 서울역 고가 재활용 사업 효과분석(서울연구원) |
| 2015 | - 「서울역 7017 프로젝트」공식 발표 - 시민위원회 구성, 현장소통,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100여 차례의 소통 추진 - 제1회 서울역 7017 시민위원회 개최 - 현장 목소리 담은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 발표 - 제2회 서울역 7017 시민위원회 개최 및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위원회별 제1차 회의 개최(기획운영, 문화관광, 기술자문, 도시재생분야에서 사업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교통문제와 상권위축 문제 등에 대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사업기간 내 지속적으로 개최) |
| 2017 | - 4월 준공 |

3) 주체별 역할

① 담당 전담조직 및 역할 : 안전총괄본부

서울역 고가 철거사업은 당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산하 안전총괄본부의 업무였으며, 철거가 아닌 재생 관점에서의 접근이 논의되자, 안전총괄본부가 전담조직의 역할을 하였고 안전총괄본부를 중심으로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 [그림 2-14] 서울시 조직도

② 서울역 일대 종합계획추진단

이 조직은 관련 타 부서인 푸른도시국의 공원관리부서 및 도시재생본부 담당자들의 1단 2반 5개팀 (총 24명)으로 구성된 TF팀이며 이 사업 추진 및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발효하였다.



▲ [그림 2-15]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

① 교통대책 : 도로구조 개선, 노선버스 확대 등 남대문시장 주변 교통대책

② 용산구 :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조속 추진, 청파동 봉제산업 지원 등

③ 마포구 : 공덕동 봉제산업 지원,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검토 등

④ 중구 :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주거환경 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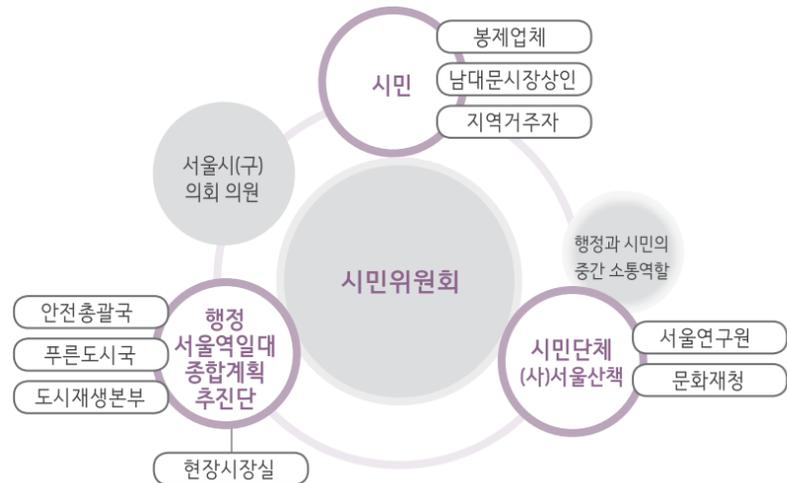
⑤ 남대문시장 : 향후 현장시장실을 재운영하여 주민의견 경청 예정

▲ [그림 2-16] 사업 추진 및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

③ 시민 및 시민단체

시민 의견수렴과 참여, 교육을 위해 발족된 시민조직인 “서울역 7017 시민위원회”는 시의원 5명, 공무원 5명, 남대문 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 전문가의 48명 등 총 58명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구성되었다. 시민위원회는 고가 재활용 방안과 서울역 일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까지 참여하였다.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서울산책이 주민교육과 워크숍 등 현장중심으로 진행하면서 행정과 시민 간 가교역할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다양한 포럼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 [그림 2-17] 서울로 7017 추진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조

④ 사업완료 후 담당 부서

사업완료 후 관련 업무는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의 서울로시설관리팀과 서울로사업운영팀으로 이관되었고,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축제 발굴 개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에서 수립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산하의 공공재생과에서 담당하며 서울역 재생계획과 재생사업, 재생지원 및 특화공간조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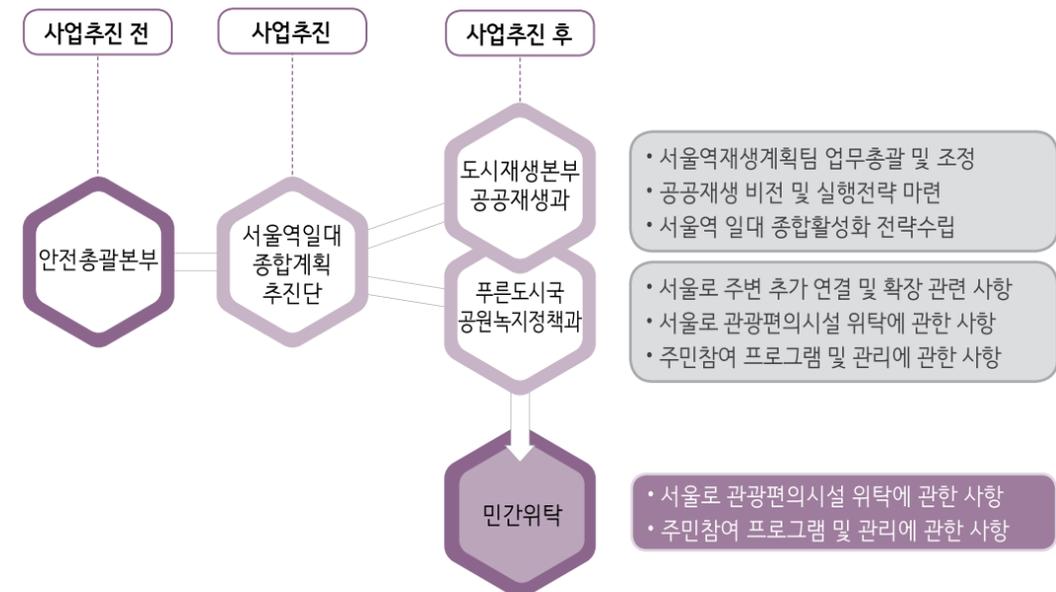
서울로 7017사업 완료와 개장 이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현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행정과의 사이에서 중간지원역할을 하고 있다.

4) 성과

사업을 추진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과 상인, 소규모 제조업 종사자를 참여시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결과를 목도하게 함으로써, 참여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정책사업 추진 후 운영을 관에서 민으로 이관(2019년 위탁업체 선정 예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시민 생활에 밀착될 수 있는 공간 운영으로의 도전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 고가와 그 주변까지 연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와 시민의 삶의 역사의 보전으로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뉴욕 하이라인파크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으로 민간과 시민이 주도하여 계획한 사업이라기보다 단체장의 정책과 공약으로 채택 추진된 사업으로 하향식 추진방식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 그리고 주변 지역에 사라졌던 공동체 의식을 발굴하여 활동하게 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림 2-18] 서울로 7017 사업추진 과정별 참여주체

4.4 시사점

1) 계획 및 제도적 측면

고베시의 경우 대지진 발생 이후 도시의 복원을 위해 지역경제와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요시하면서 쾌적하고 개성있는 도시만들기의 “Design City KOBE”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최초로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만들기조례까지 제정하여 자연자원 보존은 물론 개성있고 안전한 공간만들기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기에 포괄적인 디자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면서 지역 고유의 자산들을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역시 서울역 일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재생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약 3년에 걸쳐 추진된 사례이다. 물론 단체장의 공약으로 채택된 하향식 사업이긴 하나, 노후된 고가 그 자체만 본 것이 아니라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부서는 물론 전문가와 주민 등의 참여,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분야 및 주체의 참여에 의해 정책 또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디자인을 좁은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닌 넓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거버넌스 및 주체 측면

고베시는 “Design City KOBE”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각 부서의 의사결정권자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의 부장급을 참여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디자인 관점에서 각 분야 간 연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한 디자인부서를 기획조정국에 배치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환경, 산업, 문화, 커뮤니티 등 모든 분야의 통합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물론 현재 행정조직 내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그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보다 시민과 밀접한 실행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담당부서는 여전히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다양한 분야 및 행정 전반에 있어서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 계획이 고가 철거로 안전총괄본부의 업무였으나 재생의 관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도시재생 및 공원관리 부서 담당자들과 TF팀을 구성하여 교통, 산업,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의 역할 등 행정(주무부서와 관련 타 부서)-시민(지역 주민 및 업체)-시민단체(전문가 포함)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가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사례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서, 단체장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부서 또는 주체(주민, 전문가 등)의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디자인 접근을 위해서는 이를 근거할 수 있는 제도 및 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정책 실행 기능 강화,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거점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주체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3) 시스템 및 운영 측면

고베시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지역 애착심 등 H/W와 S/W를 함께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정책 목표에서도 드러난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은 보다 시민과 밀착된 정책지원과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행정조직의 규모는 작아졌으나 각 분야의 디자인 관점에서 연계를 위한 역할은 유지하고, 주민은 물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디자인 정책을 실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이 조직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이 디자인 정책을 실행하면서 인재 육성과 디자인 정보 발신 기능 등 통합디자인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마련되어, 정책 및 제도_사람(다양한 주체)_공간이 유기적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로 디자인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추진 전과 추진 중, 완료 후의 각 단계마다 추진과정에 따라 및 운영 주체가 달라졌다. 이는 당초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타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TF팀을 구성하여 부서 간 협업 추진 체계가 구축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지금은 당초 주무부서가 아닌 도시재생과 공원관리 담당 부서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역 일대에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의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적용할 계획으로 시민의 생활에 밀착될 수 있는 운영으로의 시도를 하고 있다.

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과 달리 사업추진에 있어서 단일 부서 중심 추진이 아니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주민, 전문가, 기업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추진은 물론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완료 이후에도 행정 중심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 이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 조직 역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III.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추진 현황

충남에서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디자인 질 향상을 위해 충남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주무부서인 건축도시과뿐만 아니라 건설정책과, 농촌마을지원과 등에서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농촌마을지원과의 희망마을 선행사업과 자치행정과의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은 S/W위주의 주민역량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연계의 개념을 디자인 지원 및 협의의 법 제도 지원, 부서 간 협업을 위한 의사소통체계 구축, 건축/조경/농촌계획/시각 및 산업디자인/주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 간 연계라 정의하고 있다. 이에, 제시하고 있는 S/W사업 역시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사업으로서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사업에 포함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디자인 관점에서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업들 중, 공모사업 성격보다 민원 성격의 사업, 자료 요청에 불응한 사업⁵⁾을 제외하고 총 5개 팀에서 추진하는 9개 사업을 도출하였다. 이들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 내부자료 분석을 통해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디자인연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표 3-1] 충남 디자인연계 가능한 부서별 공모사업

| 부서 | 사업명 | 사업비 | |
|------------|----------|------------------|---------|
| 건축도시과(4) | 공공디자인 사업 | 10억원 | |
| | 공공디자인팀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 5억원 |
| | | 디자인 아카데미 | 6천만원 |
| | 주거복지T/F팀 |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 3억 6천만원 |
| 건설정책과(3) | | 원도심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 | 10억원 |
| | 도시계획팀 |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 | 6억원 |
| | |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 | 10억원 |
| 농촌마을지원과(1) | 마을가꾸기팀 | 희망마을 선행사업 | 10억원 |
| 자치행정과(1) | 자치분권팀 |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 6천만원 |

5) 사업 담당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 사업개요

1.1 건축도시과

1)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 공공디자인팀

공공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매년 5개소를 선정하여 도시지역에는 5억 5천만원, 농촌지역은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주로 공공공간 및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한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주요 H/W중심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매년 현지조사와 신청하는 해당 시·군 담당자의 사업계획 설명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며,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의 의지는 물론 행정지원 등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또한 지역 경관 및 주민참여 유지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 기여 정도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타 지역과의 차별성 및 지역 경관의 문제 해결 방안의 적정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사업 추진체계를 들 수 있다. 사업추진 협의회에 전문가 컨설팅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하여 사업의 일관성은 물론 지역경관에 부합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추진배경 | - 아름답고 안전한 도민의 생활공간 조성 - 지역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개성있는 지역경관 창출 |
| 추진계획 | - 개소 : 도시형 2개소, 농촌형 3개소 - 사업비 : 도시형(5억5천만원, 도/시·군 각 50%), 농촌형(3억원, 도/시·군 각 50%) - 사업기간 : 약 1년 6개월 - 내용 : 도시형(공공공간 및 시설물, 공공매체, 가로환경 디자인 정비), 농어촌(역사, 문화, 정서 등을 담은 지역마을 환경 개선) |
| 심사 | - 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가 중심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 방법 : 1차 심사(현지조사, 주민협의체 협의), 2차 심사(서류심사, 사업계획 설명) |

| 구분 | 주요내용 |
|------|--|
| 선정기준 | <현지심사> - 대상지 현황(30) : 사업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지역주민 호응도, 추진협업체 구성 등 <서류심사> ① 합목적성(15) : 사업 목표와 계획의 일치성/필요성, 사업 규모와 예산확보/집행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의 적정성, 디자인팀 구성 또는 디자인 전문인력 확보와 역할 분담 적정성 ② 창의성(20) :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 지역 경관의 문제 해결 방안의 적정성 ③ 조화성(5) : 주변지역 및 가로와의 조화성, 건축물 외관/특성과 조화성 ④ 지역성(5) : 지역 경관자원의 특성 분석과 반영 계획의 적정성, 주변과의 조화성 ⑤ 지속성(15) : 3농혁신/도시재생사업 등 정책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적정성,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교육, 의견수렴 등) ⑥ 공공성(10) : 지역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 기여도, 공공디자인 사업의 파급효과 |
| 특이사항 | 전문가 컨설팅 필수(사업추진 협의회에 전문가 참여 필수) 설계완료 전 충청남도 디자인 심의 사업계획서에 지역주민 참여방안,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작성 |

*자료 : 2018년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 내부자료

2)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 공공디자인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6년부터 공공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범죄예방을 환경설계에서 접근하는 CPTED가 확산이 되면서 충남지역에서도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공공디자인으로 개선하면서 지역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매년 4개소를 선정하여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공공공간 및 건축물, 학교주변 등 범죄에 노출된 곳에 안전시설 및 수단을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 특성상 경찰청이나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추진 및 주민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를 선정 기준에서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주 목적이 범죄예방이지만 지역경관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디자인사업 등과의 연계, 지역 커뮤니티 등 대상지 선정 시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업 또한 전문가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디자인 심의는 물론 공사 50% 단계에서 도 담당자가 사업 대상지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추진배경 | -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생활불안 요소를 CPTED와 공공디자인 접목하여 개선하고 동시에 지역경관을 향상 |
| 추진계획 | - 개소 : 4개소 - 사업비 : 10억원(도/시·군 각 50%) - 사업기간 : 약 1년 6개월 - 주요내용 : 공공공간(공원, 도로 등) 및 건축물, 학교주변 등 범죄로부터 노출된 생활공간에 대한 안전시설 및 수단 적용 - 대상지 : 인구 고령화로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구도심 우범지역 및 여성 상대 상습범죄 발생지역, 학교주변 등 |
| 심사 | - 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가 중심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 방법 : 1차 심사(현지조사 후 서면심사), 2차 심사(신청 시·군 사업계획 설명회) |
| 선정기준 | <현지심사> - 대상지 현황(30) : 사업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지역주민 호응도 및 기타 현지사항 <서류심사> ① 합목적성(20) : 사업 목표와 계획의 일치성/필요성, 사업 규모와 예산확보/집행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의 적정성,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 등) 협력(MOU) 방안, 대상지 유형별 범죄발생 현황 및 CPTED 계획의 적정성, 사업 기대 효과의 적정성 ② 창의성(20) :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청 등)사업과의 연계성 ③ 지역성(5) : 지역 경관자원의 특성 분석과 반영 계획의 적정성, 주변과의 조화성 ④ 지속성(15) : 도시재생사업, 공공디자인사업 등 정책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적정성,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죄예방교육, 의견수렴 등) ⑤ 공공성(10) : 지역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 기여도, 사업의 파급효과 |
| 특이사항 | - 사업추진 협의회에 전문가 참여 필수 - 경찰청, 교육청, 한국셉테드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추진 - 사업계획서에 경찰청, 교육청, 주민협의체 구성 등 역할 및 사업추진체계 작성 - 설계완료 전 충청남도 디자인 심의 - 공사 50% 단계에서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도) - 사업계획서에 지역주민 참여방안,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작성 |

*자료 : 2018년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 내부자료

3) 디자인 아카데미 : 공공디자인팀

디자인 아카데미 사업은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 주민, 공무원, 건축사, 충남도내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탐사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주민, 공무원, 건축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남도내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답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며, 매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당해 연도 충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의 주민 및 공무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아카데미 사업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탐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은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추진배경 | - 공공디자인의 중요성 및 주민들의 교육 요구 확대에 따라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건축사, 도내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 대상 교육 추진 - 교육을 통한 충남도민의 디자인 마인드 제고 및 확산으로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아름다운 환경 조성 |
| 추진계획 | - 회수 : 15회 내외(집합·출장교육, 탐사단 운영 등), 700~1,000여명 - 대상 : 당해 연도 충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지역 주민 및 공무원, 도/시·군 공무원, 건축사, 옥외 광고업 종사자, 도내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 등 - 주요내용 : 디자인 관련 이론 교육 및 사례, 공공디자인 사업지 탐사 및 개선방안 도출, 선진지 현장 견학 등 - 사업비 : 6천만원 - 사업기간 : 1년 |
| 심사 |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도내외 경관 및 디자인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심사방법 : 신청 단체에서 발표 후 심사 |
| 선정기준 | ① 교육프로그램 적정성(30) :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과제(주제) 선정 타당성, 운영방법 및 일정의 타당성,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② 예산배정 적정성(30) : 사업효과 대비 예산배정 적절성, 예산배정의 투명성 및 구체성 ③ 교육환경/수행인력(20) : 교육환경의 적절성, 추진인력의 전문성 및 활동경험 정도, 추진인력의 사업 이해도 ④ 교육운영 실적(20) : 관련 교육운영 실적, 디자인아카데미 사업목적의 부합성, 관련 교육운영 결과 산출물의 구체성 |
| 특이사항 | - 디자인 인식 함양을 위한 현장견학과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 |

*자료 : 2018년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 내부자료

4) 공동주택 공용시설 시설개선사업 : 주거복지T/F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은 주거복지T/F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개선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사업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놀이터,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및 보수, 펜스 설치, 도색 등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포함된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추진배경 | -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으로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 추진계획 | - 개소 : 3(2018년 기준) - 사업비 : 5억 2천만원(2018년 기준, 도/시·군 각 50%) - 사업기간 : 1년 - 주요내용 :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공용시설 개선으로서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놀이터, 펜스 설치, 도색, 전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 등 |
| 심사 | - |
| 선정기준 | -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 담당자가 사업내용 검토 후 지원 |
| 특이사항 | - 매년 지원 대상수 및 사업비가 상이(사업내용에 따라 지원) |

*자료 : 2018년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 내부자료

1.2 건설정책과

1) 원도심 스마트 쌈지주차장 : 도시계획팀

건설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 공모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쌈지주차장 3개소를 선정하여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생활이 불편한 원도심 지역에 폐가 또는 유희지 등을 활용하여 생활편의 향상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작지만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사업발굴 당시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사업방향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가 주 목적으로 이용 편의성은 물론 주변 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선정기준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서상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타 사업계획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추진배경 | -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쌈지주차장 조성 |
| 추진계획 | - 개소 : 3개소 내외(1년) - 대상지 : 인구밀집 도심지로서 주차장이 없어 주거생활이 불편한 원도심 지역에 폐가, 유희지 등 활용, 주차난 해소와 생활편의 및 미관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 사업비 : 20억원(도/시·군 각 50%) |
| 심사 | - 선정위원회 구성 : 내부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현장실사 |
| 선정기준 | - 기본방향 : 원도심 주차난 해소, 미관 및 이용편의성, 시·군 사업 추진의지 등 - 세부기준 ① 현황 및 사업필요성(15) : 지역 낙후도, 주변지역 차량 혼잡정도 등 ② 사업계획의 적정성(30) : 주차시설계획의 적절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및 조화, 투자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③ 실현가능성(25) : 토지확보 가능성, 재원 투자계획 등 ④ 관리운영(10) : 시설물 및 안전(범죄예방계획 등) 관리, 지속가능 운영 및 관리 계획 ⑤ 사업효과(20) : 부족한 주차난 해소 여부, 미관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 반응 및 호응도 |
| 특이사항 | - 시범사업 발굴 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사업계획서에 주변지역 및 시설과의 연계성, 타 사업계획과 연계성을 작성 |

*자료 : 작지만 행복한 도시 만들기 2018년 공모사업 추진계획, 원도심 쌈지주차장·충남형 공원 조성 2017년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건설교통국(현 국토교통국) 건설정책과 내부자료

2) 충남형 스마트 인권공원 조성 : 도시계획팀

건설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스마트 인권공원 공모사업 역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3개소를 선정하여 1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구 밀집 도심지내의 기존 공원 리모델링 또는 신규 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양성평등 및 인권 개념을 전제로 다양한 계층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 즉,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인 공공공간 개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사업발굴 당시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주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의 기본방향이 양성평등 및 인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범죄예방계획 등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의 공원이용 활성화 및 기존 도심 정주환경 개선 등 파급효과를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추진 이후의 이용, 운영, 관리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추진배경 | - 양성평등의 인권을 고려한 충남형 공원조성 |
| 추진계획 | - 개소 : 3개소 내외(1년) - 대상지 : 리모델링 또는 신규 조성이 필요한 공원 중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이 이용에 불편한 공원을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하며, 가능한 인구 밀집 도심지로서 사업효과가 큰 지역 - 사업비 : 12억원(도/시·군 각 50%) |
| 심사 | - 선정위원회 구성 : 내부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현장실사 |
| 선정기준 | - 기본방향 : 양성평등 고려, 주변지역 이용 가능성, 시·군 사업 추진의지 등 - 세부기준 ① 현황분석 및 사업필요성(15) : 지역 낙후도, 접근성 등 주변여건 현황, 사업취지와 부합성 ② 사업계획 적정성(30) : 기본방향 반영, 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예산 확보계획의 적정성 ③ 실현가능성(25) : 토지확보 가능성, 재원 투자계획 등 ④ 운영관리(10) : 시설물 및 안전(범죄예방계획 등) 관리, 지속가능 운영 및 관리 계획 ⑤ 사업효과(20) : 주민의 공원이용 활성화, 기존 도심 정주환경 개선 등 파급효과 |
| 특이사항 | - 시범사업 발굴 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사업추진을 위한 충남형 공원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기초자료 마련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주민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사업계획서에 지속가능한 관리 운영계획, 안전 등 관리 운영계획 작성 |

*자료 : 작지만 행복한 도시 만들기 2018년 공모사업 추진계획, 원도심 쌈지주차장·충남형 공원 조성 2017년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건설교통국(현 국토교통국) 건설정책과 내부자료

3)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개발 시범사업 : 도시계획팀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사업은 국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낙후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화합과 공생을 전제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사업기간은 3년 반에서 4년 반 정도의 중장기적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역낙후도와 규모, 주민 및 해당 시·군 담당자의 의지, 사업효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정비,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빈집정비, 귀농귀촌인 및 임대형 주택 조성, 마을 문화 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 H/W사업은 물론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총괄계획가 지원이 포함된다. 총괄계획가 지원이 이 사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프로세스 또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최근 상향식 사업추진이 확산되면서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충남개발공사-마을주민-해당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즉, 주민, 행정, 전문가, 기관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형태이면서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 주민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종합적 및 적합하게 보완하게 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의 주민참여 의지 및 역량이 갖춰져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충남도 내 타 부서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대학,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등 사업 추진체계에서 보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추진배경 | - 국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낙후 소규모 마을에 귀농·귀촌인과 더불어 함께 살기 좋고 경관이 아름다운 새로운 농어촌 정주마을 모델 시범사업 |
| 추진계획 | - 개소 : 1~2개 마을 - 규모 : 가급적 기존마을 20~30호, 신규마을을 5~10호 조성 - 사업기간 : 3년 반~4년 반 - 사업비 : 10억원 - 주요내용 : 건축PM 등 총괄계획가 지원, 기반시설 정비(상하수도시설, 도로, 주차장 등), 기존 가옥정비(리모델링, 빈집정비 등), 신규마을조성(귀농귀촌인 맞춤형주택 및 임대형 주택 건립 등), 커뮤니티 공간(원주민, 이주민 공동작업 및 복지 공간, 공동육아, 돌봄 및 역량강화 등 활동 공간) |

| 구분 | 주요내용 |
|------|---|
| 추진계획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대상사업 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마을 리모델링 : 경관, 빈집정비, 가옥, 상·하수도 등 낙후 기반시설 정비 등 2. 신규조성사업 : 전원마을 조성, 청년 귀농인용 연립주택, 공공임대주택, 쉼어하우스 등 3. 연계사업 : 마을경관, 친환경성 및 에너지절감형 주택조성, 주변마을과 공생프로그램 등 </div> <p>- 대상지 : 국비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소규모 낙후 농어촌마을, 시범사업 추진의지가 있고 조성에 동의하는 마을, 주거 및 생활여건 등 개선효과가 있고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 가능한 마을, 마을에서 원하는 귀농·귀촌 등 마을 입주 희망자 5명 이상 확보된 경우 우대 가능</p> |
| 심사 |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10명 내외, 공무원/충남개발공사/충남연구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
| 선정기준 | <p><정량평가 : 50></p> <p>- 시범사업 규모의 적정성, 지역낙후도, 공가호수,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 등</p> <p><정성평가 : 50></p> <p>-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창의성, 사업계획구상의 적정성 및 실현성, 시·군 및 해당 주민들의 사업추진의 지,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업효과가 높고 타 사업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 여부 등</p> |
| 특이사항 | <p>- 사업추진 이전에 협조부서 등 실무추진 T/F팀 회의 개최(4회), 마을 조성 관련 성공/실패 사례조사(3회), 정주환경 모델개발관련 자문위원회 개최(3회) 등을 진행</p> <p>-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p> <p>-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충남개발공사가 마을주민, 해당 시·군 등과 협약을 맺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후 사업 추진</p> <p>- 기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p> <p>- 건축도시과, 농촌마을지원과, 환경복지과, 농업기술원(귀농귀촌팀), 충남연구원 등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p> <p>-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민참여 의지 및 역량(마을 내 공모사업 추진 실적,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비 계획(건축물 리모델링 및 경관디자인 등), 시·군 노력도,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총괄계획가, 주민협의체, 지자체, 자문위원회, 현장활동가 등 구성 및 역할), 기관 간 협력(지자체, 주민조직, 시민단체, 대학,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및 운영체계) 작성</p> |

*자료 : 2017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개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국토교통국 건설정책과 내부자료

1.3 농촌마을지원과 : 희망마을 선행사업(마을가꾸기팀)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농촌마을지원과 마을가꾸기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보통 농촌현장포럼의 주민교육 등을 통해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및 충남도의 중규모 하드웨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비는 보통 마을당 3천만원이지만 시·군 요청에 따라 1천만원 내외의 소액 차등지원도 가능하며 1년에 총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즉, 1년에 30개~40개 정도의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상은 희망마을 또는 농촌현장포럼과 같은 주민교육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 또는 마을주민 5인 이상의 경제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등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복지, 경관활동 및 공간 조성 등 주로 S/W위주의 사업들로 추진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사업비의 20~30% 구성하고 농식품부 창조적마을만들기 또는 타 사업 신청을 위한 계획서가 결과 보고서로 제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본 사업은 새로운 사업발굴 또는 구체적인 사업 실시보다 기존 마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주민이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역량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조사 및 연구비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대상지 선정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현장포럼 이후 추진활동, 주민공동체 및 리더의 의지를 가장 중요시하며 S/W위주 사업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심사방법 역시 타 사업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우선 적격 심사를 한 후, 이를 해당 시·군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인터뷰에 의해 심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도에서 전문가 심사위원단에 의해 선정된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추진배경 | - 소규모 사업과 컨설팅을 통해 중앙 및 도의 중규모 하드웨어/소득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농촌현장포럼 등을 통해 수립된 마을발전계획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면서 마을 주민의 단합에 기여할 수 있는 단위사업 발굴 및 추진 |
| 추진계획 | - 사업비 : 10억원(마을당 최대 3천만원 이내, 도/시군 5:5) - 사업기간 : 5월~10월(6개월) - 대상 : ①마을공동체(희망(색깔있는)마을 또는 농촌현장포럼을 이수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 ②경제공동체/법인(경제, 문화, 복지 등 마을 내 소규모 공동체 및 단체), ③마을공동체+경제공동체 및 단체 |

| 구분 | 주요내용 |
|------|--|
| 추진계획 | <대상사업 예시 : 경관 환경, 체험 소득, 문화 복지, 전통문화 음식 분야 등> 1. 소득사업 : 전통주개발, 친환경식자재 가공 사업, 꾸러미사업발굴과 이를 위한 협동조합 또는 마을 기업 준비 등 2. 체험마을 :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 개발, 교육농장 프로그램 개발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3. 역사·문화·복지 : 목공예/농악/마을밴드/연극 등 문화개발, 마을 역사복원(작은 박물관, 옛 우물가 복원 등), 스토리텔링 만들기, 노인 공동생활 홈 등 고령자 복지사업 4. 마을경관 : 꽃길 가꾸기(일회성 소모사업보다 주민 협동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마을 대청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폐가 정비, 작은 소공원 조성 등 5. 기타 : 신재생에너지 순환마을, 귀농귀촌 활성화 계획(귀농 홈 정비, 유치계획 등) |
| 심사 | - 대학 교수, 충남도내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충남연구원의 총 3인 이내의 전문가 심사위원단 구성 - 읍면 신청 ->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적격 검토(현장포럼과의 연계성, 추진의지 등 검토) -> 시·군 심사위원회 개최 1차 서류심사 후 인터뷰 -> 도 |
| 선정기준 | - 주민 단합 및 사업추진 의지(40) : 1단계 사업완료 후 추진활동 유무(15), 주민단합 및 리더의 의지(15), 관련 기관/단체 및 사업 연계체계(10) - 사업계획의 적절성(30) : 지역 여건과 특성 부합성(10), 목표 달성가능성/세부사업 적절성(10), 사업의 차별성/창의성(10) - 예산계획의 적정성(20) : 세부예산 계획의 구체성(10), 기존 자원 및 인프라의 활용도(10) - 기대효과(10) : 사업의 지속성/발전가능성 - 가점(최대 6점) : 농촌현장포럼 단계 참여 컨설팅 기관의 해당 마을 선행사업 컨설팅 참여(3), 해당 마을 선행사업의 전담자가 국가 공인 농어촌개발컨설턴트(2),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회사(1) |
| 특이사항 | - 컨설팅 예산을 전체사업비의 20~30% 이내로 포함, 컨설팅 이외의 사업은 최대한 주민 스스로 공동 추진하는 것을 원칙 - 해당 시·군의 민간단체 활동가와 컨설팅 기관이 협력 지원 -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다음단계의 사업(농식품부 창조적마을만들기 또는 타 사업) 신청을 위한 계획서 형식으로 작성 - 중규모 하드웨어 및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전단계의 선행사업으로 주민교육과 컨설팅 지속 추진 - 주민회의, 교육, 선진지 견학, 재료구입 및 시범사업비, 조사비, 기술연구비, 시설장비비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 사용 가능 - 구체적인 사업 실시보다 기존 마을발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 실행에 초점 - 최근 5년간 2억원 이상 국도비 마을사업을 지원받은 마을은 신청 제외 |

*자료 : 2017년 희망마을 선행사업 가이드라인,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내부자료

1.4 자치행정과 :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자치분권팀)

2014년부터 추진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은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주민참여 기반 마련을 위함이 목적이다. 그동안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발굴을 위한 사업을 도와 시·군이 각 50%씩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나, 2018년부터 도는 이전에 동네자치 공동체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대상의 후속지원을, 시·군은 시범공동체를 발굴하는 방식의 도와 시·군의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 규모가 다르며, 도에서는 작년도 선정대상인 45개중 26개소를 선정하여 2백만원~4백만원의 공동체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총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군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대표사업 발굴,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 해소 및 마을 의제 발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등 공동체가 해야 할 사업 발굴을 지원하면, 도에서는 생활개선을 위한 공동체활동,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축제 운영, 도서관 및 아이돌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역량 강화 활동 등 발굴된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즉, 본 사업은 공동체가 마을을 자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S/W위주의 사업임을 알 수 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추진배경 | - 민주적 의사결정, 주민참여 훈련의 장으로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을 위해 컨설팅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른 마중물 사업 지원 |
| 추진계획 | <p><시·군 공모사업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발굴 사업></p> <p>- 개소 및 사업비 : 시·군 자율적</p> <p>- 대상 : ①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②마을 갈등 해소 및 주민회의 방식 개선,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 하고 싶은 마을, ③층간소음, 주차문제 등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p> <p><도 공모사업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후속지원 사업></p> <p>- 개소 : 26개소(2017년 시범공동체 대상인 45개소 중)</p> <p>- 대상 : ①마을공동체 숙원형 1회성 사업보다 지역의 많은 기관·단체가 협력, 향후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사업, ②시범공동체 전체 주민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통해 제안된 사업, ③공동체 갈등 및 고질민원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권장 사업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개선형 : 에너지 절약운동, 단지가꾸기, 아파트 소식지 등 공동체활동 2. 주민화합형 : 공동체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축제 등 운영 3. 보육교육형 : 작은 도서관 등 아이돌봄 공동체 활동 4. 안전지킴이형 : 안전 감시단 및 안심 순찰대 등 지역사회의 안전역량 강화 활동 </div> <p>- 사업비 : 총 6천만원(2백만원~4백만원, 공동체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p> |
| 심사 | - 외부 전문가 4명 구성하여 시·군별 사업계획서 서면 심사 |
| 선정기준 | <p>- 2018년도 후속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은 없음</p> <p>- 2017년도 심사기준은 참여의지(20), 적합성(20), 필요성(20), 파급효과(20), 행정지원(20)</p> <p>- 1회성 행사(단합대회, 경로잔치, 단순 초청 음악회, 나무심기 등), 단순 외유성 선진지 견학, 봉사 없이 단순 물품 구입·전달하는 선심성 사업은 제외</p> |
| 특이사항 | <p>- 2018년부터 시·군은 자체 발굴, 도는 후속지원 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p> <p>- 이에, 시·군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①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대표사업 발굴 등을 통한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 강화, ②주민참여를 통한 갈등 해소 및 마을 의제 발굴, ③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컨설팅의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전년도 지원했던 주민자치 공동체 중 마중물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원</p> |

*자료 : 2018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후속지원 및 2019년 예산 확보계획, 2017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계획,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내부자료

2. 유형별 사업 추진사례

유형별 사업 추진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 주무부서의 자료수집 및 분석,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및 분석은 공공공간 및 시설 등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사업, 마을내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사업,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주민교육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4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 [표 3-2] 유형별 조사 및 분석대상 사업

| 조사대상 | 유형 |
|---------------------------------|--|
|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 - 종합사업 :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공간 및 시설물 조성 |
|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 - 단위사업 : 마을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
| 디자인 아카데미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 - S/W사업 :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 사업 |
|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 - S/W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교육, 축제, 활동 등) |

2.1 공공디자인 공모사업⁶⁾

1) 도시형 공공디자인 사업(간판정비 사업)

A지자체에서 추진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 이전부터 국비, 도비, 군비, 주민 자부담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2014년에는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사업계획서 자료에 의하면 주민 자부담 포함 약 32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 이중 2014년도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5억원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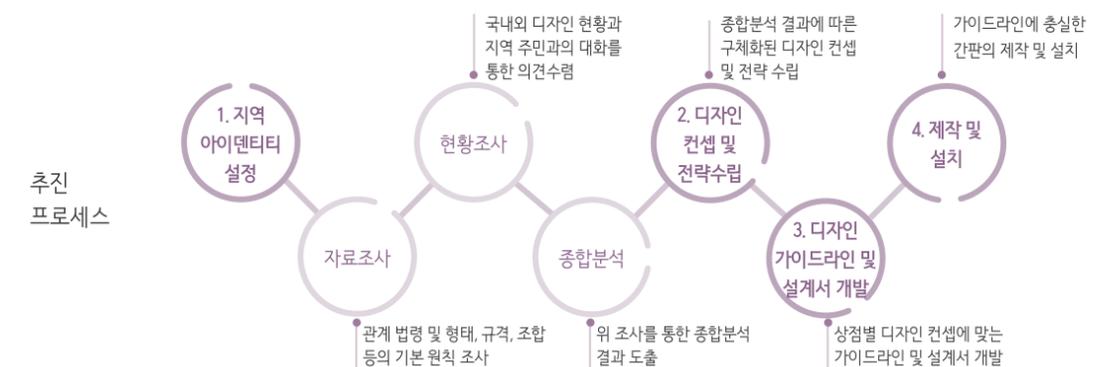
대상지는 중심가로 1.4km에 해당되는 구간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추진된 간판정비 사업이다. 간

6) 박해은 외(2017),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보고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판은 점포주 개인 소유물로서 주민 설명회 및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업 추진 프로세스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 [표 3-3] 충남 00읍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개요

| 구분 | 주요내용 |
|----------|---|
| 사업비 | 약 5억원(도비 7천만원, 군비 약 3억 8천만원, 자부담 4천 5백만원) * 이전부터 국비/도비/군비/자부담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2014년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 연계사업으로 추진 |
| 사업기간 | 2014년 |
| 사업명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
| 배경 및 필요성 | 도시미관 저해요인인 대형 판류형, 수량초과 광고물의 개선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 시행한 간판사업 구간(4km)과의 지속적 연계추진 |
| 목적 | -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개선하여 건물특성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역 정서가 녹아든 품격있는 간판개선으로 도시환경과 일체화되는 수직경관 조성 |
| 대상 | 00읍 중심가로 1.4km 구간에 대한 간판 |
| 추진방향 | - 지역 환경과 어울리는 차별화된 디자인 : 지역의 환경에 어울리는 소재를 사용한 간판디자인 개발과 설계 - 효율성을 고려한 제작 및 설치 : 간판교체의 용이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작 및 설치 - 사업의 원활한 진행 : 간판디자인과 사후관리방안 등 주민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



*자료 : 2014년 00읍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계획서, 2014

사업추진 전 현황은 불법광고물 설치는 물론, 건축물 및 가로경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난잡하고 조잡한 이미지의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적용된 색채 및 크기 역시 주목성 또는 시인성을 고려하지 않아 광고물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간판이 즐비해 있었다.



무분별한 광고물

배려없는 설치로 주변환경과 부조화

개방감없는 건축물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



주변환경과 부조화

지역적 특성과 맞지 않는 거리

정체성이 결여된 환경

주변환경과 조화를 무시한 지역 정체성

▲ [그림 3-1] A군 사업 추진 전 현황

사업 완료 후 현재 가로경관 현황은 간판의 크기 및 형태에서 통일성을 가진 디자인으로 정비되어 기존보다 정돈된 이미지를 주고 있다. 대형 판류형 간판대신 LED간판으로 교체하고, 간판 수량 또한 규제하여 기존의 복잡하고 조잡한 이미지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한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유리창 부착 광고물 및 건축물 외벽 현수막 설치 등의 불법행위, 그리고 보행로에 상품 진열로 인한 보행에 불편과 안전성 우려가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이것은 관 주도의 사업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점포주 의식에 따른 행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경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주민교육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농촌형 공공디자인사업

B지자체에서 추진한 경관개선사업으로서 주민참여 커뮤니티 디자인 방식을 통해 마을의 자연,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여 타 마을과의 차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사업추진 전 현황은 마을 안길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와 불법시설물이 경관을 저해하고 있었으며, 균열되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담장과 보안시설 미비 등은 보행의 안전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과도한 색채와 크기의 관광지 표지판 역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었으며, 타 공공시설물과의 조화성도 결여되어 있어 디자인의 통일성과 조화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마을 일대를 대상으로 마을 안 담장개선 및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을 통한 마을의 쾌적성과 안전성 향상, 마을의 역사 문화자원의 입구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 부여 및 방문객 유도 등을 위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 [그림 3-2] B군 사업 추진 전 현황

결과적으로 1년이라는 사업기간과 4억원이라는 사업비의 한계로 인해 주민교육이 아닌 주민설명회의 소극적인 주민참여 방식을 적용한 탓에 주민참여 커뮤니티 디자인 방식을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마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 및 소화전 설치, 골목길 고보조명, 마을의 미관 향상을 위해 담장도색 및 울타리 정비, 마을 입구 및 역사문화자원 상징성 부여를 위해 마을 종합 안내도와 간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H/W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을 안길이 밝아지고 깨끗해졌으며 주민 및 방문객이 마을의 자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긴 했으나,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정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쓰레기 방치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이는 주민의 의식전환 및 역량향상에 따른 주민들 간 약속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주민교육과 함께 병행, 즉 S/W사업과의 병행 추진의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 [그림 3-3] B군 사업 추진 후 현황

2.2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

건설정책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C지자체에서 추진한 충남형 공원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례이다. 추후 사업 대상지에 접하여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며, 주변에는 지자체 운영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시설, 유치원, 아파트와 맨션 등이 입지해 있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쉽게 접근이 용이한 곳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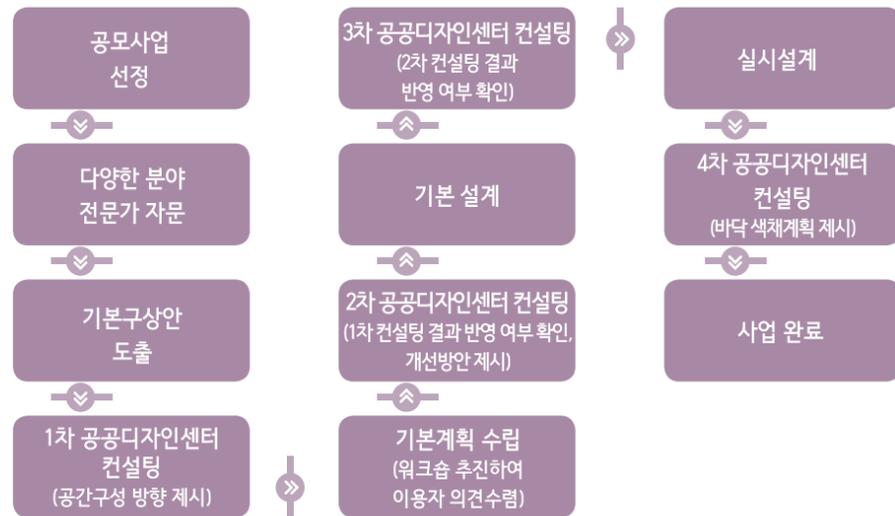
▲ [그림 3-4] 사업 추진 전 대상지 및 주변 현황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 주관부서인 충남도 건설정책과의 사업 추진 절차 일환으로 지역, 여성정책, 조경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본구상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업 담당자가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⁷⁾을 신청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다.

당초 기본구상안에서는 대상지의 지형 레벨을 맞추기 위해 성토작업 등 토목공사가 계획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를 배치하는 계획이었다. 이에, 4차례의 컨설팅 진행을 통해, 토목공사는 최소한으로 하여 지형 경사를 활용한 놀이기구 배치로 특색있는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하였고, 또한 공원의 이용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주변 어린이집 유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본 사업의 기본방향인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무장애아 모두를 위한 놀이기구 배치, 고령자를 위한 시설배치 및 무장애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업 담당자가 사업구상단계/기본계획단계/실시계획단계/시공단계 등 단계별로 디자인컨설팅을 신청함으로써 각 단계별 전문가가 디자인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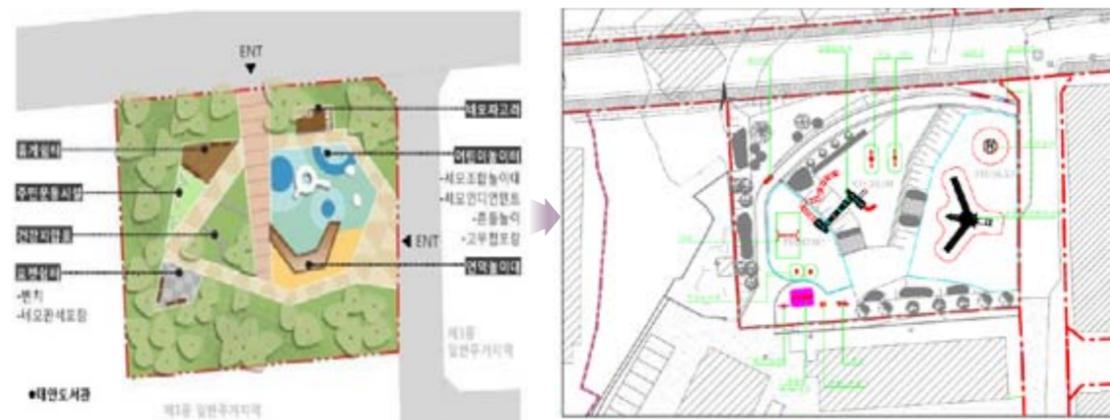
7)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은 건축, 조경, 도시 및 농촌계획, 디자인(산업, 시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센터 구성원이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는 제도임. 사업내용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와 센터원이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 및 설계사, 주민 등 관련 주체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8)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보고서 내부자료 참고



▲ [그림 3-5] 충남 00군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 프로세스

이와 같이 본 사업은 공모사업 계획안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자체 사업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디자인 자문을 받기 위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공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 즉 공간의 활용도와 이용률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할 수 있다.



▲ [그림 3-6] 어린이공원 시설 배치도(당초 계획과 공공디자인 컨설팅 진행 결과)



▲ [그림 3-7] 사업 완료 후 현황

2.3 디자인 아카데미

디자인 아카데미 사업에서 주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은 2017년도 기준 약 10개월 간 총 6회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참여 인원은 총 370명으로 이론 및 토론교육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은 건축사와 공무원 대상 교육, 그리고 당해 연도 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대상 마을의 주민과 공무원이다.

교육 내용은 공공디자인 개념 이해 및 사례소개, 공공디자인 활용 방향 등으로 공공디자인의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을 위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교육 대상은 총 6회의 교육 중 1회의 교육에만 참여하도록 운영됨으로써 대상자의 인식수준에 맞는 단계별 심화교육이 아닌 행사성 교육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담당 주무부서 내부자료에 의하면 교육 대상의 강의평가는 긍정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대상 마을의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실제로 마을의 유래 등을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에 대한 요구도 있었으며, 특히 교육의 횟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들은 앞에서 언급한 이 사업의 현재 운영방식의 한계를 나타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4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

자치행정과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D지자체의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사진전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될 위기이면서 전원주택단지의 신규 인구 증가로 기존 마을 주민들과의 융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이 제안, 선정되어 추진 된 사례이다. 대상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및 주민 후원금이 3백만원, 충남도 지원비가 3백만원의 총 6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사업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가 26개 마을의 현재와 과거 모습 사진을 공모 및 선정하고 이야기를 발굴하여 사진확대 및 액자 작업, 전시회 장소 꾸미기 등 전시회를 주민축제 형식으로 개최한 것이다.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전통 생활문화 발굴, 주민들 간 연대와 화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의지가 있는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 마을 공동체 발굴 관점에서의 지원, 이에 대한 지속성을 갖기 위한 후속 지원의 2년 간 사업이지만 이를 더욱 확산 및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 볼 수 있다. 주민들이 공동체로서 보다 마을에 대한 애착심 향상 및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3. 종합분석 및 문제점 도출

3.1 사업 간 추진체계 비교 분석

충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 중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업기간은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에서 추진하는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이 유일하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면서 사업비도 동일한 공공디자인팀의 공공디자인 사업 및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포함한 그 외의 사업들은 모두 1년 6개월 이하의 단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 공간, 시설물, 매체 등 디자인 유형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공공디자인 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이며 종합사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역시 사업 대상 여건에 따라 디자인 유형의 사업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도심 째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의 경우 디자인 유형 중 공간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어 단위사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들은 H/W가 중심인 사업들이라 볼 수 있으나,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소규모 디자인 유형이 포함된 H/W와 S/W사업을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디자인 아카데미 사업과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은 순수하게 주민교육이나 축제, 콘텐츠 개발 등 S/W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업내용에 따라 종합사업과 단위사업, H/W 중심 사업과 S/W중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심의 또는 전문가 지원 등 디자인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3개의 사업을 들 수 있다. 공공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H/W중심의 공공디자인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디자인 심의와 전문가의 컨설팅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팀의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의 경우 총괄계획가를 지원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디자인 관리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도 많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원도심 째지 주차장 조성사업,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물론 원도심 째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의 경우 공모선정안에 대하여 충남도 주관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자인 계획의 변경 등 변수에 대한 디자인 지원 마련에 대해서는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희망마을 선행사업의 경우 소규모 디자인 관련 H/W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제도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의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충남도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하면 해당 시·군 부서 담당자가 공모안을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시·군에서 읍·면·동에 공모지침을 시달하여 의지가 있는 주민이 공모안을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별로 보면 주민이 스스로 공모안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식은 S/W중심의 사업에

해당된다.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 역시 동일한 방식인데 이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에 의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인 현장포럼의 교육사업과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경험하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시된 마을발전계획을 토대로 공모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와 유사한 사업인 공공디자인 사업이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과 공모신청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민의지와 역량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지의 여부까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디자인 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S/W사업으로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자인 대상자가 당해 연도 충남도 공공디자인팀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의 주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 S/W사업 대상자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표 3-4] 사업 간 추진체계 비교

| 부서 | 사업명 | 기간 | | 내용 | | | | | | | 디자인관리및지원 | | 공민안정성추진 | | 사업비 |
|---------------|---------------------------|---------------------|----|-----|----|-----|----|----|-------|--------|----------|-----|---------|-----------------|-----|
| | | 단기 | 장기 | 건축물 | 공간 | 시설물 | 매체 | 교육 | 컨텐츠개발 | 축제(행사) | 심의 | 전문가 | 시군담당자 | 주민 | |
| 건축 도시과 | 공공디자인사업 | ● | | ● | ● | ● | ● | | | | ● | ● | ● | 4억~5억원 (개소) | |
| | 공공디자인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 ● | | ● | ● | ● | ● | | | | ● | ● | ● | 4억~5억원 (개소) | |
| | 디자인 아카데미 | ● | | | | | | ● | | | | | | 6천만원 | |
| 주거복지 T/F 팀 | 공동주택 공용 시설 개선사업 | ● | | ● | ● | ● | | | | | | | ● | 3억 6천 (개소) | |
| 건설 정책과 | 원도심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 | ● | | | ● | | | | | | | | ● | 4억원 (개소) | |
| | 도시 계획팀 |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 | ● | | | ● | | | | | | | ● | 4억원 (개소) | |
| | |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 | | ● | ● | ● | ● | ● | | | | ● | ● | 4억원 (개소) | |
| 농촌마을 지원과 | 마을 가꾸기팀 | 희망마을 선행사업 | ● | | ● | | ● | ● | ● | | | | ● | 2천~3천만원 (개소) | |
| 자치 행정과 | 자치 분권팀 |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 ● | | | | | ● | ● | | | | ● | 2백~4백만원 (개소) | |

3.2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조성 공모사업의 경우 디자인 요소가 주가 되는 H/W중심의 사업으로서 의무적으로 디자인 심의 및 전문가의 컨설팅 등 디자인 관리는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지 및 역량이 전제되어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및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경관향상을 위해 간판 또는 마을안길 벽화 등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불법행위 및 사업 전과 동일하게 방치된 쓰레기 등이 여전히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업 추진실태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단순한 의견제시나 주민설명회 수준에서의 형식적인 주민참여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주민협의체 운영 역시 거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역 여건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사업완료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예산지원을 종료함에 따라 후속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종료 후에는 사후관리 역시 미흡하다.

이러한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디자인 아카데미 사업이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디자인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나,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 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발굴 양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기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H/W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면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건축도시과 주거복지T/F팀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은 주택법에 의해 충남에 조성된 공동주택 단지의 대상지 여건에 따라 건축물, 공공공간, 시설물 등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매해 사업수 및 사업비 역시 유동적이며 거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시·군 담당자가 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사업비가 시공에 필요한 예산만 책정되어 있어 별도의 디자인 관리 및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충남과 해당 시·군의 경관 디자인 방향과의 일관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전문가의 상시적 지원이 아닌 공모선정안에 대한 일회성 자문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디자인컨설팅 등 디자인 관리 및 지원제도의 연계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은 사업비가 4억원이지만 3년간 사업으로 총괄계획가를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후 공모에 신청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의 사업이다. 하지만 주민의 디자인 인식 향상을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종료 이후 주민의 자발적이면서 지속가능한 경관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촌마을지원과 마을가꾸기팀의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S/W중심의 사업이면서 경관식재 조성 및 안내표지판 등 소규모 경관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규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마을은 이미 주민교육을 통해 마을발전을 위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한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이중 경관유형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디자인 마인드가 요구된다. 하지만 희망마을 선행사업 추진 시 디자인 관리 및 지원은 물론 주민의 디자인 의식교육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들 사업은 디자인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추진된다면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의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갈등 해결 및 화합 등을 위해 주민의 의지와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S/W사업이다. 하지만 이를 보다 활성화 및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추진예정 사업 등 연계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9개의 디자인 관련 사업들은 현재 한계 및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 질 및 시너지 향상을 위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상호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표 3-5] 사업별 한계 및 문제점

| 부서 | 사업명 | 사업특징 | 개선 | 유지 | |
|--------------|-------------------|--|---|----|---|
| 건축 도시과 | 공공디자인 사업 | • 의무적으로 디자인 심의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 | ● | |
| | | • 주민의 적극적 참여 추진방식 미흡 | ● | | |
| | | • 후속지원 미흡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 | ● | | |
| | 공공 디자인팀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 • 의무적으로 디자인 심의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 | ● |
| | | | •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 참여 추진방식 미흡 | ● | |
| | | | • 후속지원 미흡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 | ● | |
| | 디자인 아카데미 | | • 충남에서 유일하게 도민의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회성 교육 | ● | |
| | | | • 시공비만 예산에 책정 | ● | |
| 주거복지 T/F팀 |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 • 디자인 관리 및 지원 전무한 상황 | ● | | |

| 부서 | 사업명 | 사업특징 | 개선 | 유지 | |
|---------------------------------|------------------------------|--------------------|---|----|---|
| 건설 정책과 | 도시 계획팀 | 원도심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 | • 공모선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 | ● |
| | | | • 전문가의 상시적 디자인 지원이 아닌 일회성 자문 | ● | |
| | |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 | • 공모선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 | ● |
| | • 전문가의 상시적 디자인 지원이 아닌 일회성 자문 | | ● | | |
| |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 | | • 총괄계획가 지원 | | ● |
| | | | • 주민이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토대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사업 진행 | | ● |
| • 주민의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재 | | | ● | | |
| 농촌마을 지원과 | 마을 가꾸기팀 | 희망마을 선행사업 | • 경관자원이 우수한 마을의 경관보존 및 향상을 위한 사업의 디자인 지원 시스템 부재 | ● | |
| | | | • 주민의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재 | ● | |
| 자치 행정과 | 자치 분권팀 |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 • 활성화 및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연계전략 부재 | ● | |

IV. 충청남도 사업 담당자 인식조사

1. 조사개요

1.1 조사목적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사업들 간 연계 및 디자인 지원을 위한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서 간 협업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해당 사업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부서 간 협업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충남에서 추진되는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업들의 추진방식을 파악하고,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력 의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 공모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인터뷰조사는 충남도와 시·군, 경관 및 디자인 주무부서 담당자와 그 외의 부서 담당자 등 각각 다른 관점에서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1.2 조사방법 및 내용

설문조사 대상은 도 20명, 15개 시·군 81명의 총 10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중 경관/디자인 주무부서 담당자는 31명, 건설/농촌/자치행정 부서 담당자는 70명이다. 설문내용은 기본정보, 경관 및 디자인 인식, 사업 추진방식, 사업 및 부서 간 연계협력 의향과 개선사항, 사업추진 시 중요시 및 우선시 하는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선택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복수선택형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의 방문에 의한 1:1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조사 대상은 도 건축/자치행정 부서의 각 1명씩 2명, 시·군 건축/건설/농촌 관련 부서 담당자 4명의 총 6명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현재 타 부서와 연계 현황 및 연계추진 필요성과 의향, 사업 연계 및 부서 간 협력 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현재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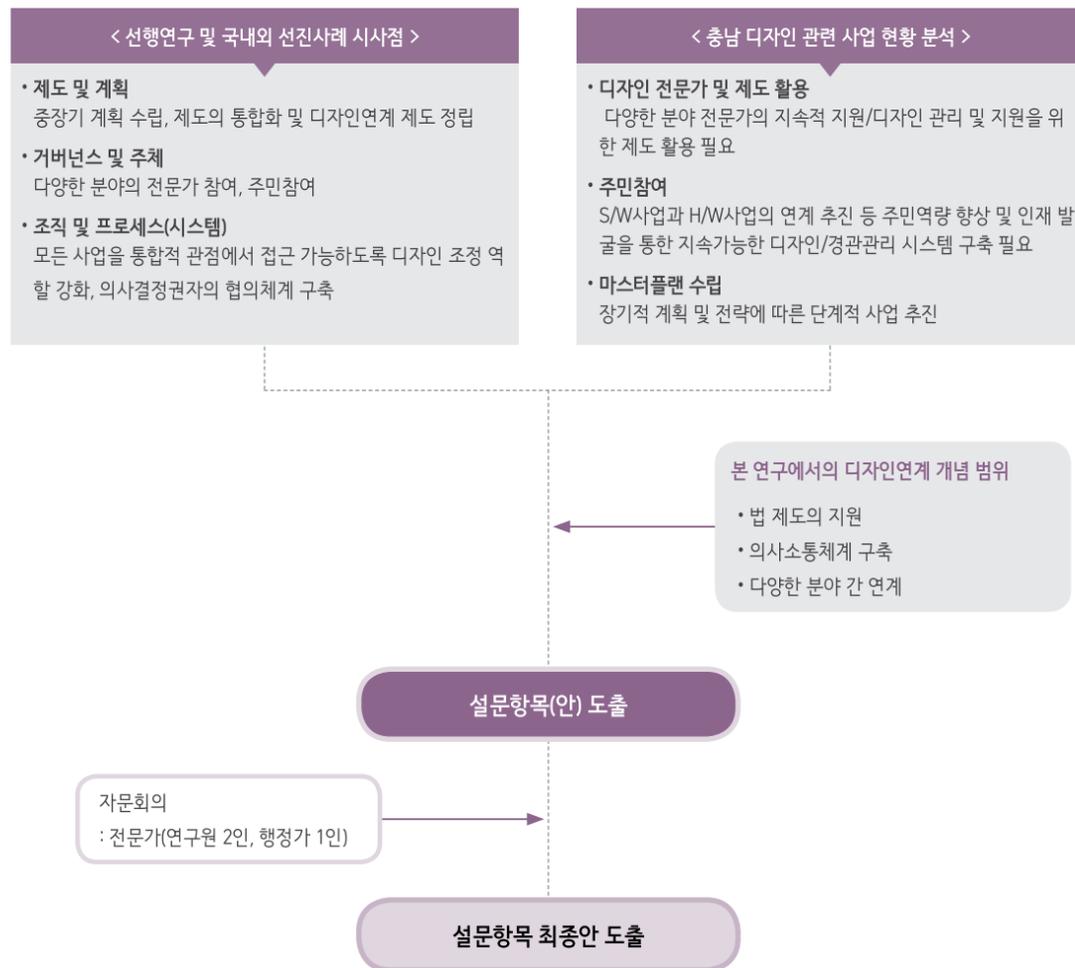
▼ [표 4-1] 조사 대상 및 내용

| 구분 | 기간 | 대상 | 내용 |
|-------|-----------|--|--|
| 설문조사 | 2018. 11. | - 도 20명, 15개 시·군 81명 총 101명(건축/건설/농촌/자치행정 관련 부서) - 경관/디자인 주무부서 담당자 31명, 그 외 부서 담당자 70명 총 101명 | - 기본정보 : 직렬, 소속부서, 근속기간 - 경관 및 디자인 인식 : 중요성 및 법 제도, 교육 경험 - 사업 추진방식 : 타 부서와 협업, 경관 관련 법 제도 활용, 전문가 활용 - 사업 및 부서 간 연계협력 의향, 개선사항 : 협업 의향, 경관 관련 법 제도 및 전문가 활용 의향, 사업 및 부서 간 연계 협력 시 예상되는 문제와 필요한 사항 - 사업에서 중요시 및 우선시 하는 사항 : 중요도, 필요도 |
| 인터뷰조사 | 2018. 11. | - 도 2명, 시·군 4명 총 6명 (도 건축/자치행정 부서, 시·군 건축/건설/농촌 부서) | - 사업추진 방식 및 사업 간 연계 의향 : 타 부서와 연계 현황, 연계의 필요성, 전담조직의 역할 - 사업 연계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예상되는 어려움,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것, 타 부서와의 연계추진 시 도/시·군의 역할 - 현재 사업추진 시 중요한 것 또는 필요한 것 : 공모사업 추진 시 어려운 것, 현재 공모사업 추진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2.1 설문항목 도출 프로세스

설문조사 항목 설계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된 시사점, 그리고 충남 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사례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참고로 하고,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 연계 개념을 토대로 설문항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의견수렴 후 반영, 최종 설문안을 도출하였다.



▲ [그림 4-1] 설문항목 도출 프로세스

2.2 설문결과 분석

1) 기본정보

설문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살펴보면, 경관/디자인 주무부서 담당자는 총 31명 중 시설직이 가장 많으며 이중에서도 건축직, 다음으로 디자인 전문직이 많다. 그리고 대상자 31명 모두 건축/도시/주택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담당 업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대상자가 20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타 부서 담당자 역시 시설직이 가장 많으며, 일반행정, 건축, 토목직 순이다. 근속기간은 총 70명 중 31명의 약 45%가 1년 이하로 경관/디자인 부서 담당자보다 상대적으로 담당 업무 근속기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 [표 4-2] 기본정보

| 구분 | 경관 및 디자인 주무부서 담당자(31명) | 건설/농촌/자치행정 부서(70명) |
|----|------------------------|--------------------|
| 직렬 | 시설 | 기술 2 |
| | | 녹지 3 |
| | 행정 | 시설 40 |
| | | 행정 25 |
| | 건축 | 건설 4 |
| | | 건축 16 |
| 직류 | 기계 | 기술 2 |
| | | 녹지 1 |
| | 도시정책 | 녹지조경/시설조경/조경 3 |
| | 디자인 | 디자인 1 |
| | | 복지/사회복지 2 |
| | 일반행정 | 산림자원 1 |
| | | 일반행정 21 |
| | 지방시설 | 지방시설 2 |
| | | 축산 1 |
| | 토목 | 토목 16 |

| | | | |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31 | 건축/도시/주택 | 26 |
| | | | 농어업/농어촌 | 16 |
| | | | 도로/건설 | 7 |
| | | | 관광/문화 | 1 |
| | | | 자치/경제 | 16 |
| | | | 복지 | 1 |
| | | | 산림 | 1 |
| | | | 산림녹지 | 1 |
| | | | 공원조성 | 1 |
| 부서 근속기간 | 1년 이하 | 11 | 1년 이하 | 31 |
| | 2년~3년 | 12 | 2년~3년 | 25 |
| | 4년 이상 | 8 | 4년 이상 | 14 |

2) 법 제도적 지원 측면

①경관 및 디자인 중요성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가 타 업무 담당자보다 상대적으로 경관 및 디자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으며, 담당 업무기간이 길수록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건축/도시/주택 부서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건설/도로 부서나 농어업/농어촌 부서 담당자들도 경관 및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3]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관 및 디자인의 중요성(경관/디자인)

(단위 :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전혀 그렇지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평균 | |
|------------|-------|-------------|-----------|------|------|-----------|------|------|
| 전체 | (31) | - | - | - | 54.8 | 45.2 | 4.45 | |
| 부서 근속기간 | 1년 이하 | (11) | - | - | - | 81.8 | 18.2 | 4.18 |
| | 2~3년 | (12) | - | - | - | 50.0 | 50.0 | 4.50 |
| | 4년 이상 | (8) | - | - | - | 25.0 | 75.0 | 4.75 |

▼ [표 4-4]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관 및 디자인의 중요성(타 부서)

(단위 :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전혀 그렇지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평균 | |
|------------|----------|-------------|-----------|------|------|-----------|------|------|
| 전체 | (70) | - | - | 11.4 | 57.1 | 31.4 | 4.20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26) | - | - | 15.4 | 46.2 | 38.5 | 4.23 |
| | 농어업/농어촌 | (16) | - | - | 12.5 | 56.3 | 31.3 | 4.19 |
| | 건설/도로 | (7) | - | - | - | 71.4 | 28.6 | 4.29 |
| | 경제/자치 | (16) | - | - | 12.5 | 68.8 | 18.8 | 4.06 |
| | 기타 | (5) | - | - | - | 60.0 | 40.0 | 4.40 |

②경관 및 디자인 관련 교육 경험

경관 및 디자인 관련 교육 경험에 대해서 경관/디자인 담당자들 중 90%이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타 업무 담당자들은 40%만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건설/도로, 농어업/농어촌 업무 담당자들은 경관 및 디자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표 4-5] 경관 및 디자인 관련 교육 경험(경관/디자인)

(단위 : 명, %)

| 구분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 전체 | (31) | 90.3 | 9.7 |

▼ [표4-6] 경관 및 디자인 관련 교육 경험(타 부서)

(단위 : 명, %)

| 구분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
| 전체 | (70) | 40.0 | 60.0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26) | 61.5 | 38.5 |
| | 농어업/농어촌 | (16) | 31.3 | 68.8 |
| | 건설/도로 | (7) | 14.3 | 85.7 |
| | 경제/자치 | (16) | 18.8 | 81.3 |
| | 기타 | (5) | 60.0 | 40.0 |

③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의 이해도와 활용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경관/디자인 담당자가 타 업무 담당자에 비해 높으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타 업무 담당자들중에는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건축/도시/주택, 건설/도로 관련 부서 담당자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7] 도 또는 해당 시·군의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경관/디자인)

(단위 :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전혀 모른다 | 잘 모른다 | 보통이다 | 잘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 평균 |
|---------|-------|--------|-------|------|---------|------------|------|
| 전체 | (31) | - | - | 41.9 | 45.2 | 12.9 | 3.71 |
| 부서 근속기간 | 1년 이하 | (11) | - | - | 72.7 | 27.3 | 3.27 |
| | 2~3년 | (12) | - | - | 33.3 | 66.7 | 3.67 |
| | 4년 이상 | (8) | - | - | 12.5 | 37.5 | 50.0 |

▼ [표 4-8] 도 또는 해당 시·군의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타 부서)

(단위 :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전혀 모른다 | 잘 모른다 | 보통이다 | 잘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 평균 | |
|---------|----------|--------|-------|------|---------|------------|------|------|
| 전체 | (70) | 4.3 | 24.3 | 45.7 | 24.3 | 1.4 | 2.94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26) | 7.7 | 7.7 | 53.8 | 26.9 | 3.8 | 3.12 |
| | 농어업/농어촌 | (16) | - | 18.8 | 56.3 | 25.0 | - | 3.06 |
| | 건설/도로 | (7) | 14.3 | 14.3 | 42.9 | 28.6 | - | 2.86 |
| | 경제/자치 | (16) | - | 56.3 | 25.0 | 18.8 | - | 2.63 |
| | 기타 | (5) | - | 40.0 | 40.0 | 20.0 | - | 2.80 |

또한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에 있어서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의 경우 한명을 제외한 응답자 모두가 활용하고 있으며, 이중 심의를 가장 많이 활용, 관련 계획 및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 순으로 활용도가 높다.

반면, 타 부서 업무 담당자들 중 약 41%가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경제/자치 부서, 건설/도로 부서 담당자들의 활용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담당자들 중에서는 건축/도시/주택 부서 담당자들의 관련 계획 및 가이드라인과 심의의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어업/농어촌 부서 담당자들중에서도 계획 및 가이드라인이나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 컨설팅을 활용하는 등 경관/디자인 주무부서가 아닌 타 부서 담당자들도 법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9] 사업 추진 시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복수)(경관/디자인)

(단위 : 명, %)

| 구분 | 사례수 | 계획 및 가이드라인 | 심의 |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 활용하고 있지 않다 |
|----|------|------------|------|-------------------|------------|
| 전체 | (31) | 61.3 | 71.0 | 58.1 | 3.2 |

▼ [표 4-10] 사업 추진 시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복수)(타 부서)

(단위 : 명, %)

| 구분 | 사례수 | 계획 및 가이드라인 | 심의 |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 활용하고 있지 않다 | |
|------------|----------|------------|------|-------------------|------------|------|
| 전체 | (70) | 34.3 | 30.0 | 20.0 | 41.4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26) | 50.0 | 53.8 | 23.1 | 19.2 |
| | 농어업/농어촌 | (16) | 37.5 | 18.8 | 37.5 | 25.0 |
| | 건설/도로 | (7) | 14.3 | - | 14.3 | 71.4 |
| | 경제/자치 | (16) | 18.8 | 12.5 | - | 81.3 |
| | 기타 | (5) | 20.0 | 40.0 | 20.0 | 40.0 |
| 부서 근속기간 | 1년 이하 | (31) | 35.5 | 19.4 | 12.9 | 54.8 |
| | 2~3년 | (25) | 36.0 | 40.0 | 20.0 | 32.0 |
| | 4년 이상 | (14) | 28.6 | 35.7 | 35.7 | 28.6 |

향후 사업추진 시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 의향에 대해서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 응답자들은 모두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중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위원회 심의 활용 의향이 가장 높고 이는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하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타 업무 담당자의 경우 현재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약 60%였으나, 활용 의향은 약 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이는 부서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의 경우 현재 농어업/농어촌 부서, 건축/도시/주택 부서에서 활용도가 높으나, 향후 활용 의향에서는 이 두 부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건설/도로 부서, 경제/자치 부서 담당자들의 응답률도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위원회 심의의 경우, 현재 건축/도시/주택 부서, 농어업/농어촌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부서 담당자들의 향후 활용 의향 응답률은 조금 낮아졌으나 건설/도로 부서에서는 현재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활용 의향을 보이고 있다.

즉,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과 타 업무 담당자들의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 의향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은 심의를 통해 사업 또는 부서 간 연계를 하고자 하고 있으며, 타 업무 담당자들은 심의보다는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으로 경관 및 디자인 분야와의 연계 또는 협업을 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표 4-11] 향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 의향(복수)(경관/디자인)

(단위 : 명, %)

| 구분 | 사례수 | 계획 및 가이드라인 참고 |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위원회 심의 |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
|----|------|---------------|-----------------------|-------------------|
| 전체 | (31) | 54.8 | 74.2 | 51.6 |

▼ [표 4-12] 향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 의향(복수)(타 부서)

(단위 : 명, %)

| 구분 | 사례수 | 계획 및 가이드라인 참고 |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위원회 심의 |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 |
|------------|----------|------------------|-----------------------|-------------------|------|
| 전체 | (67) | 62.7 | 29.9 | 38.8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25) | 48.0 | 44.0 | 44.0 |
| | 농어업/농어촌 | (14) | 64.3 | 14.3 | 57.1 |
| | 건설/도로 | (7) | 71.4 | 28.6 | 28.6 |
| | 경제/자치 | (16) | 75.0 | 12.5 | 25.0 |
| | 기타 | (5) | 80.0 | 60.0 | 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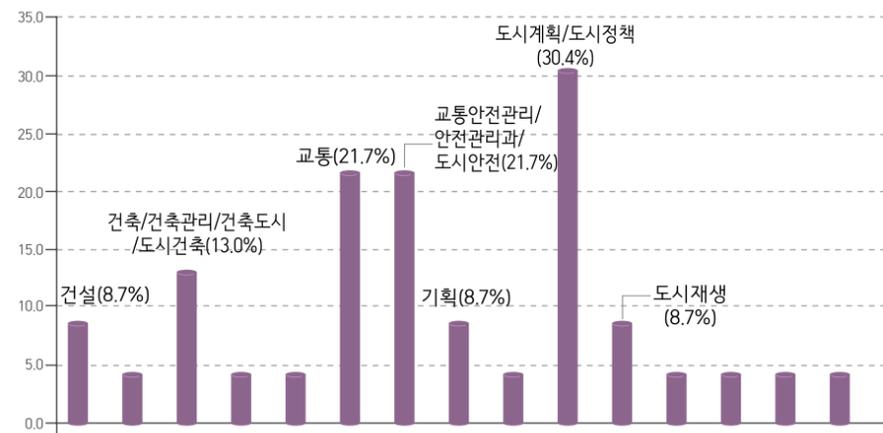
3) 의사소통체계 구축 측면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 중 타 부서와 협업은 약 74%가 하고 있다. 협업 대상 부서는 도시계획이나 도시정책 부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교통 및 안전 관련 부서, 건축이나 건축관리 부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협업내용은 사업기획 시 협의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심의 등 디자인 지원이 다음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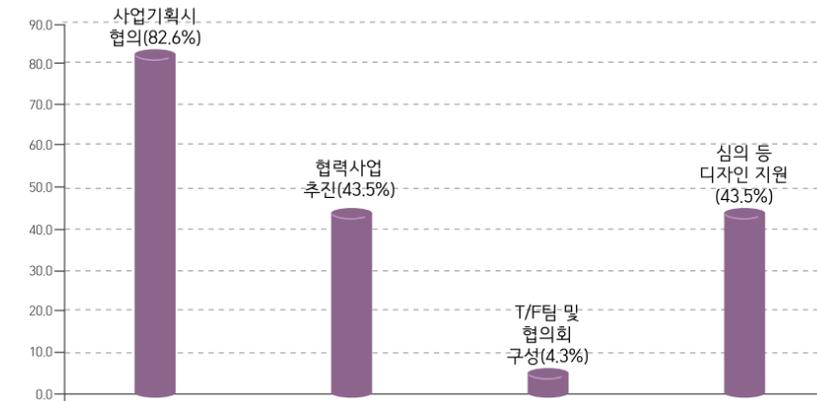
▼ [표 4-13] 사업추진 시 부서 간 협업 진행 여부(경관/디자인)

(단위 : 명, %)

| 구 분 | 사례수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
|-----|------|------|--------|------|
| 전체 | (31) | 74.2 | 25.8 | |
| 직류 | 건축 | (14) | 64.3 | 35.7 |
| | 기계 | (1) | 100.0 | - |
| 직류 | 도시정책 | (2) | 100.0 | - |
| | 일반행정 | (4) | 50.0 | 50.0 |
| | 토목 | (1) | 100.0 | - |
| | 기타 | (9) | 88.9 | 11.1 |



▲ [그림 4-2] 협업진행 부서(복수)(경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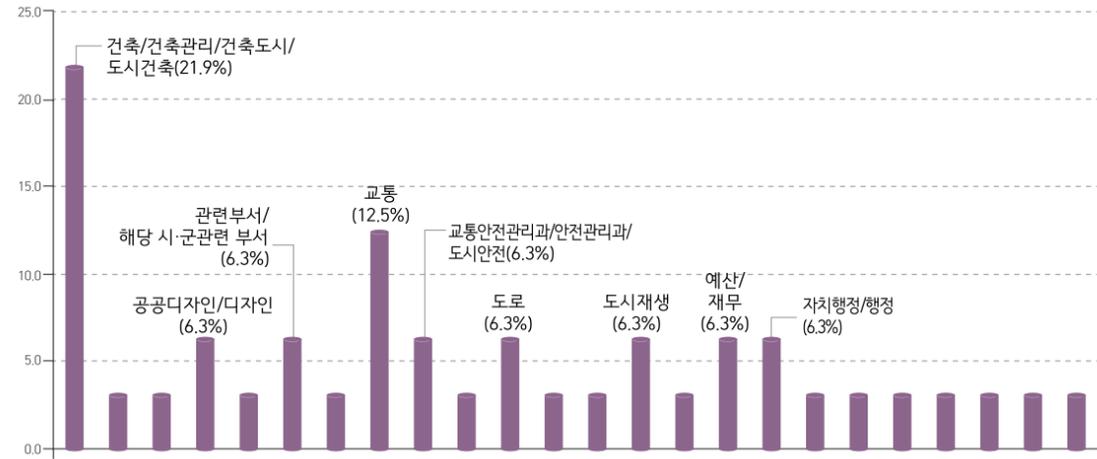
▲ [그림 4-3] 협업내용(복수)(경관/디자인)

타 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부서 간 협업 진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5%로 경관/디자인 담당자들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협업 대상 부서는 건축/건축관리 부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교통 부서, 이 외에도 도시재생이나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협업 내용은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와 동일하게 사업기획 시 협의회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협력사업 추진, 이외에도 심의 등 디자인 지원이나 행정사항 협의, 수목식재, 인허가 등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부서별로는 건축/도시/주택 부서, 농어업/농어촌 부서에서 심의 등 디자인지원에 관한 협업을 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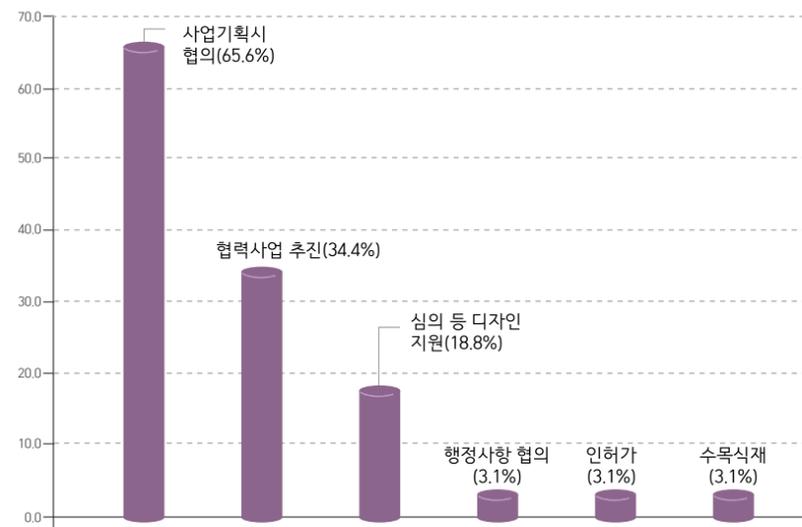
▼ [표 4-14] 사업추진 시 부서 간 협업 진행 여부(타 부서)

(단위 : 명, %)

| 구분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
| 전체 | (70) | 45.7 | 54.3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26) | 46.2 | 53.8 |
| | 농어업/농어촌 | (16) | 50.0 | 50.0 |
| | 건설/도로 | (7) | 57.1 | 42.9 |
| | 경제/자치 | (16) | 31.3 | 68.8 |
| 기타 | (5) | 60.0 | 40.0 | |



▲ [그림 4-4] 협업진행 부서(복수)(경관/디자인)



▲ [그림 4-5] 협업내용(복수)(타 부서)

▼ [표 4-15] 협업 내용(그렇다 답한 경우)(복수)(타 부서)

(단위 : 명, %)

| 구분 | 사례수 | 사업기획시 협의 | 협력사업 추진 | T/F팀 및 협의회 구성 | 심의 등 디자인 지원 | 기타 | |
|----------|----------|----------|---------|---------------|-------------|------|-----|
| 전체 | (32) | 65.6 | 34.4 | - | 18.8 | 9.4 | |
| 소속 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12) | 75.0 | 25.0 | - | 33.3 | 8.3 |
| | 농어업/농어촌 | (8) | 75.0 | 50.0 | - | 12.5 | - |
| | 건설/도로 | (4) | 25.0 | 25.0 | - | - | 5.0 |
| | 경제/자치 | (5) | 60.0 | 40.0 | - | - | - |
| | 기타 | (3) | 66.7 | 33.3 | - | 33.3 | -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의 74%가 현재 타 부서와 협업하고 있으나, 향후 협업에 대한 의향은 응답자 모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타 업무 담당자의 경우 약 45%가 현재 타 부서와 협업을 하고 있으나, 경관/디자인 부서와의 협업 의향은 3명을 제외한 96%가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 [표 4-16] 타 부서와의 협업 의향(경관/디자인)

(단위 : 명, %)

| 구분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 전체 | (31) | 1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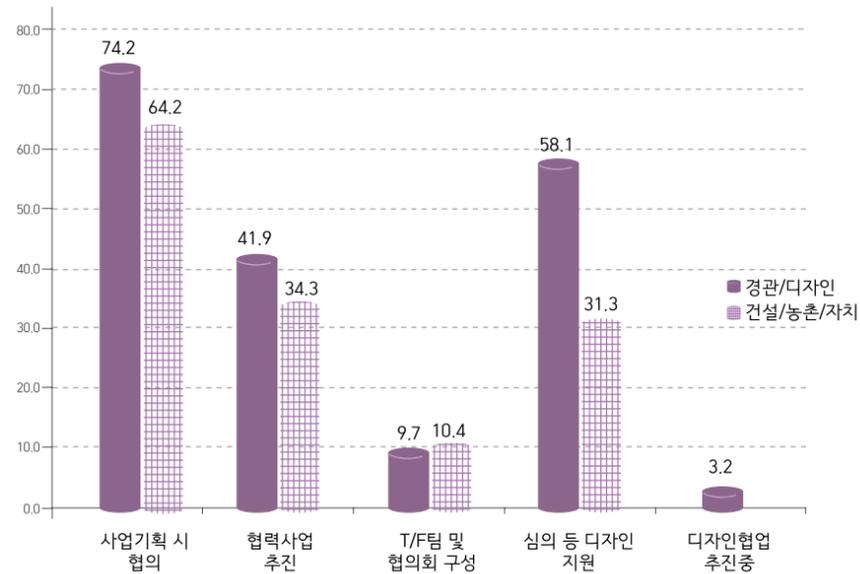
▼ [표 4-17]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부서와의 협업 의향(타 부서)

(단위 : 명, %)

| 구분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
| 전체 | (70) | 95.7 | 4.3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26) | 96.2 | 3.8 |
| | 농어업/농어촌 | (16) | 87.5 | 12.5 |
| | 건설/도로 | (7) | 100.0 | - |
| | 경제/자치 | (16) | 100.0 | - |
| | 기타 | (5) | 100.0 | - |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은 향후 협업을 하게 된다면 현재 협업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기획 시 협의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심의 등 디자인지원과 T/F팀 및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협업하고 있는 비율보다 의향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심의 등 디자인지원과 T/F팀 및 협의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타 업무 담당자들은 향후 경관/디자인 관련 부서와 협업한다면 그 내용으로 역시 사업기획 시 협의가 가장 많았고, 협력사업 추진, 심의 등 디자인지원으로 현재 하고 있는 협업내용과 동일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심의 등 디자인지원 협업 의향에 대한 응답률은 현재 협업내용 실태와 비교해 봤을 때 응답한 모든 부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F팀 및 협의회 구성에 대한 협업에 대하여 건축/도시/주택 부서, 농어업/농어촌 부서에서 현재 협업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업 의향을 보이고 있어 이것 역시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4-6] 향후 타 부서와 협업 의향 내용(복수)

▼ [표 4-18] 향후 타 부서와 협업 의향 내용(복수)(경관/디자인)

| 구분 | 사례수 | 사업기획 시 협의 | 협력사업 추진 | T/F팀 및 협의회 구성 | 심의 등 디자인 지원 | 기타 |
|----|------|-----------|---------|---------------|-------------|-----|
| 전체 | (31) | 74.2 | 41.9 | 9.7 | 58.1 | 3.2 |

▼ [표 4-19] 향후 경관·디자인 관련 부서와 협업 의향 내용(복수)(타 부서)

| 구분 | 사례수 | 사업기획 시 협의 | 협력사업 추진 | T/F팀 및 협의회 구성 | 심의 등 디자인 지원 | 기타 | |
|---------|----------|-----------|---------|---------------|-------------|------|---|
| 전체 | (67) | 64.2 | 34.3 | 10.4 | 31.3 | -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25) | 52.0 | 36.0 | 16.0 | 40.0 | - |
| | 농어업/농어촌 | (14) | 71.4 | 28.6 | 21.4 | 28.6 | - |
| | 건설/도로 | (7) | 71.4 | 28.6 | - | 28.6 | - |
| | 경제/자치 | (16) | 62.5 | 37.5 | - | 18.8 | - |
| | 기타 | (5) | 100.0 | 40.0 | - | 40.0 | - |

4) 다양한 분야 간 연계 측면

① 전문가 활용 및 구성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은 대부분 사업추진 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타 업무 담당자들은 반 이상이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치 부서 업무 담당자들이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표 4-20] 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활용(경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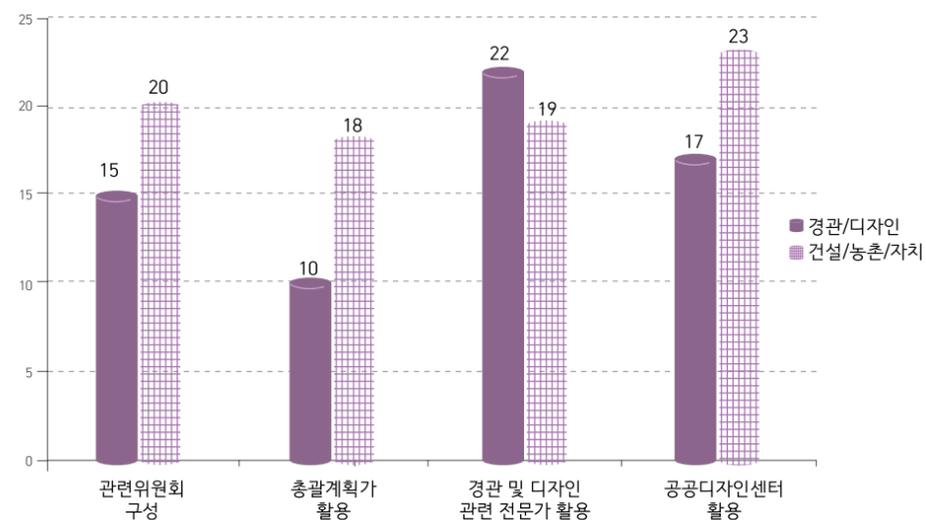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
| 전체 | (31) | 90.3 | 9.7 |

▼ [표 4-21] 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활용(타 부서)

| (단위 : 명, %) | | | | |
|-------------|----------|------|--------|------|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
| 전체 | (70) | 48.6 | 51.4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26) | 50.0 | 50.0 |
| | 농어업/농어촌 | (16) | 56.3 | 43.8 |
| | 건설/도로 | (7) | 57.1 | 42.9 |
| | 경제/자치 | (16) | 25.0 | 75.0 |
| | 기타 | (5) | 80.0 | 20.0 |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은 28명 중 경관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활용이 22명으로 가장 많으며,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 관련 위원회 구성 순으로 많다.

반면, 타 업무 담당자들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34명 중 공공디자인센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23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보다 총괄계획가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부서별 특징을 살펴보면, 건축/도시/주택 부서, 건설/도로 부서 업무 담당자들은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농어업/농어촌 부서 담당자들은 관련위원회 구성과 경관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 [그림 4-7] 전문가 활용(복수)

▼ [표 4-22] 전문가 활용 방법(복수)(타 부서)

| (단위 : 명, %) | | | | | |
|-------------|----------|----------|--------------------|------------|------|
| 구분 | 관련위원회 구성 | 총괄계획가 활용 | 경관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활용 | 공공디자인센터 활용 | |
| 전체 | (20) | (18) | (19) | (23)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7) | (7) | (9) | (11) |
| | 농어업/농어촌 | (5) | (3) | (4) | (3) |
| | 건설/도로 | (2) | (2) | (1) | (4) |
| | 경제/자치 | (3) | (3) | (3) | (2) |
| | 기타 | (3) | (3) | (2) | (3) |

활용하는 전문가 분야를 살펴보면,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의 경우 건축분야가 6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농촌/도시계획 분야와 시각디자인 분야가 많다.

타 업무 담당자들은 조경 분야 전문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촌/도시계획, 건축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부서별로 보면 건축/도시/주택 부서에서는 건축과 조경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농어업/농어촌 부서에서는 농촌/도시계획과 조경 분야 전문가를, 건설/도로 부서에서는 건축과 조경, 농촌/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즉, 건축, 조경, 농촌/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의 경우 부서 구분 없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으나, 산업디자인이나 시각디자인 분야 전문가는 건축/도시/주택 이외의 부서에서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주민참여 분야 전문가는 건축/도시/주택 부서 이외의 모든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23] 전문가 구성 분야(복수)(경관/디자인)

| (단위 : 명, %) | | | | | | | | |
|-------------|------|------|------|---------|--------|--------|-------|-----|
| 구분 | 사례수 | 건축 | 조경 | 농촌/도시계획 | 산업 디자인 | 시각 디자인 | 주민 참여 | 기타 |
| 전체 | (28) | 64.3 | 32.1 | 46.4 | 39.3 | 42.9 | 17.9 | 3.6 |

▼ [표 4-24] 전문가 구성 분야(복수)(타 부서)

| (단위 : 명, %) | | | | | | | | |
|-------------|----------|------|------|---------|-------|-------|------|------|
| 구분 | 사례수 | 건축 | 조경 | 농촌/도시계획 | 산업디자인 | 시각디자인 | 주민참여 | 기타 |
| 전체 | (34) | 44.1 | 52.9 | 47.1 | 5.9 | 11.8 | 14.7 |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13) | 76.9 | 61.5 | 38.5 | 15.4 | 15.4 | - |
| | 농어업/농어촌 | (9) | 11.1 | 44.4 | 88.9 | - | - | 22.2 |
| | 건설/도로 | (4) | 50.0 | 50.0 | 50.0 | - | - | 25.0 |
| | 경제/자치 | (4) | 25.0 | 25.0 | 25.0 | - | 50.0 | 25.0 |
| | 기타 | (4) | 25.0 | 75.0 | - | - | - | 25.0 |

② 경관 및 디자인 전문가 활용과 구성 의향

전문가 활용 의향에 대해서 현재 대부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은 모두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 한편, 타 업무 담당자들은 현재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관 및 디자인 전문가 활용 의향이 90%로 높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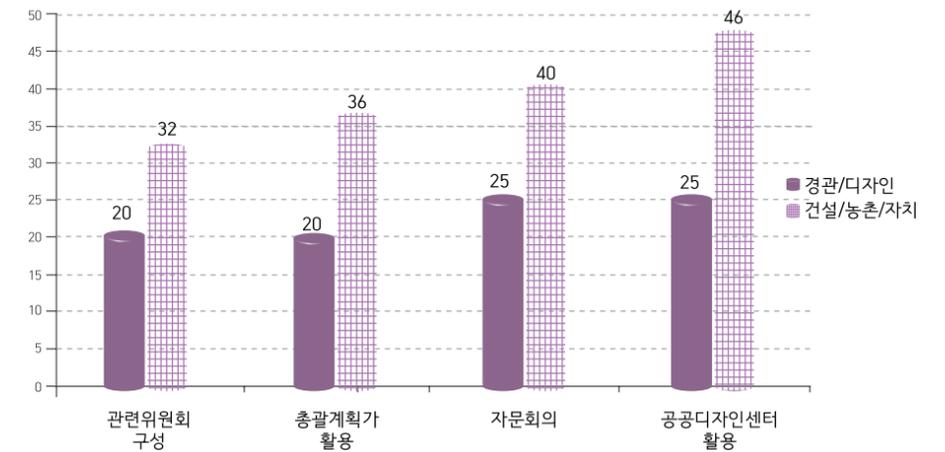
또한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은 현재보다 특히 공공디자인센터 및 자문회의의 활용, 그리고 총괄계획가 활용에 대한 의향이 높으며, 타 업무 담당자들은 경관 및 디자인 전문가로서 공공디자인센터와 자문회의의 활용 의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서 상관없이 공공디자인센터 활용 의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 [표 4-25] 향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활용 의향(경관/디자인)

| (단위 : 명, %) | | | |
|-------------|------|-------|----|
| 구분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전체 | (31) | 100.0 | - |

▼ [표 4-26] 향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활용 의향(타 부서)

| (단위 : 명, %) | | | | |
|-------------|----------|------|-------|------|
| 구분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 전체 | (70) | 90.0 | 10.0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26) | 88.5 | 11.5 |
| | 농어업/농어촌 | (16) | 87.5 | 12.5 |
| | 건설/도로 | (7) | 100.0 | - |
| | 경제/자치 | (16) | 87.5 | 12.5 |
| | 기타 | (5) | 100.0 | - |



▲ [그림 4-8] 향후 경관 및 디자인 전문가 활용 방법(복수)

▼ [표 4-27] 향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활용 방법(복수)(타 부서)

(단위 : 명, %)

| 구분 | 관련위원회 구성 | 총괄계획가 활용 | 자문회의 | 공공디자인센터 활용 |
|---------|----------|----------|------|------------|
| 전체 | (32) | (36) | (40) | (46)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14) | (14) | (16) |
| | 농어업/농어촌 | (6) | (8) | (7) |
| | 건설/도로 | (3) | (3) | (3) |
| | 경제/자치 | (6) | (9) | (10) |
| | 기타 | (3) | (2) | (4) |

향후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구성 의향을 살펴보면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참여와 조경 분야 전문가 구성 의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타 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역시 현재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참여와 산업/시각디자인 분야 전문가 구성 의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민참여 분야 전문가 활용은 현재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건축/도시/주택 부서 담당자들의 의향이 높아졌으며, 산업/시각디자인 분야 전문가 활용은 현재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은 농어업/농어촌, 건설/도로, 경제/자치 부서 담당자들의 의향이 높아졌다. 농어업/농어촌 부서 담당자들의 경우 농촌/도시계획과 조경 분야 전문가를 기존처럼 활용하면서, 시각디자인이나 건축,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건설/도로 부서 담당자들은 조경 분야 전문가를 기존처럼 활용하면서 농촌/도시계획과 시각 디자인 분야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경관/디자인, 건축/도시/주택 부서 담당자들은 주민참여와 조경 분야의 전문가를, 그 외의 업무 담당자들은 건축이나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활용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 의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4-28] 향후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구성 의향(경관/디자인)

(단위 : 명, %)

| 구분 | 사례수 | 건축 | 조경 | 농촌/도시계획 | 산업 디자인 | 시각 디자인 | 주민 참여 | 기타 |
|----|------|------|------|---------|--------|--------|-------|-----|
| 전체 | (31) | 74.2 | 51.6 | 54.8 | 38.7 | 51.6 | 41.9 | 3.2 |

▼ [표 4-29] 향후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구성 의향(타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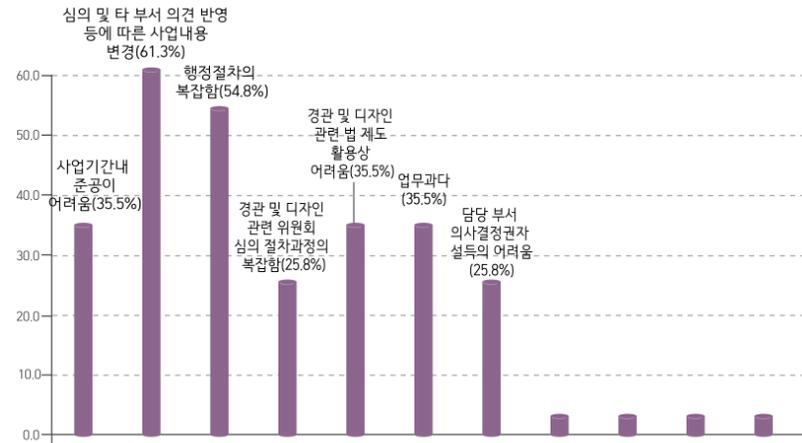
(단위 : 명, %)

| 구분 | 사례수 | 건축 | 조경 | 농촌/도시계획 | 산업 디자인 | 시각 디자인 | 주민 참여 | 기타 | |
|---------|----------|------|------|---------|--------|--------|-------|------|-----|
| 전체 | (63) | 38.1 | 49.2 | 41.3 | 9.5 | 17.5 | 25.4 | 1.6 | |
| 소속부서 분야 | 건축/도시/주택 | (23) | 65.2 | 60.9 | 21.7 | 8.7 | 8.7 | 17.4 | - |
| | 농어업/농어촌 | (14) | 28.6 | 57.1 | 85.7 | 7.1 | 28.6 | 21.4 | 7.1 |
| | 건설/도로 | (7) | 28.6 | 42.9 | 71.4 | - | 14.3 | 14.3 | - |
| | 경제/자치 | (14) | 7.1 | 21.4 | 21.4 | 14.3 | 21.4 | 50.0 | - |
| | 기타 | (5) | 40.0 | 60.0 | 20.0 | 20.0 | 20.0 | 2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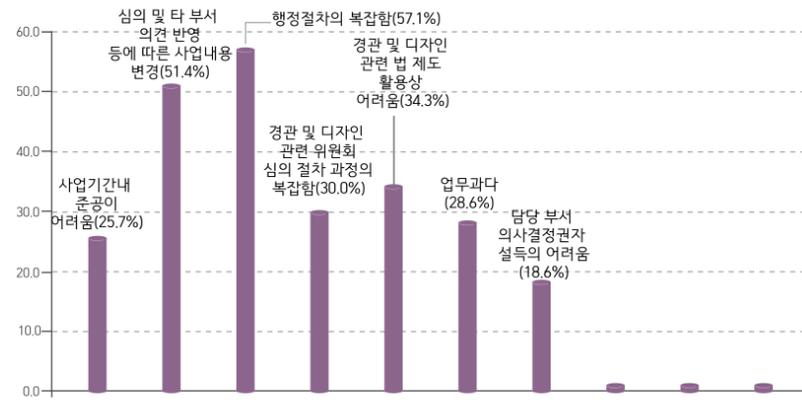
5) 향후 타 사업 및 부서 간 협력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향후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력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우선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는 「심의 및 타 부서 의견 반영 등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행정절차의 복잡함」, 「사업기간내에 준공이 어려움」, 「경관 및 관련 법 제도 활용상 어려움」, 「업무과다」, 「담당 부서의 의사결정권자 설득의 어려움」,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위원회 심의 절차과정의 복잡함」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즉, 타 사업과 연계 또는 부서와 협력했을 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사업내용의 변경과 기간 연장, 행정절차의 어려움과 업무과다 등이라 할 수 있다.

타 업무 담당자들 역시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가 우려하는 문제점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복잡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이 「심의 및 타 부서 의견 반영 등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경관 및 관련 법 제도 활용상 어려움」,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위원회 심의 절차과정의 복잡함」, 「업무과다」, 「사업기간내에 준공이 어려움」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 [그림 4-9] 향후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력 시 예상되는 어려움(복수)(경관/디자인)



▲ [그림 4-10] 향후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력 시 예상되는 어려움(복수)(타 부서)

타 부서 사업과의 연계 및 부서 간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의 역할과 담당 부서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가 우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디자인 전문직을 총괄하여 각 부서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역할과 더불어 담당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연계 협력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협의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은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이나 시·군에서 디자인 사업추진 시 기준이 되는 진단시스템 등 디자인 지원 제도를 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타 부서 업무 담당자들은 조례의 개정이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 제도에 의해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즉,

자율적인 방법과 강제적인 방법에서의 추구하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부서 간 정보교류를 위한 관련 분야 연구회 운영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인력충원이나 담당자의 소통능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표 4-30] 타 부서 사업과의 연계 및 부서 간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우선순위)

| 항목 | 경관 및 디자인 업무 담당자 | 건설 농촌 자치행정부서 담당자 |
|---|-----------------|------------------|
| 조례의 개정 (심의대상, 통합계획 수립, 공동위원회 운영 등) | 5 | 3 |
| 별도의 규정 마련 | 6 | 4 |
| 담당 부서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 구축 | 2 | 1 |
| 디자인 전담부서(도/해당 시군)의 역할 (총괄조직 구성, 디자인 전문직 총원 등) | 1 | 2 |
| 디자인 지원 제도 활성화 및 확대 (공공디자인센터의 컨설팅, 디자인 진단시스템 등) | 3 | 5 |
| 사업 및 부서 간 협력 지침 또는 매뉴얼 개발 | 4 | 6 |
| 관련 분야 연구회 운영 (부서 간 정보교류, 의견교환 등) | 7 | 7 |
| 인력충원 | 8 | - |
| 담당자의 소통능력 | - | 8 |

* 각 항목에 대하여 1,2,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높은 순으로 하였음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업에 대한 기타 의견은 제도, 행정시스템, 전담조직의 역할, 전문가 활용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서 디자인 전담부서의 역할 및 담당 부서 의사결정권자 참여 협의체계 구축보다 후 순위이긴 했으나, 타 업무 담당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제도적 부분이 여기서도 언급되었다.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이나 경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나 부서 간 협업을 위한 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또한 앞서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업 시 우려되는 것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던 행정 시스템이다. 연계 및 협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업무과다나 사업기간 연장 우려 등 행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었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심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사업 담당자들의 경관 및 디자인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전담조직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전담조직으로서 연계 및 협업을 위한 명확한 역할 부여, 그리고 타 부서와의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전제로 한 조정 역할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전담조직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공공디자인센터의 활용을 통해 사업 간 연계 또는 부서 간 협업을 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다. 즉,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또는 공공디자인 센터의 활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분야 간 연계 협력을 하고자 함이라 볼 수 있다.

▼ [표 4-31]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력에 대한 의견

| 항목 | 경관 및 디자인 업무 담당자 | 건설 농촌 자치행정부서 담당자 | 구분 |
|---|--------------------|---------------------|-----------|
|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디자인, 경관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 | | 제도 |
| 부서 간 칸막이 극복을 위한 조례 등 강제 규정 마련 필요 | | ● | |
| 부서별 사업전문가 활용하여 조례안 제개정 필요 | | ● | |
| 각자의 업무량이 많아 협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의견조율의 어려움이 많음 | ● | | 행정 시스템 |
| 부서 간 디자인 관련 연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면 좋을 듯 함 | ● | | |
| 촉박하지 않게 여유있는 협업 요청 | ● | | |
|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시 각 사업부서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은 매우 의미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를 어떠한 조례나 행정절차(의무)로 묶는다면 사업추진 지연 및 담당자들의 업무과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함 | | ● | |
| 디자인 계획(심의) 시 실제 건축설계 시공의 괴리감이 없어야 함 | | ● | |
| 사업부서 업무 특성상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이 예상됨 | | ● | |
| 사업 담당자 의식교육 | ● | | |

| 항목 | 경관 및 디자인 업무 담당자 | 건설 농촌 자치행정부서 담당자 | 구분 |
|--|--------------------|---------------------|----------------|
| 공공디자인센터의 협조를 받아 사업추진하고자 했었던 적이 있으나 협조 범위의 제한성, 사업지연 등의 어려움으로 무산된 바 있음. 좋은 디자인이 적용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등이 개선되었으면 함 | | ● | 행정 시스템 |
| 기획, 기술설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협력해야 하는 업무방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함 | ● | | 전담 조직 역할 |
| 경관 및 디자인 담당부서의 고립된 결정이 아닌 타 부서 협력에 의한 합리적 결정이 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 ● | |
| 전담부서 신설 | | ● | |
| 외부 전문가 영입 | ● | | 전문가 활용 |
| 많은 업무에서 관련 전문가 활용이 필요함 | | ● | |
| 사업구상 및 계획단계부터 원근경에 대한 주변 지역과의 경관에 대해 전문가, 공공디자인센터 활용방안 모색 | | ● | |
| 전문가가 의사결정 필요 | | ● | |
| 전문가와 협력 필요 | | ● | |
|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사업과 직접적 연계사업에 집중 필요 | | ● | - |

3. 인터뷰조사 결과 분석

3.1 경관/디자인 주무부서 담당자

충청남도 주무부서 담당자, 디자인 전담조직이 있는 A시와 전담조직이 없는 B군의 주무부서 담당자의 총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법 제도의 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에서는 타 부서 사업 및 업무 연계를 위해 총괄계획가와 경관심의의 제도적 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 그리고 타 부서 담당자가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시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남의 디자인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제도적 지원의 효과 확보를 위한 시·군 담당자들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역시 담당자들 대상 디자인 개념 및 심의운영, 공무원 대상 디자인협업의 필요성 등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법 제도적 차원에서 교육 지원의 의무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디자인 전담조직이 있는 A시의 경우 디자인협업 업무가 신규사무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내부방침 및 조례에서의 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법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B군의 경우 디자인 전문직이 한 명 있지만 옥외광고물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타 부서와 협업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타 부서 심의대상 사업 운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심의대상을 확대하기보다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디자인 사업 효과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즉, 사업 특성에 따라 심의대상 확대와 함께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디자인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디자인협업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의사소통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디자인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도와 A시의 경우 디자인협업이 업무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에서는 내포신도시에서의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협업 부서와의 명확한 사무분장에 의해 진행 또는 총괄계획가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면, A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 사업 담당자의 선택사항 또는 의사결정권자의 결재 시 진행되는 방식의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디자인 연계 및 협업을 제도적 틀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사업 담당자의 의지와 디자인 마인드의 자발성에 의한 방식의 차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디자인협업 시 사업기간 연장 및 예산 증액, 추가사업 발생 등에 대한 사업 담당자의 우려를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반면, 디자인 전문조직이 없는 B군의 경우 타 부서 사업의 심의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타 부서 담당자와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정도이며 그 외의 타 부서와 협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디자인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 및 선택적인 방식으로 타 부서에 디자인 지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디자인 전담조직이 아닌 디자인 전문직 한 명만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실정으로, 디자인협업 업무는 할 엄두도 못 내는 것이 현실이라 볼 수 있다. 즉, 디자인협업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사업 담당자들의 디

자인 마인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식향상을 위한 방안과 함께 강제성을 가진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분야 간 연계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도 공공디자인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추진 시 다양한 분야 간 연계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문제점으로 양적이고 미적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어 분야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역량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추진,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S/W사업과의 연계 또는 주민역량이 갖춰진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개선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공모사업 추진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디자인 주무부서에서 조차 디자인 사업추진 시 다양한 분야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 지원 및 디자인 조직체계 개선과 함께 디자인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간 연계 시범 적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표 4-32] 사업 담당자 인터뷰 조사(경관/디자인 주무부서)

| 구분 | 도 | A시 | B군 |
|----------|--|---|--|
| 법 제도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시·군 중에서는 논산과 천안이 디자인 컨트롤이 가능한 조직 - 단위사업의 경우 심의의 효과가 있었으나, 지자체마다 눈높이가 다르므로, 심의업무 담당자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정책팀이 2017년에 신설되면서 디자인협업이 신규사무로 지정, 각 부서의 디자인 포함 사업 지원 - 디자인정책팀과 디자인행정팀으로 구분, 디자인정책팀은 관련 계획 수립/디자인 기획 및 전략수립/정책개발을 담당, 디자인행정팀은 조례 및 운영회 등 제도지원 업무 - 전담조직 구성은 필요성을 해당 시·군의 이해가 전제,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무원 교육 필요 - 내부방침 또는 조례에서 디자인 협업의 의무화가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전담팀(팀장, 팀원2명의 3명) 구성 필요 - 디자인분야에 중요한 위치 줄 필요, 팀 조직 구성 시 요청했으나 무산,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 - 전담조직의 중요성 인식, 디자인 전문직이 한 명 있지만 신규직원이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 옥외광고물 업무가 주, 디자인 업무는 부수적인 상황으로 타 부서와 협업은 실질적으로 어려움 - 전담팀이 있다면 타 부서와의 컨트롤, 규제나 가이드라인 관리를, 필요 시 공공디자인 컨설팅 이용 - 디자인 질 향상을 위해 타 부서 사업 심의 운영중, 심의대상 확대보다 전담조직 구성에 의한 협업 또는 컨설팅 활용이 효율적 - 담당자 대상 경관과 공공디자인 개념, 심의 대상 및 운영 등 교육 필요 |

| 구분 | 도 | A시 | B군 |
|-------------|--|---|--|
| 의사소통 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부서 또는 시·군과 연계하는 것이 하나의 업무 - 타 부서 사업 경관심의 지원, 연구 보고회 등에 참석하여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사업 담당자들은 행정절차의 어려움보다 협업에 의해 사업기간 연장 및 예산추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 부서 간 연계는 무조건 필요, 무엇보다 담당자가 협업의 중요성과 효과 인지가 필요(논산의 경우) - 시·군은 모든 의사결정을 단체장이 함으로써 실패한 사례가 많음. 이는 부서 간 연계 부재에 따른 것 - 협업 시, 사업 기획단계에서 담당 부서, 담당자의 역할을 사업추진 단계별로 명확하게 사무분장 제시가 중요 - 시·군 전담조직은 문제해결 역할, 도 전담조직은 디자인 정책개발과 사업을 통해 시·군별 디자인 수준을 맞춰주는 역할이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 사업 추진과정 중간에 디자인이 추가되는 방식,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사업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 - 의사결정권자의 결재과정에서 디자인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원에는 한계 - 사업 담당자가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추가사업이나 예산증액이 안되도록) - 사업 담당자의 의지가 있어야 디자인협업 진행, 디자인 담당자의 역할과 권한 축소 우려 - 디자인은 하지 않아도 될 일,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사업 담당자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장 중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 사업 담당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사업 대상지 발굴 시 참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 타 부서와의 업무협업은 거의 안하는 실정 - 타 부서 사업들 중 도비 포함 사업들의 심의 지원 - 사업추진 과정상 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너무 많아, 디자인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행정절차가 추가되는 것을 싫어함 - 협업 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클 것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하여 기획 단계부터 회의를 통해 컨셉 및 방향 설정 등 디자인 컨트롤 역할 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사업이 시설사업이라는 인식으로 양적이고 미적인 결과물로 평가하는 문제를 의식교육으로 개선 필요 - 사업 전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이 공모사업 주고, 관은 지원하는 형식이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 공모사업 방식을 이원화 할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이 필요한 부서는 매우 많음 - 디자인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역량 및 디자인 마인드 부족에 의해 의견 수렴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 S/W 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디자인 아카데미 사업은 1회에 그치므로 마을현황을 반영한 주민 공감 형성은 미흡 - 디자인 전담조직 구성이 어렵다면 기획실에서 T/F팀 운영이 필요 |
| 다양한 분야 간 연계 | | | |

3.2 건설/농촌/자치행정 주무부서 담당자

충청남도 자치행정 부서 담당자, C시의 농촌 부서 담당자와 D시의 건설 부서 담당자의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법 제도의 지원 측면에서 보면, 부서 간 협업을 위해 공람 등 전산 시스템은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당자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도 담당부서의 방침에 의해 협업하는 강제성 부여와 함께 디자인 전문직의 총괄조정 역할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자문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디자인 연계 및 협업을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전문가 활용을 위한 제도방안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체계 구축 측면에서 보면, 우선 자치행정 담당 부서에서는 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는 하나 협업을 하고 있지 않는 반면, C지자체의 농촌 부서에서는 도시정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디자인 관련 사업은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을 받고 있다. 이는 도시정책부서에 디자인 전담직이 디자인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D군 건설 부서의 경우 담당 사업이 타 부서와 업무 인계가 필요하므로 설계에 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 중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가 있어도 디자인부서와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 이유로 디자인 전담직이 없어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해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 컨설팅을 받고 있었다. 또한 사업 담당자는 현장조사, 사업 담당자-전문가(공공디자인센터)-설계사-주민 간 의견조율의 디자인컨설팅 방식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D군의 경우 디자인컨설팅에 의해 디자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업 담당자의 자발성보다는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에 의한 것으로서, 디자인협업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자의 의지 및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C시 인터뷰에서 역시 의사결정권자 지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듯이 의사결정권자들의 디자인협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실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협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 또는 T/F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듯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분야 간 연계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타 부서 사업을 서로 공유하지 않아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이 역시 의사결정권자의 지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 등 의무적인 제도가 없으면 부서 및 사업 간 연계가 어려운 조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분야 간 연계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차원에서의 부서별 추진사업 공유 시스템 마련 및 경관 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표 4-33] 사업 담당자 인터뷰 조사(건설/농촌/자치행정 주무부서)

| 구분 | 도(자치행정) | C시(농촌) | D군(건설) |
|-------------|---|---|---|
| 법 제도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신청 시 타 부서 공람하는 방법도 있으나 관심있는 담당자만 볼 것이며 대체로 관심 없음 - 후속지원 사업 예시로 디자인 관련 사업 홍보, 시·군 관련 부서와 협업하도록 사업계획에 명시하는 방법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내 전산에서 부서 간 협조 시스템화 하고 있지만 잘 활용하고 있지 않음 - 도 담당부서에서 공모사업 계획 수립 시 협업할 수 있도록 방침 필요 - 경관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데 향후 경관 또는 디자인 관련 교육 받을 의향 있으며, 주민들 역시 경관교육 필요 -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디자인 전문직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사업이 심의대상에 포함된다면 업무부담은 있으나,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설계사와 담당자와의 의견조율, 현장방문을 통한 자문을 해주는 공공디자인컨설팅 방식이 심의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 - 담당 사업에는 시공비만 예산으로 잡혀있으므로, 전문가 활용 예산을 수립하기에 행정절차가 복잡 |
| 의사소통 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을 하면 좋긴 하나, 실질적으로 타 부서 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현재 협업하고 있지 않음 - 예산 자체가 팀별로 구성, 담당 업무에 바빠 타 부서와 협업이 쉽지 않은 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시 도시정책부서와 협의 - 협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의사결정권자 역할이 중요 - 도 담당부서와 시·군 담당부서 간 한달에 한번씩 진행하고 있는 협의 시 디자인 주무부서도 참석 필요 - 부서 간 협업은 행정조직 구성이 가장 중요 - 관련 부서 팀장 T/F팀 구성, 한달에 한번 정도 정보공유기회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과 관련해서 협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타 부서와 업무 인계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부서와 설계에 관해 협의 진행 - 타 부서 사업과 연계를 위해 총괄 담당자가 필요하나, 부서별 맡은 업무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있음 - 사업추진 시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 공공디자인컨설팅이나 전문가 자문없이 진행할 경우 의사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게 됨 |
| 다양한 분야 간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사업이 S/W사업으로, 마을이 의지가 있다면 H/W디자인 사업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음 -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민 대상 교육내용이 중복된다는 것 인지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간 연계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경관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꼈으나 협업의 필요성 인지 - 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디자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 타 부서 사업과 연계추진에 대한 부담은 없으며, 의사결정권자의 지시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사업에서 디자인이 포함되는 것은 극히 일부, 팀내에 건축직이 있으므로 타 부서와의 협업 필요성은 느끼지 못함 - 디자인에 대하여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싶지만 디자인 전문직이 없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 공공디자인컨설팅이 유용 - 연계함에 따른 의견반영 및 행정절차의 어려움,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 등의 문제의 우려는 없음 - 충남도 또는 타 부서 사업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 |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사업 담당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는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타 업무 담당자들도 경관과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는 있으나,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응답한 많은 담당자들이 경관이나 디자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경관/디자인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이수 의무화 등을 통해 디자인 마인드 향상과 관련 법 제도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디자인 담당조직이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력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 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인터뷰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경관 및 디자인 관련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심의,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 등 관련 법 제도 활용에 대해서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은 활용도가 높다. 반면, 디자인과 밀접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사업 추진부서인 농어업/농어촌 부서, 건설/도로 부서 담당자들 중에서는 이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심의는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대상을 정해놓고 있지만,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은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해야 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디자인 질 향상과 정체성 정립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경관/디자인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타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 제도는 충남도의 별도 규정에 의해 디자인이 포함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가 자문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경관/디자인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타 관련부서에서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디자인 연계 및 협업 의향으로 심의 운영에 대한 응답이 많아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디자인 전담 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조직내에 디자인 전담직이 있다면 디자인 지원 협의 의향이 있다는 인터뷰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자인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협의를 위해서 디자인 전담 인력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 조직내에 디자인 전담직이 한 명 배치되어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 업무를 주로 하고 디자인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로, 디자인 관련 심의 운영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직내에 디자인 전담 직을 배치하되 옥외광고물 업무와 분리하여 디자인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행정조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체계 구축 측면에서 보면, 현재 부서 간 협업은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이 타 업무 담당자들보다 많이 하고 있으며, 주로 사업기획 시 협의나 심의 등 디자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이 지속 및 활성화됨으로써 디자인 질 향상과 지역의 정체성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이 사업내용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서 의사결정권자들의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사업기획 협의 및 심의의 협업을 통한 디자인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담당자들은 디자인의 중요성과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력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경과 기간 연장, 행정절차의 어려움과 업무과다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디자인협업 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사업 담당자들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또한 어디까지나 사업 담당자들의 선택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디자인 전담조직이 있는 지자체조차도 아직까지 디자인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며, 이는 곧 디자인 연계추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사업내용 및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의 기획단계에서 사업 및 부서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모든 부서 담당자들이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획단계에서 디자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앞서 언급한 의사결정권자의 협의체계 구성과 함께 디자인 전문조직의 역할 부여 및 강화를 위한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 간 연계 측면에서는, 사업 추진 시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은 대부분 활용하고 있으나, 타 업무 담당자들은 반 정도가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인터뷰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장기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대부분의 단위 사업들은 전문가 자문비나 디자인 설계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시공비만 책정하고 있다. 이에,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 제도를 알고 있는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내용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제도를 통해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 사업일지라도 전문가 자문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의 사업기획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비 또는 디자인 설계비를 책정하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주로 건축, 조경, 농촌/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은 주민참여 분야, 타 업무 담당자들은 산업 및 시각디자인 분야 전문가 활용이 낮다. 하지만 향후 전문가 활용 의향에서는 현재 활용이 낮은 분야 전문가 활용에 대한 의향이 높아, 디자인 관련 사업추진의 효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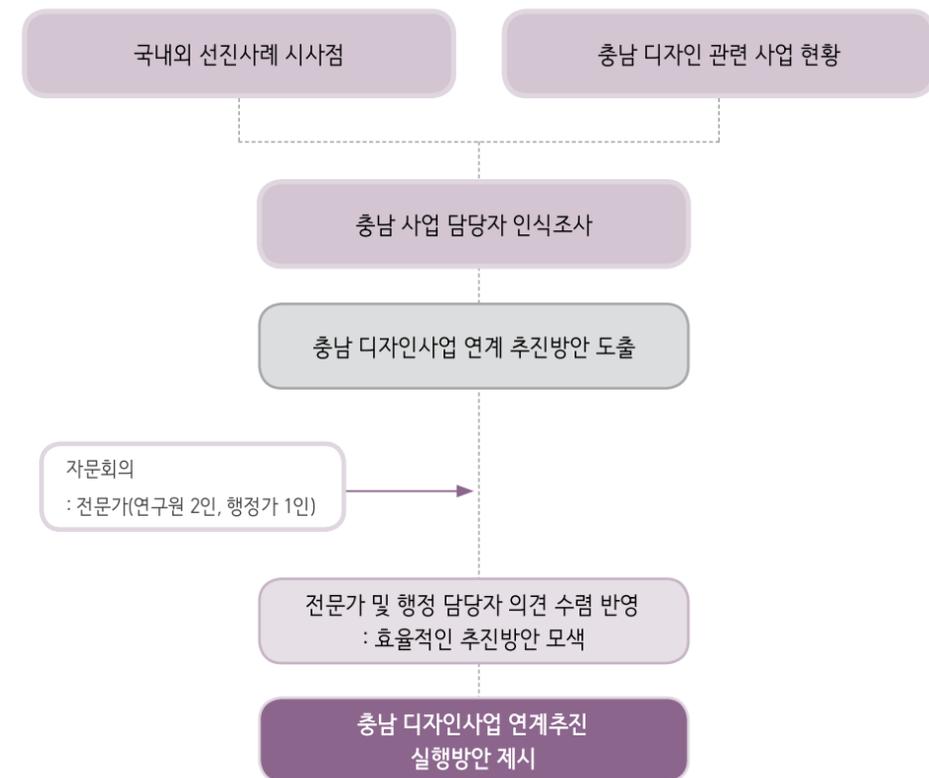
V.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방안

1. 추진방향

1.1 프로세스

앞에서 분석한 국내외 선진사례 시사점과 충남 디자인 관련 사업 현황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하고, 충남 디자인 관련 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충남 디자인 사업 연계 추진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인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업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충남 현황에 맞는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와 행정가의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림 5-1] 충남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도출 프로세스

1.2 기본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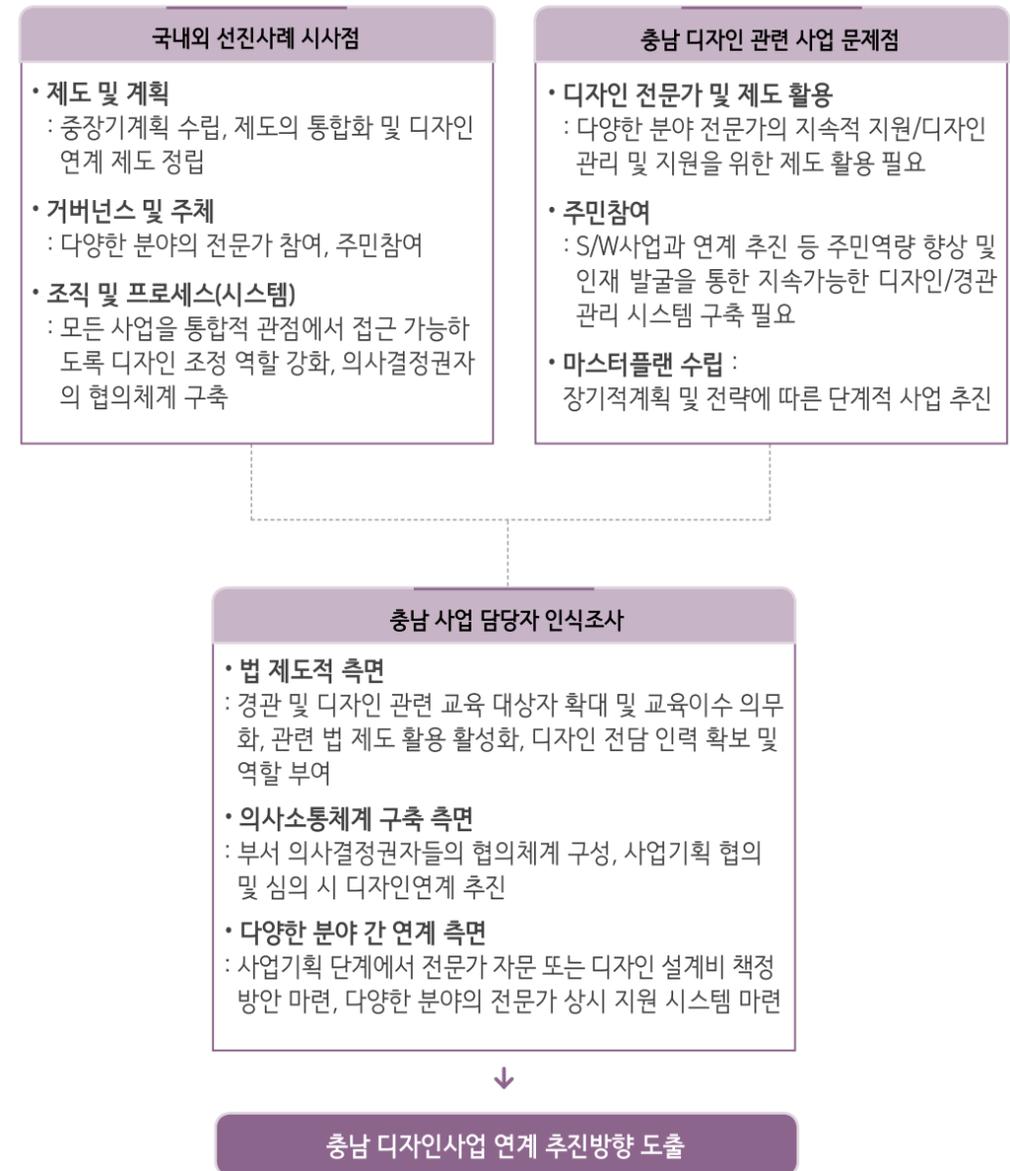
충남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디자인 관련 사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 디자인 제도 활용,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추진방식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 고베시와 서울시 서울로 7017사업 사례에서는 디자인 영역을 넓게 접근하여 통합적으로 디자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담당부서의 기획 조정 역할 부여, 정책 및 사업의 실행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권자를 중심으로 T/F팀 등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부서에서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남에서 역시 2009년부터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일부 지자체에도 디자인 전담팀이 구성된 곳이 있다. 이들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면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의 디자인 조정 역할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이 중요한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을 고려하여 이들이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획단계에서의 디자인 지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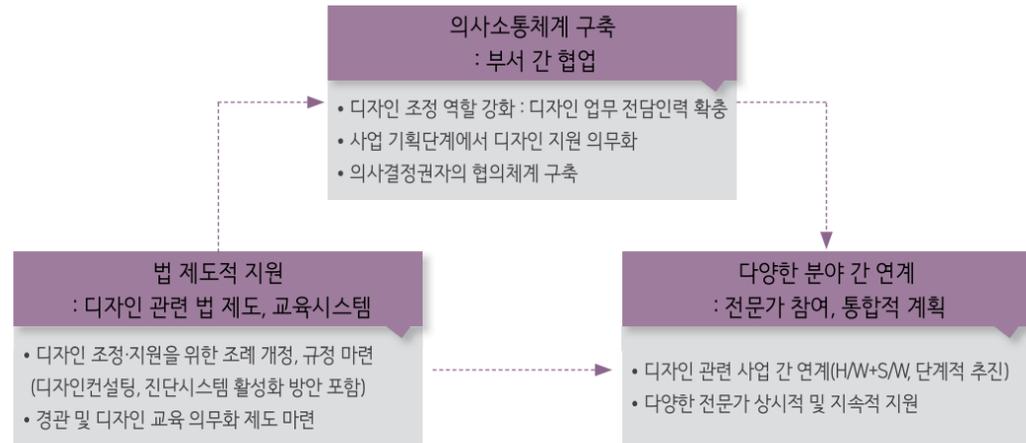
이는 충남 사업 담당자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건설/도로/주택, 농업/농어촌, 경제/자치행정 등 업무 담당자들 모두가 경관과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다. 하지만 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들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고, 활용상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 지원 및 다양한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사업기간 연장이나 추가예산 등에 대한 우려, 사업기획 시 전문가 활용계획 미수립 등 실질적으로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디자인 지원 확대와 더불어 디자인 업무 전담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이나 규정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즉, 관련 법 제도 활용 활성화와 함께 경관 디자인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 대상 확대, 사업 기획단계에서의 디자인 조정 역할 및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향으로서 3가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①디자인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사업 기획단계에서 디자인 지원을 의무화하면서 의사결정권자의 협의체계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체계 구축, ②이를 통해 디자인 관련 S/W사업과 H/W사업 간 연계 또는 단계적 추진, 다양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다양한 분야 간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③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조정 및 지원을 위한 법 제도 정비와 관련 교육 의무화 등 법 제도적 지원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 [그림 5-2] 충남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향 도출



▲ [그림 5-3] 충남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향

1) 의사소통체계 구축 : 부서 간 협업

디자인 사업 간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한 만큼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디자인 전담조직 및 전담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충남에는 충남도를 비롯하여 15개 시·군 중 2곳에만 디자인 전담조직이 있는 상황이며 대부분 디자인 전담직이 한 명 정도 배치되어 있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디자인 전담직이 있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디자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디자인 업무 전담인력을 각 시·군에 배치하도록 하고, 옥외광고물 업무와 구분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인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사업 기획단계인 의회 예결위 전단계에서 디자인 지원을 의무화하여 타 사업과의 연계가능 검토, 관련 법 검토, 디자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방법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조정 역할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행정시스템 여건 상 각 부서의 의사결정권자인 팀장 및 과장들 간 협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 부서 사업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폐쇄적인 행정조직 특성상 의사결정권자들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도 및 시·군에 부서장급 T/F팀을 구성하여 각 부서 사업을 공유하도록 하여, 디자인협회가 필요한 것들은 디자인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다양한 분야 간 연계 : 전문가 참여, 통합적 계획

디자인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 간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하며 이는 곧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함은 물론 사업 간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충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자인 관련 사업들은 H/W사업과 S/W사업을 단계적 및 상호 연계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물론 공모사업중에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 및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H/W사업과 S/W사업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지원되어야 사업구상단계부터 사업완료단계까지 사업목표에 맞는 방식과 내용으로 일괄되게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우선 충남에서 추진되는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들 중 단계별 또는 병행 추진하는 방식의 사업 간 연계,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가 일회성이 아닌 사업기획단계부터 사업 단계별로 필요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법 제도적 지원 : 디자인 관련 법 제도, 교육 시스템

충남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공공디자인조례 및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경관과 디자인에 대한 관리를 해 왔다. 충남은 공공디자인조례에 근거하여 충남공공디자인센터를 2009년에 설립하여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디자인 지원을 위한 디자인컨설팅 제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 차원의 통합디자인을 위한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2014년), 사전진단지표(2014년), 사후진단지표(2015년)를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홍성군에서는 홍성군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매뉴얼과 진단지표를 개발(2017년)하여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충남에서의 디자인 관리 및 지원은 법 조례에 의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과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 모두를 적용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충남의 현황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자인 관리 및 지원 관련 법 제도의 활용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관/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디자인 관리 및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 부서의 경우 디자인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충남도 훈령으로 디자인 요소가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건설 분야 사업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활용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경관/디자인 주무부서가 아닌 타 부서의 디자인 관련 사업 담당자들의 법 제도 활용도가 낮고 디자인은 부수적인 업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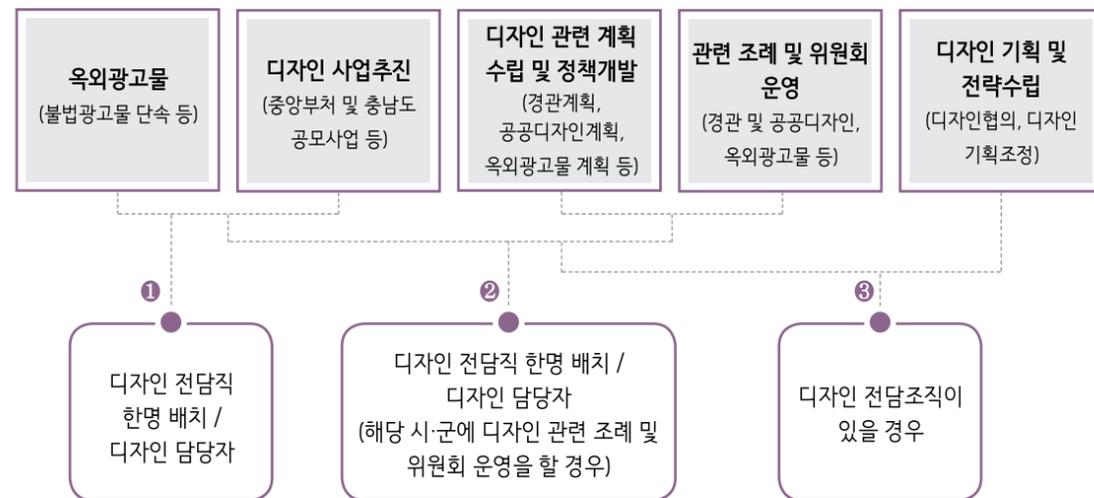
이에, 디자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 조례의 강제성 부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사업 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진단지표 및 디자인컨설팅과 같은 자율적 제도의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 역시 시급하다 할 수 있다.

2. 실행방안

2.1 의사소통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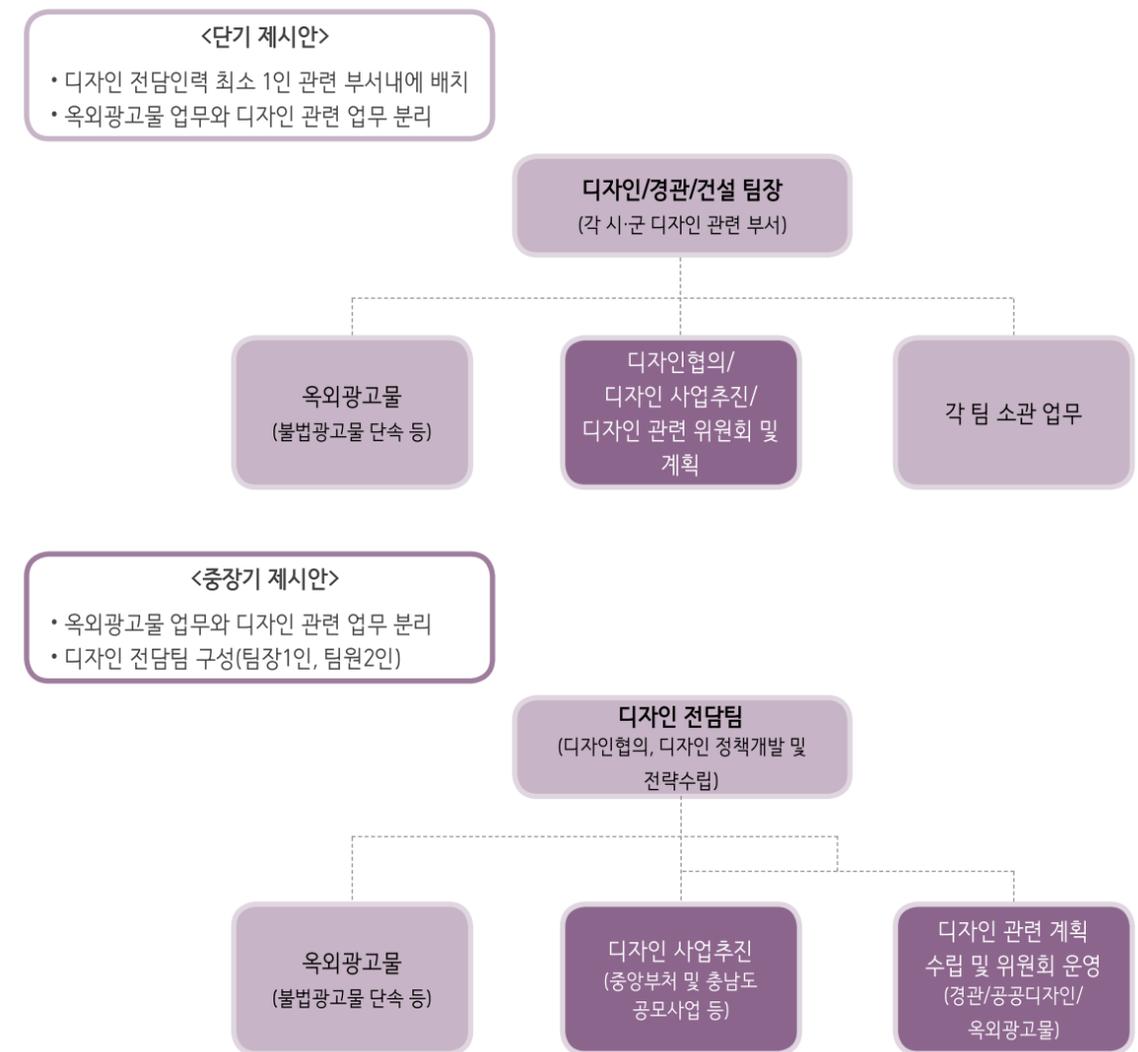
1) 디자인 전담인력 배치 및 업무

- 현재 충남 대부분 시·군에서는 디자인 전담인력이 한 명 배치되어 있거나 전무한 경우도 있으며,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업무를 주로 하고 디자인 업무는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
- 충남 15개 시·군 디자인 업무 및 조직 현황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옥외광고물 및 디자인 사업추진만 하는 경우(①), 해당 시·군에서 디자인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②의 경우와 같이 ①의 업무와 조례에 의한 위원회 운영 및 법정계획 수립 업무를 한 명이 담당하며, 대부분 이는 디자인 전담직 또는 시설직이 담당
- 3명 이상 인력의 디자인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팀장과 팀원으로 구성)에는 ③과 같이 ①과 ②의 업무, 그리고 디자인 기획 및 전략수립 업무까지 담당
- 각 시·군의 디자인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지원의 한계로 문제시되고 있는 디자인 전담인력의 디자인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



▲ [그림 5-4] 충남 시·군 디자인 업무 현황 유형(현재)

- 현재 디자인 전담인력이 전무한 시·군도 있으므로 우선 단기 제시안으로서 충남 15개 시·군에 최소 1인 이상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제시
- 단기 제시안에서는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내에 디자인 전담직을 배치하고, 디자인협의 및 사업추진, 디자인 관련 위원회 및 계획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옥외광고물 업무 전담인력 별도 구성
- 중장기적으로는 디자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디자인 사업추진 담당자 1인, 디자인 관련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담당자 1인, 옥외광고물 담당자 1인, 이를 총괄하면서 각 부서의 디자인조정을 하는 팀장 1인의 총3명 팀제 제시



▲ [그림 5-5] 충남 시·군 디자인 전담인력 배치 및 업무 제시안

2) 사업추진 단계별 디자인협의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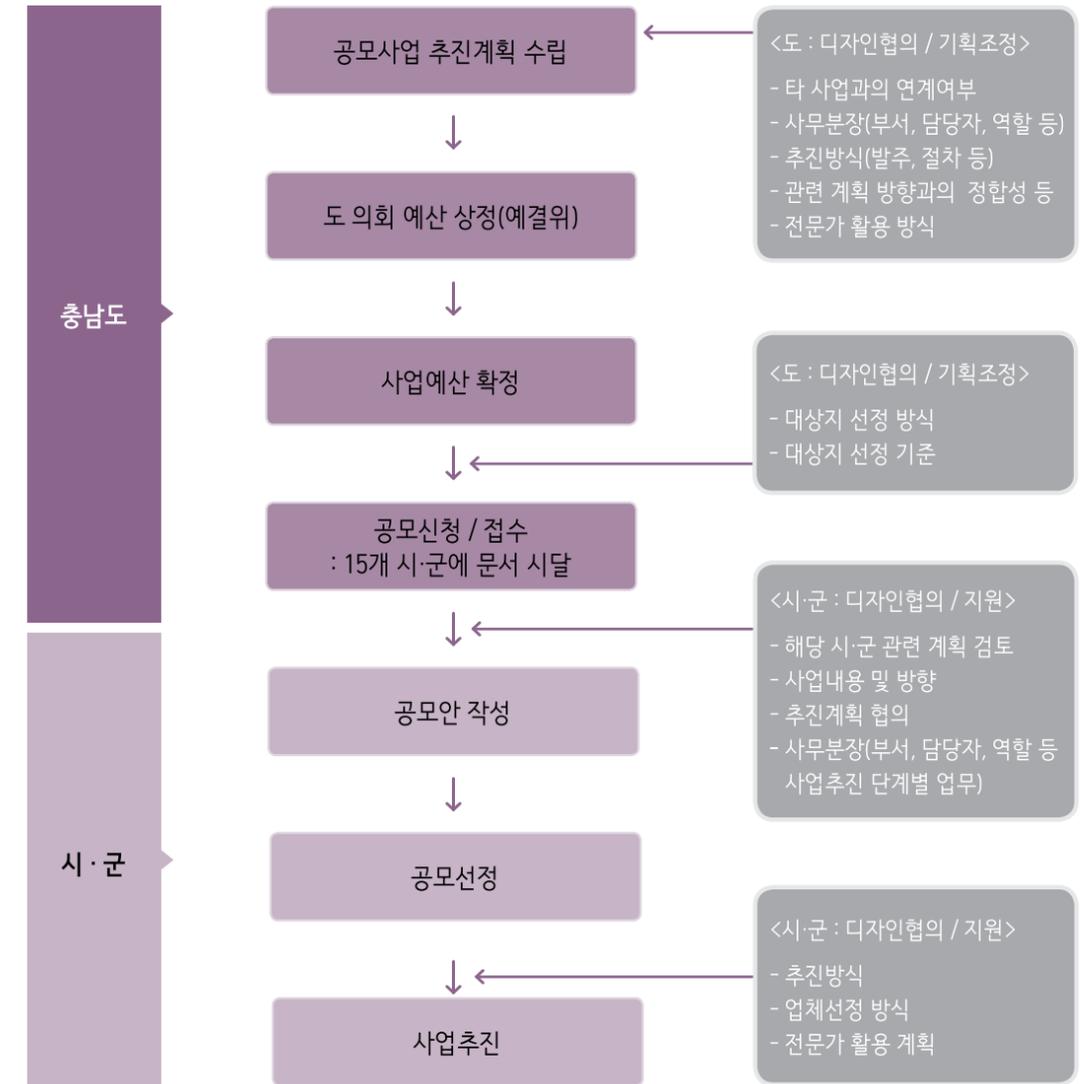
- 사업 효과 및 디자인 질 향상을 위해 디자인 관련 사업 간 연계와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황분석에서도 알 수 있으며, 사업 담당자들 또한 그 필요성을 인식
- 하지만 사업내용 변경과 기간 연장, 행정절차의 어려움, 업무과다를 우려하여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업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

<도 디자인 전담부서에서의 디자인협의 및 조정>

- 이에, 도에서 당해 연도 공모사업 예산 수립 전단계인 사업기획 단계에서 타 사업과의 연계여부와 사무분장, 추진방식, 관련 계획 방향과의 정합성 등 디자인협의 및 기획조정 단계 추가
- 이를 반영하여 공모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대상지 선정방식 및 기준, 전문가 활용 방식 등 사업 방침 결정을 각 시·군에 문서 시달하기 전단계에서 실시

<시·군에서의 디자인협의 및 지원>

-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군 부서 담당자가 도의 사업방침에 따라 연계 및 협업 대상 부서 담당자와 디자인협의 진행(사업내용 및 방향, 추진계획, 사무분장 등 협의)
- 디자인 관련 부서 담당자는 디자인 관련 계획 검토, 디자인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 사업 추진방식, 업체선정 방식 등 지원 또는 담당
- 공모에 선정되고 난 후 사업 추진 및 업체선정 방식, 전문가 활용 계획 등에 대하여 사업 부서 담당자와 디자인 관련 부서 담당자 간 디자인협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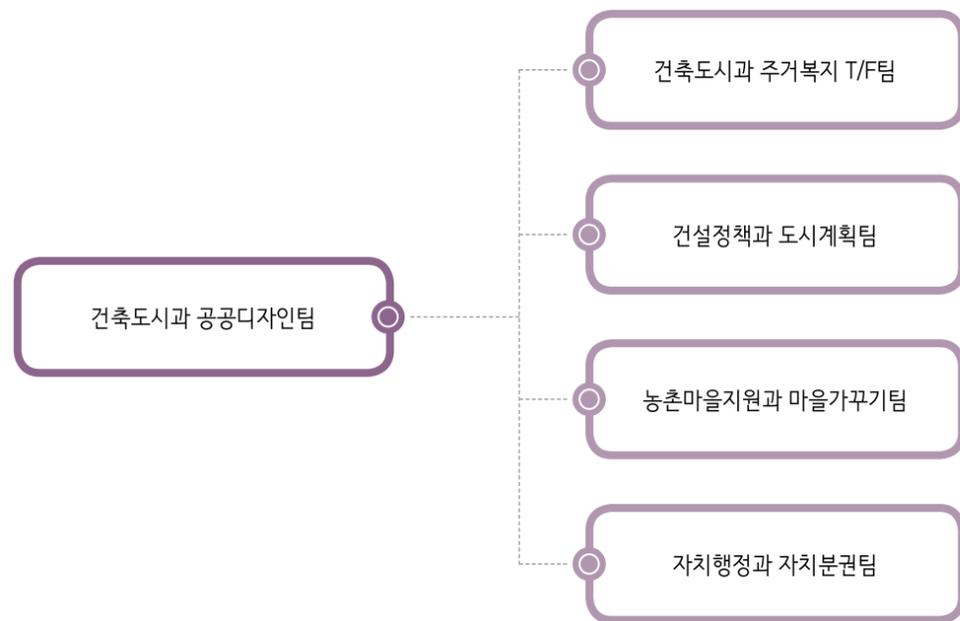


▲ [그림 5-6] 충남형 디자인 관련 사업 연계추진 시스템 제시안

3) 부서장급 T/F팀 구성

-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간 연계를 위해 타 부서 사업 정보공유 및 디자인협의와 기획조정이 필요한 데 이는 의사결정권자들 간 T/F팀 구성이 우선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을 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방식을 기획 및 결정하는 도의 T/F팀 구성에 대하여 제시

- 현재 충청남도에서 경관 및 디자인 총괄부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이 주관, 디자인 관련 부서인 건축도시과 주거복지T/F팀,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농촌마을지원과 마을가꾸기팀,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의 팀장급 참여 T/F팀을 구성하여 충청남도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연계 추진 시스템 기반 마련
- 정기적으로 공모사업 추진계획,과정, 결과 등 정보공유를 위해 디자인협의 및 조정 역할 단계 전인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단계(사업기획단계)와 사업예산 확정 단계, 사업완료 및 모니터링 단계의 최소 3회 이상 회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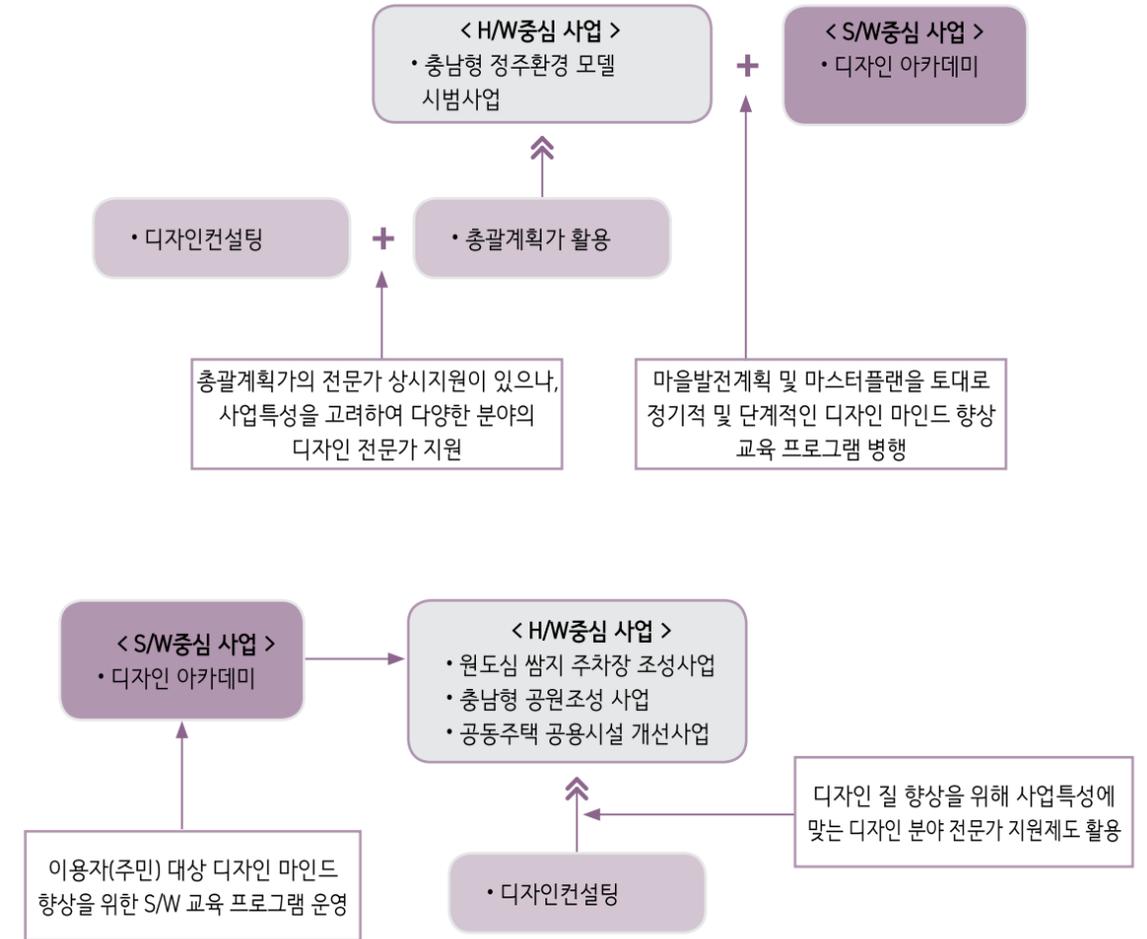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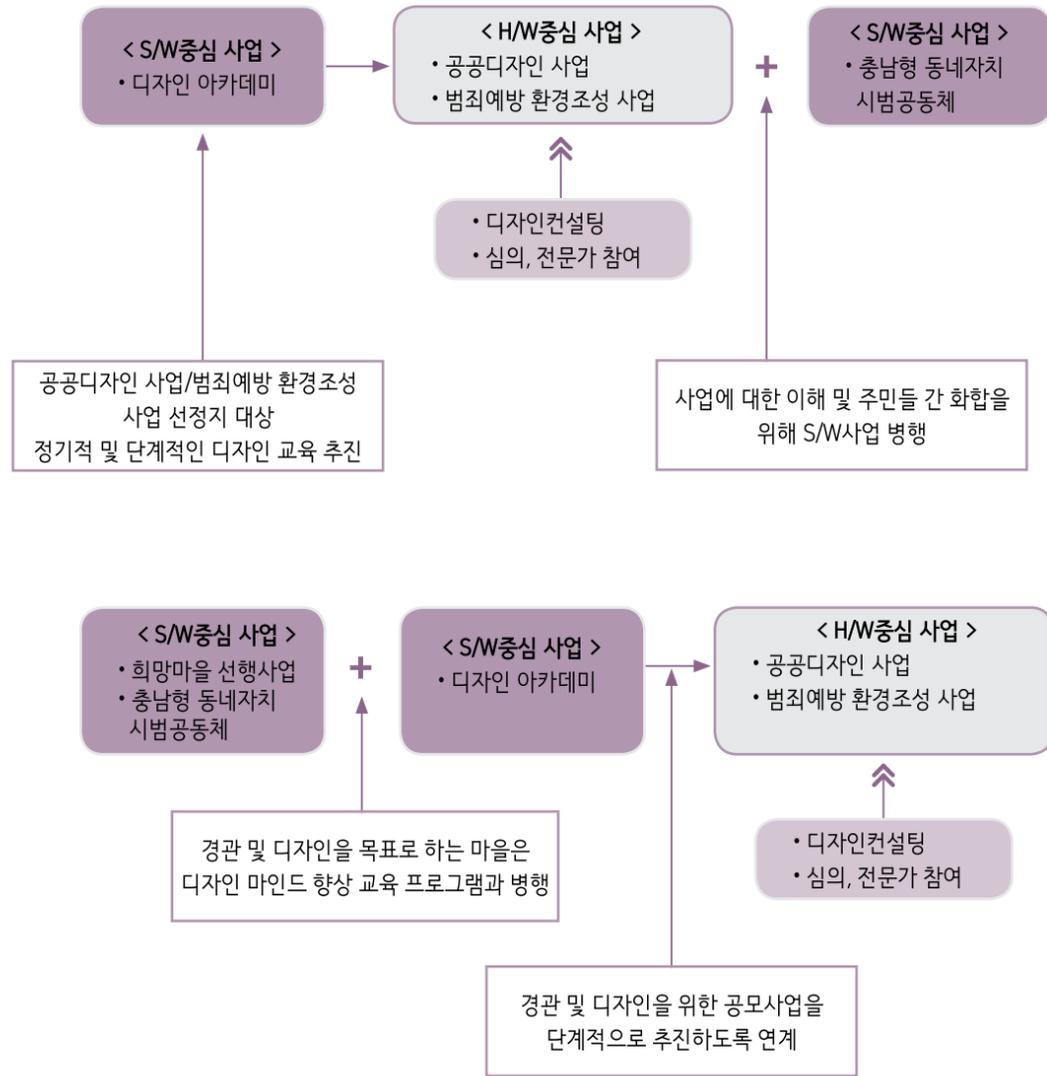


▲ [그림 5-7] 충남 디자인 관련 사업 연계 및 부서 간 협업을 위한 도 T/F팀 구성

2.2 다양한 분야 간 연계

1) 사업의 디자인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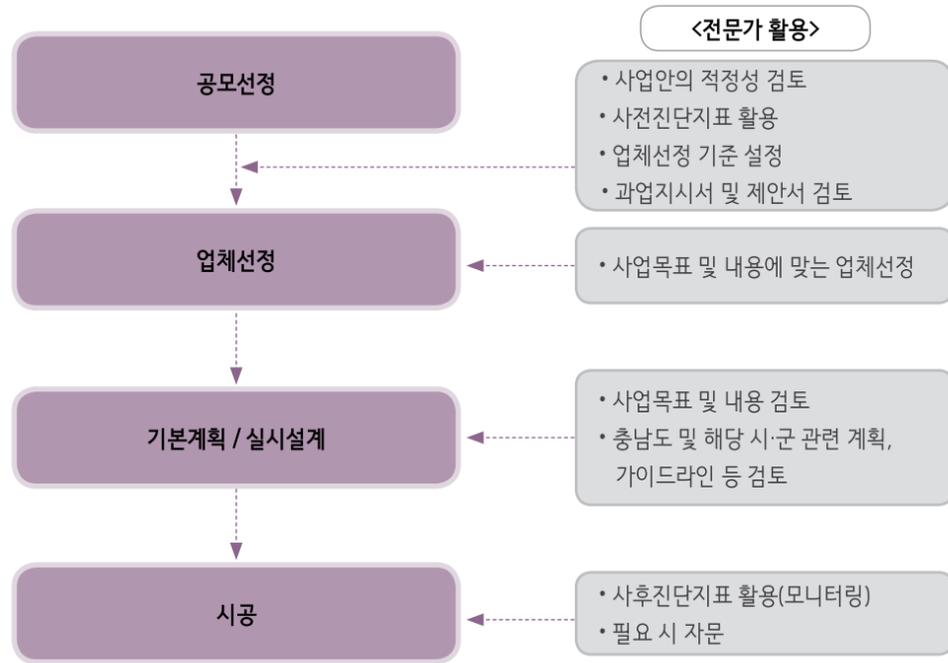
- 충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자인 관련 사업들은 ①단계적으로 추진, ②병행 추진함으로써 상호 보완되어 시너지를 내도록 하거나, ③디자인의 질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도입하고 있는 디자인컨설팅의 제도의 지원으로 디자인 연계가 가능
-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조성 공모사업은 디자인의 질 향상과 경관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심의와 전문가 컨설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
- 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 주민 및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위한 사업 선정방식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단기사업으로서 이를 추진과정에서 적용하기도 어려운 실정
- 이들 H/W 중심 사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마인드 향상 S/W사업인 디자인 아카데미와 연계 추진할 것을 제안
-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의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은 H/W 중심 사업 추진 이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또는 H/W 중심 사업 추진 이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 간 화합, 대표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하도록 연계 제안
- S/W중심 사업인 농촌마을지원과 마을가꾸기팀의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중 경관 및 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우, 디자인 아카데미와 병행 추진 제안
- 이와 같이 S/W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디자인 마인드가 향상된 마을이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면 S/W사업은 연계전략 마련, H/W 중심 사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효과 가능
- 충남형 정주형 모델개발 시범사업 역시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의 디자인 아카데미와 병행 추진,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 활용은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되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지원이 가능한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을 필요 시 활용하도록 디자인 제도와 연계 제안
- 건축도시과 주거복지 T/F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원도심 째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디자인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디자인 관리를 위한 제도나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방식으로 추진
- 사업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디자인 아카데미 사업과의 연계, 그리고 충남에서 도입하고 있는 디자인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 제안



▲ [그림 5-8] 충남형 디자인 관련 사업의 디자인연계

2) 다양한 전문가의 지속적 지원 시스템

-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단계별로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전문가 섭외가 어려울 경우,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 의뢰)
-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디자인협약에 의해 결정된 전문가 활용계획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업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업체선정, 업체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등을 검토하도록 추진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문가가 사업목표 및 내용 검토, 충남도 및 해당 시·군의 관련 계획(경관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과 가이드라인 등 검토
- 시공 및 준공 단계에서 충남도에서 개발한 사후진단지표 또는 해당 시·군에서 개발한 진단지표를 활용하여 사업 모니터링 실시, 필요한 자문 진행



▲ [그림 5-9] 충남형 디자인 관련 사업추진 시 전문가 활용

2.3 법 제도적 지원

1) 시·군 종합평가에 디자인지표 적용

- 시·군 종합평가에 디자인지표를 포함하여 각 시·군 성과에 포함
- 디자인지표는 ①디자인 관련 심의(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②디자인협의 또는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 컨설팅 실적의 두 가지로 구분
- 디자인 관련 심의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별지 제1호 또는 각 시·군 경관조례에서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관/디자인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 심의 2건 의무화
- 해당 시·군 행정조직내에 디자인 전담직이 있는 경우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협의(디자인 전담부서 협조) 2개 사업 의무화
- 해당 시·군 행정조직내에 디자인 전담직이 없는 경우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 컨설팅 2개 사업 진행 의무화

▼ [표 5-1] 시·군 종합평가에 디자인지표 적용

| 디자인지표 | 내용 |
|---|--|
| 디자인 관련 심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 |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별지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대상 심의 2건(해당년도) : 별지 제1호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 - 해당 시·군 경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대상 사업 |
| 디자인협의 / 디자인컨설팅 (충남공공디자인센터) | - 디자인 전담직이 있는 경우 : 타 부서 디자인 관련 사업 디자인협의 2개 사업 진행 - 디자인 전담직이 없는 경우 :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 컨설팅 2개 사업 진행 |

2) 조례 개정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를 근거로 각 시·군에서 디자인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팀 조직으로서 팀장 포함 3명) 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조례를 개정
- 디자인 전담조직 또는 전담직의 역할로서, 타 부서에서 추진되는 디자인 관련 사업(「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별지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및 해당 시·군수가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협의 및 기획조정 역할을 규정

▼ [표 5-2] 각 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및 개정

| 디자인지표 | 내용 |
|---|---|
| 디자인 전문인력 배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조항에 근거) | - 디자인 전담 조직 배치(팀 조직으로서 팀장 포함 3명 이상) - 디자인 전문인력 배치 |
| 디자인협의 / 디자인 기획조정 |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별지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전담 조직 또는 전문인력이 디자인협의 및 기획조정 역할 규정 : 별지 제1호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 - 해당 시·군수가 지정한 사업에 대한 디자인협의 및 기획조정 역할 규정 |

3) 규정 마련

- 도 및 15개 시·군 건축/도시/주택, 건설/도로, 농업/농어촌, 관광/문화, 경제/자치 관련 부서 담당자는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 매년 진행하는 디자인컨설팅 설명회 또는 디자인 관련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이수
- 도 건축/도시/주택, 건설/도로, 농업/농어촌, 관광/문화, 경제/자치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도 의회 예산 승인 전(의회 예결위 전)인 사업기획 단계에서 디자인 주무부서인 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디자인협의 진행(도내 디자인 연계 T/F팀 구성되면 T/F팀 회의 진행)
- 각 시·군별 디자인 진단시스템 개발 또는 충남도 진단시스템(사전진단지표 2014년, 사후진단지표 및 시스템 2015년)을 해당 시·군 디자인 전담조직 또는 전담직이 활용하도록 하여 디자인 관리 및 지원이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IV. 결론

1. 연구의 성과

점차 공간환경에 대한 쾌적함과 편리함뿐만 아니라 장소적 가치 등을 추구하게 되면서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경관 및 디자인 사업이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부처 및 주체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 계획의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디자인이 다양한 분야 간 융복합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충남에서 역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사업 간 연계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그동안의 경관 및 디자인 정책과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재고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연계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들 중 경관 및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로는 첫째, 이론고찰을 통해 관련법에서의 디자인 특성 및 개념, 선행연구에서 디자인사업이 가져가야 할 방향을 도출하여, 본 연구에서 디자인연계의 개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디자인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물, 건축물, 공간,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는 주변 자연과 경관 등 눈에 보이는 것과 이들을 만들어내는 행위 또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영역 및 부서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 주민참여와 주체들 간 협력,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및 시스템의 필요성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연계를 부서 간 협업의 의사소통체계 구축, 통합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분야 간 연계, 디자인 지원 및 협의를 위한 법 제도의 지원 3가지로 한정하여 충남에서 디자인사업 연계추진 시 필요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디자인연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분야 및 주체의 참여에 의한 중장기적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다양한 부서 및 이해관계자들 간 거버넌스, 특히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 전문조직의 역할과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디자인 전문조직을 갖춘 시·군이 2곳에 불과한 충남의 경우 우선 디자인연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 전문조직 구성 및 디자인연계의 필요성 인식을 위한 법 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충남에서 디자인연계가 가능한 9개 사업의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토대로 충남에서 필요한 디자인연계 방향을 도출하였다.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사업 또는 디자인사업과 연계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타 부서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나 디자인 관리나 지원을 위한 제도 활용 미흡, 그리고 사업 간 연계가 되지 않아 디자인의 일관성은 물론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식, 기간, 예산 등 사업특성별 문제점과 한계 점을 극복하기 위한 디자인연계 방안으로서, ①사업유형별 디자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 활용, ② 사업 간 단계적 및 병행 추진방식을 통한 디자인연계 방식을 충남에서의 디자인연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충남 디자인관련 사업 담당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디자인연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현 단계에서 문제시되는 것과 해결해야 할 것을 파악함으로써 충남형 디자인사업 연계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사업 담당자들은 디자인연계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사업내용 변경 및 예산 증액의 우려, 행정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①부서 의사결정권자들의 협의체계 구성을 통해 사업기획 시 협의 및 심의 등 디자인연계, ②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상시지원을 토대로 사업추진 시스템 개선, ③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전담인력 확보 및 역할 부여, 경관 및 디자인 교육 대상자 확대의 법 제도정비 등 사업 담당자들의 인식향상과 함께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고찰 및 국내외 선진사례, 충남 디자인관련 사업 실태분석 및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남형 디자인연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①우선 부서 간 협업의 의사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디자인 업무를 주로 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 방안을 단기/중장기의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연계추진을 위한 도의 디자인 전담 조직/사업추진 부서 및 시·군의 디자인 관련 부서(디자인 전담조직)/사업추진 부서의 역할, 그리고 도 관련 부서 의사결정권자들 간 T/F 구성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②다양한 분야 간 연계를 위해, 사업특성별 단계적 또는 병행 연계추진 가능한 사업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충남에서 도입하고 있는 디자인컨설팅 제도와의 연계 방안, 더불어 사업단계별 전문가 활용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③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적 지원으로서, 시·군 종합평가에 디자인지표 적용, 디자인 전문인력 배치 및 디자인협의 역할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제시, 디자인협의 및 제도 활용을 위한 규정 마련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면서 단계적으로 디자인사업 연계추진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업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예산절감, 충남의 디자인 질 향상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충남에서 추진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의 연계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행방안을 토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중앙부처 사업 및 충남 15개 시·군 자체사업 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사업 및 부서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 전 부서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경관 및 디자인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디자인이 단순히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 해결과 장소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충남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 및 행정 전반에서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해야 하며 디자인은 부수적인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것임을 사업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선 충남도 공모 사업을 기획하는 주체인 도 사업 담당자들의 인식부터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도의 경관 및 디자인 전담부서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즉, 충남도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간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의 경관 및 디자인 전담부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타 부서 사업에 관한 정보파악은 물론 디자인연계를 위해 부서 간 협업을 먼저 제안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 제도적 지원 마련은 물론 공모사업 기획 시 디자인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시·군에서도 디자인연계를 위한 행정 조직체계 및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충남 디자인 관련 사업 간 연계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충남 자체 추진 공모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남에서 추진되는 모든 디자인 관련 사업을 범위로 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연계 방안이 도출됨으로써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서 간 협업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 주민 및 지역사회 거버넌스까지 확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최근 많은 사업이 상향식 추진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및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권영상·이재욱·김형보·오지원(2013), 주민참여를 통한 폐선부지활용 도시재생 통합디자인 방안,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제5호

김상희·김주현·이정호(2013), 상업가로 공간의 지역성 적용 방안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제11권 제1호

김연금·김해경·노수일·정유나·강식(2010), 경기도 통합디자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해외정책동향 연구, 경기연구원

박혜은·방재성·오병찬·김성희(2017),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송명민(2014), 지역정체성 맥락의 공공디자인 통합체계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3권 제5호

신예철·김영걸·구자훈(2010), 도시디자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정책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1권 제4호

안수지(2011), 기초자치단체 디자인경영을 위한 통합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수지·나건(2011), 통합디자인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디자인전담조직 유형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7권 제2호

안수지·나건(2011), 공공기관의 디자인조직과 디자인담당자의 역할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7권 제1호

오준걸(2008), 도시·건축 제도를 통한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 관한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제8호

이도영(2013), 건축 기반 통합형 공공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개념적 모형개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9권 제6호

이상민(200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공공디자인, 국토

이상민·차주영·임유경·김영현(2008),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여경·김지수·이정형(2014),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5권 제6호

이영범(2010), 통합디자인의 가치와 가치창출형 통합디자인 정책의 방향, 건축, 제54권 제5호

이영한(2010), 공공디자인과 통합디자인, 건축, 제54권 제5호

조준배(2009), 건축·도시공간의 가치향상을 위한 중소도시의 전략 : 공공건축의 통합적 계획, AURI BRIFF, No. 3

최강림(2013),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한 구도심 상업가로 도시재생 - 부산시 '광복로 문화거리'를 사례로, Archives of Design Research, 제26권 제1호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촌 활성화의 길, 신활력 플러스에서 찾는다」 자료집

■ 부 록 - 1. 사업 담당자 의식조사 설문지(경관/디자인 업무 담당자용)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연구를 위한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2018년 연구과제로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부처에서 사업 또는 주체 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 창출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시도가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 역시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사업 간 연계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들 중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 간 연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디자인 연계 가능한 사업 추진 부서(도/시·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도/시·군)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의 추진방식, 사업 및 부서 간 연계협력 의향과 개선사항, 사업 추진 시 중요시 및 우선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충남에서 추진되는 디자인 공모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목적에만 활용됨을 약속드립니다.

| | | |
|--|--------------|--|
|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 범위] | → | :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는 주변 공간과 경관 |
|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 연계] | → | [법 제도의 통합] : 디자인 지원 및 협의 [의사소통체계 구축] : 행정부서 간 협업(경관 및 디자인 / 건설 도로 / 농어촌 / 관광 문화 / 경제 자치 등) [다양한 분야 간 연계 : 통합적 관점] : 건축 / 조경 / 농촌계획 / 시각디자인 / 산업디자인 / 주민참여 등 : 통합적 계획(공간+프로그램) |
| 본 연구에서의 [충남 디자인 연계 공모사업] | 충남도 해당 부서 | |
| | 건축 도시과 | 공공 디자인팀 |
| | 건설 정책과 | 도시 계획팀 |
| | 농촌일기원과 가치행정과 | 마을가꾸기팀 |
| | 자치분권팀 | 자치분권팀 |
| 사업명 | | 공공디자인 사업 : 공공공간 및 시설물 등 조성의 마을환경 개선 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 범죄발생 우려 지역을 공공디자인으로 개선 디자인 아카데미 :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 주민, 공무원, 건축사 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 저소득층 공동주택의 놀이터, 건축물 도색 등 생활환경 개선 원도심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 : 주차공간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 폐가 또는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 : 양성평등과 인권 개념 전제로 기존 공원 리모델링 또는 신규 공원 조성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 : 국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낙후마을의 경관 및 마을환경 개선 희망마을 선행사업 : 주민교육을 통해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을 토대로 소규모 사업과 건설당 지원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교육, 활동, 축제 등 지원 |
| * 충남에서 추진중인 공모사업 분석결과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 또는 연계 가능한 사업들로 도출된 사업들임(2018년도 기준) | | |

2018년 11월
 연구책임 : 박혜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TEL : 041-840-1258, hyeeu@cni.re.kr)

DQ1. 직렬 / 직류 (/)

DQ2. 소속부서 분야(가나다순 표기)

- 건축/도시/주택
- 건설/도로
- 농업/농어촌
- 관광/문화
- 경제/자치
- 기타()

DQ3. 현 부서 근무기간 (년)

I. 귀하의 경관 및 디자인 인식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를 하여 주십시오.

문1.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관 및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2. **충남도 또는 해당 시·군의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조례, 위원회,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잘 모른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알고 있다
-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문3. **경관 및 디자인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회/ 년)
- ② 없다

II.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 또는 기술하여 주십시오.

문4. 사업추진 시 **타 부서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부서)
- ② 그렇지 않다

문4-1. [① 그렇다 답한 경우] **협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사업기획 시 협의
- ② 협력사업 추진
- ③ T/F팀 및 협의회 구성
- ④ 심의 등 디자인 지원
- ⑤ 기타()

문5. 사업추진 시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중 무엇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계획 및 가이드라인
- ② 심의
- ③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 ④ 활용하고 있지 않다

문6.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문6-1. [① 그렇다 답한 경우] **전문가 활용 방법 및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복수선택 가능)

| | 참여주체 | 사업구상단계 | 기본계획단계 | 실시설계단계 | 사업완료이후 |
|---|--------------------|--------|--------|--------|--------|
| 1 | 관련 위원회 구성 | | | | |
| 2 | 총괄계획가 활용 | | | | |
| 3 | 경관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활용 | | | | |
| 4 | 공공디자인센터 활용 | | | | |
| 5 | 기타() | | | | |

문6-2. [① 그렇다 답한 경우] **전문가 구성(분야)**은 어떻게 됩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건축
- ② 조경
- ③ 농촌/도시계획
- ④ 산업디자인
- ⑤ 시각디자인
- ⑥ 주민참여
- ⑦ 기타()

III. 향후 사업 간 및 부서 간 연계 활용 의향, 개선사항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 또는 기술하여 주십시오.

향후 담당 사업추진 시 의향

문7. 향후 **타 부서와 협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1. 있다. (복수선택 가능) ① 사업기획 시 협의 ② 협력사업 추진 ③ T/F팀 및 협의회 구성 ④ 심의 등 디자인 지원 ⑤ 기타() | 2. 없다. |
|--|--------|

문8. 향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1. 있다. (복수선택 가능) ① 계획 및 가이드라인 참고 ②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위원회 심의 ③ 공공디자인 컨설팅 ④ 기타() | 2. 없다. |
|---|--------|

문9. 향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 | |
|------------------|-------|--------|------------|--------|--------|--------|--------|
| 1. 있다. (복수선택 가능) | | 2. 없다. | | | | | |
| | | | 참여주체 | 사업구상단계 | 기본계획단계 | 실시설계단계 | 사업완료이후 |
| 1 | | | 위원회 구성 | | | | |
| 2 | | | 총괄계획가 활용 | | | | |
| 3 | | | 자문회의 | | | | |
| 4 | | | 공공디자인센터 활용 | | | | |
| 5 | 기타() | | | | | | |

문9-1. 향후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구성(분야)**은 어떻게 됩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건축
- ② 조경
- ③ 농촌/도시계획
- ④ 산업디자인
- ⑤ 시각디자인
- ⑥ 주민참여
- ⑦ 기타()

개선사항

문10. 향후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력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구분 | 항목 |
|----|--|
| 1 | 사업기간내에 준공이 어려움 |
| 2 | 심의 및 타 부서 의견 반영 등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
| 3 | 행정절차의 복잡함 |
| 4 |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위원회 심의 절차과정의 복잡함 |
| 5 |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상 어려움 (조례, 계획, 가이드라인) |
| 6 | 업무과다 |
| 7 | 담당 부서 의사결정권자 설득의 어려움 |
| 8 | 기타() |

문11. 타 부서 사업과의 연계 및 부서 간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복수선택 가능), 우선순위는 어떠합니까?

| 구분 | 항목 | 우선순위 |
|----|--|------|
| 1 | 조례의 개정 (심의대상, 통합계획 수립, 공동위원회 운영 등) | |
| 2 | 별도의 규정 마련 | |
| 3 | 담당 부서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 구축 | |
| 4 | 디자인 전담부서(도 / 해당 시·군)의 역할 (총괄조직 구성, 디자인 전문직 총원 등) | |
| 5 | 디자인 지원 제도 활성화 및 확대 (공공디자인센터의 컨설팅, 디자인 진단시스템 등) | |
| 6 | 사업 및 부서 간 연계 협력 지침 또는 매뉴얼 개발 | |
| 7 | 관련 분야 연구회 운영 (부서 간 정보교류, 의견 교환 등) | |
| 8 | 기타() | |

IV. 귀하의 담당 사업에서 중요시 및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 또는 기술하여 주십시오.

문12. 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는 어떠합니까?

| 구분 | 항목 | 중요도 | | | | |
|----|---|------------|---------|------|------|---------|
|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1 | 타 부서와의 협업 (기획, 협력사업, 협의회 구성, 디자인 지원, 연구회 등에서 의견 교류 등) | | | | | |
| 2 |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 (조례, 규정, 심의, 계획 등) | | | | | |
| 3 | 관련 전문가 활용 (위원회 구성, 총괄계획가, 자문회의, 공공디자인센터 등) | | | | | |
| 4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 | | | | | |
| 5 | 의사결정권자 참여 협의체계 구축 | | | | | |
| 6 | 관련 분야 연구회 참여 (부서 간 정보교류, 의견 교환 등) | | | | | |
| 7 | 기타() | | | | | |

문13. 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항목들 중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어떠합니까? (모든 항목)

| 구분 | 항목 | 우선순위 |
|----|---|------|
| 1 | 타 부서와의 협업 (기획, 협력사업, 협의회 구성, 디자인 지원, 연구회 등에서 의견 교류 등) | |
| 2 |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 (조례, 규정, 심의, 계획 등) | |
| 3 | 관련 전문가 활용 (위원회 구성, 총괄계획가, 자문회의, 공공디자인센터 등) | |
| 4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 | |
| 5 | 의사결정권자 참여 협의체계 구축 | |
| 6 | 관련 분야 연구회 참여 (부서 간 정보교류, 의견 교환 등) | |
| 7 | 기타() | |

문14. 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력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부 록 - 2. 사업 담당자 의식조사 설문지(건설/농촌/자치행정 부서 담당자)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연구를 위한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2018년 연구과제로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부처에서 사업 또는 주체 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 창출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시도가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 역시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사업 간 연계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들 중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 간 연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디자인 연계 가능한 사업 추진 부서(도 / 시·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도 / 시·군)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의 추진방식, 사업 및 부서 간 연계협력 의향과 개선사항, 사업추진 시 중요시 및 우선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충남에서 추진되는 디자인 공모사업 간 연계 및 부서 간 협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목적에만 활용됨을 약속드립니다.

| | | |
|--|-----------|--|
|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 범위] | → | :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는 주변 공간과 경관 |
|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 연계] | → | [법 제도의 통합] : 디자인 지원 및 협의 [의사소통체계 구축] : 행정부서 간 협업(경관 및 디자인 / 건설 도로 / 농어촌 / 관광 문화 / 경제 자치 등) [다양한 분야 간 연계 : 통합적 관점] : 건축 / 조경 / 농촌계획 / 시각디자인 / 산업디자인 / 주민참여 등 : 통합적 계획(공간+프로그램) |
| 본 연구에서의 [충남 디자인 연계 공모사업] | 충남도 해당 부서 | |
| | 건축 도시과 | 공공 디자인팀 |
| | 주거복지T/F팀 | |
| | 건설 정책과 | 도시 계획팀 |
| | 농촌유희과 | 마을가꾸기팀 |
| 자치행정과 | 자치분권팀 | |
| 사업명 | | 공공디자인 사업 : 공공공간 및 시설물 등 조성의 마을환경 개선 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 범죄발생 우려 지역을 공공디자인으로 개선 디자인 아카데미 :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 주민, 공무원, 건축사 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 저소득층 공동주택의 놀이터, 건축물 도색 등 생활환경 개선 원도심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 : 주차공간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 폐가 또는 유희지 활용 주차장 조성 충남형 공원조성 사업 : 양성평등과 인권 개념 전제로 기존 공원 리모델링 또는 신규 공원 조성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 : 국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낙후마을의 경관 및 마을환경 개선 희망마을 선행사업 : 주민교육을 통해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을 토대로 소규모 사업과 건설당 지원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교육, 활동, 축제 등 지원 |
| * 충남에서 추진중인 공모사업 분석결과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 또는 연계 가능한 사업들로 도출된 사업들임(2018년도 기준) | | |

DQ1. 직렬 / 직류 (/)

DQ2. 소속부서 분야(가나다순 표기)

건축/도시/주택 건설/도로 농업/농어촌 관광/문화 경제/자치 기타()

DQ3. 현 부서 근속기간 (년)

I. 귀하의 경관 및 디자인 인식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를 하여 주십시오.

문1.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관 및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2. **충남도 또는 해당 시·군의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조례, 위원회,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문3. **경관 및 디자인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회/ 년) ② 없다

II.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 또는 기술하여 주십시오.

문4. 사업추진 시 **타 부서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부서) ② 그렇지 않다

문4-1. [① 그렇다 답한 경우] **협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사업기획 시 협의 ② 협력사업 추진 ③ T/F팀 및 협의회 구성 ④ 심의 등 디자인 지원
⑤ 기타()

문5. 사업추진 시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중 무엇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계획 및 가이드라인 ② 심의 ③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④ 활용하고 있지 않다

문6.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문6-1. [① 그렇다 답한 경우] **전문가 활용 방법 및 단계**는 어떻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 | 참여주체 | 사업구상단계 | 기본계획단계 | 실시설계단계 | 사업완료이후 |
|---|--------------------|--------|--------|--------|--------|
| 1 | 관련 위원회 구성 | | | | |
| 2 | 총괄계획가 활용 | | | | |
| 3 | 경관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활용 | | | | |
| 4 | 공공디자인센터 활용 | | | | |
| 5 | 기타 () | | | | |

문6-2. [① 그렇다 답한 경우] **전문가 구성(분야)**은 어떻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건축 ② 조경 ③ 농촌/도시계획 ④ 산업디자인 ⑤ 시각디자인 ⑥ 주민참여 ⑦ 기타()

III. 향후 사업 간 및 부서 간 연계 활용 의향, 개선사항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 또는 기술하여 주십시오.

| 향후 담당 사업추진 시 의향 | | | | | |
|--|--|--------|--------|--------|--------|
| 문7. 향후 경관·디자인 관련 부서와 협업할 의향 이 있습니까? | | | | | |
| 1. 있다. (복수선택 가능) ① 사업기획 시 협의 ② 협력사업 추진 ③ T/F팀 및 협의회 구성 ④ 심의 등 디자인 지원 ⑤ 기타() | | | | | 2. 없다. |
| 문8. 향후 경관·디자인 관련 법 제도를 활용할 의향 이 있습니까? | | | | | |
| 1. 있다. (복수선택 가능) ① 계획 및 가이드라인 참고 ②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위원회 심의 ③ 공공디자인 컨설팅 ④ 기타() | | | | | 2. 없다. |
| 문9. 향후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의향 이 있습니까? | | | | | |
| 1. 있다. (복수선택 가능) | | | | | |
| | 참여주체 | 사업구상단계 | 기본계획단계 | 실시설계단계 | 사업완료이후 |
| 1 | 위원회 구성 | | | | |
| 2 | 총괄계획가 활용 | | | | |
| 3 | 자문회의 | | | | |
| 4 | 공공디자인센터 활용 | | | | |
| 5 | 기타 () | | | | |
| 문9-1. 향후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구성(분야) 은 어떻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 | | | | |
| ① 건축 ② 조경 ③ 농촌/도시계획 ④ 산업디자인 ⑤ 시각디자인 ⑥ 주민참여 ⑦ 기타() | | | | | |
| 개선사항 | | | | | |
| 문10. 향후 경관·디자인 관련 사업과 연계 및 부서와 협력 시 예상되는 어려움 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 | | | |
| 구분 | 항목 | | | | |
| 1 | 사업기간내에 준공이 어려움 | | | | |
| 2 | 심의 및 타 부서 의견 반영 등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 | | | |
| 3 | 행정절차의 복잡함 | | | | |
| 4 |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위원회 심의 절차과정의 복잡함 | | | | |
| 5 | 경관 및 디자인 관련 법 제도 활용상 어려움 (조례, 계획, 가이드라인) | | | | |
| 6 | 업무과다 | | | | |
| 7 | 담당 부서 의사결정권자 설득의 어려움 | | | | |
| 8 | 기타() | | | | |

문11. 경관·디자인 사업과의 연계 및 부서 간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복수선택 가능), 우선순위는 어떠합니까?

| 구분 | 항목 | 우선순위 |
|----|--|------|
| 1 | 조례의 개정 (심의대상, 통합계획 수립, 공동위원회 운영 등) | |
| 2 | 별도의 규정 마련 | |
| 3 | 담당 부서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 구축 | |
| 4 | 디자인 전담부서(도/해당 시·군)의 역할 (총괄조직 구성, 디자인 전문직 총원 등) | |
| 5 | 디자인 지원 제도 활성화 및 확대 (공공디자인센터의 컨설팅, 디자인 진단시스템 등) | |
| 6 | 사업 및 부서 간 연계 협력 지침 또는 매뉴얼 개발 | |
| 7 | 관련 분야 연구회 운영 (부서 간 정보교류, 의견 교환 등) | |
| 8 | 기타 () | |

IV. 귀하의 담당 사업에서 중요시 및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 또는 기술하여 주십시오.

문12. 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는 어떠합니까?

| 구분 | 항목 | 중요도 | | | | |
|----|---|------------|---------|------|------|---------|
|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1 | 타 부서와의 협업 (기획, 협력사업, 협의회 구성, 디자인 지원, 연구회 등에서 의견 교류 등) | | | | | |
| 2 | 사업 관련 조례 활용 (조례, 규정, 심의, 계획 등) | | | | | |
| 3 | 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 (위원회 구성, 총괄계획가, 자문 회의, 공공디자인센터 등) | | | | | |
| 4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 | | | | | |
| 5 | 의사결정권자 참여 협의체계 구축 | | | | | |
| 6 | 관련 분야 연구회 참여 (부서 간 정보교류, 의견 교환 등) | | | | | |
| 7 | 기타() | | | | | |

문13. 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항목들 중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어떠합니까? (모든항목)

| 구분 | 항목 | 우선순위 |
|----|---|------|
| 1 | 타 부서와의 협업 (기획, 협력사업, 협의회 구성, 디자인 지원, 연구회 등에서 의견 교류 등) | |
| 2 | 사업 관련 조례 활용 (조례, 규정, 심의, 계획 등) | |
| 3 | 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 (위원회 구성, 총괄계획가, 자문회의, 공공디자인센터 등) | |
| 4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 | |
| 5 | 의사결정권자 참여 협의체계 구축 | |
| 6 | 관련 분야 연구회 참여 (부서 간 정보교류, 의견 교환 등) | |
| 7 | 기타() | |

문14.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사업과 연계 및 부서와 협력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 부 록 - 3. 사업 담당자 인터뷰조사 결과

| | |
|----|-----------------------------|
| 소속 | 충청남도 00과 00팀 |
| 일시 | 2018. 11. 20. 14:00 ~ 15:30 |

■ 타 부서 사업이나 업무와 연계

- 현재 타 부서와 연계를 하는 것이 하나의 업무임. 신도시 근린상업시설용지 내 보행자 도로 개선사업은 홍성군이 사업 주체이면서 공사, 도는 계획 및 방향설정을 해주는 도와 시·군 협업사업임. 이때 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내포신도시개발계획,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하여 컨트롤하는 역할을 함. 홍성군-도 00과-총괄계획가가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임(컨셉, 방향 등을 회의를 통해서 정함).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는데 도면작성 방향까지 제시해주고 있음. 대부분의 부서가 컨셉이나 방향 등에 대한 기획회의를 하지 않음
- 내포신도시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관련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심의회와 경관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 이므로 어쩔 수 없이 관련 과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음. 하지만 제도적 문제에 의해 협조 요청을 한다고 보기만은 어렵고, 안했을 시 담당자가 질책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음. 도 내 타 부서와의 협업으로는 문화정책과에서 협조 요청하여 건축물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수립 시 보고회 등에 참석하고 있음. 내포신도시개발계획이나 경관계획 방향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해주고 있음
- 보통 사업을 추진할 때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이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오면 물량산출을 위한 예산계획 수립을 가장 먼저 하고 있음.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이므로, 현재 사업추진 시스템에서는 기획을 할 수 없는 구조임
- 보통 사업기간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단위임. 그러므로 중간에 주민참여 등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주민참여를 시도하였다고 해도 제대로 반영되기가 힘든 상황임. 왜냐하면 사업 담당자로서 업무를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임. 1년 예산을 그 해에 소진시켜야 하므로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타 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거나 예산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임
- 반면 중장기계획에 의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타당성 용역에서 기획을 포함하여 진행함. 하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오히려 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짧고 예산도 적으므로 사업에 기획단계를 포함하기에 한계가 있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끊어서 예산을 계획하여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기도 함

■ 타 부서와의 연계 필요성

- 타 부서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함. 협업의 중요성과 협업의 효과를 인지해야 가능함

- 부서 간 연계는 무조건 필요함. 연계하지 않아서 실패한 사례를 많이 봤음. 모든 의사결정은 단체장이 하게 되어 실패한 사례가 많음

■ 디자인 전담조직의 역할

- 논산이나 천안의 경우 디자인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팀장이 있고 디자인 업무를 보는 인력이 있기 때문임. 특히, 논산의 경우 협업에 대한 효과를 타 부서 담당자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용이 되고 있음. 지금까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음. 디자인 전담조직 구성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음
- 시·군의 디자인 전담조직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도의 디자인 전담조직은 디자인 정책 개발이나 사업을 통해 시·군별 디자인 수준을 균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사업 간 연계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

- 행정절차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나, 예산이 높아지는 경우(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음)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담당자 혼자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결정함으로써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음
- 협업은 회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임
- 협업을 의무화 했을 때 타 부서의 반발이 생기는 경우는 예산이 높아지거나 추가사업이 생기게 됐을 경우임

■ 타 부서 사업 및 업무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

- 홍성, 예산 조례를 개정해서 내포신도시의 모든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정해놓으면서 컨트롤이 되고 있음
- 단위사업의 경우 심의 효과가 있었음
- 통합조례/통합심의/공동심의/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이나 건축이 경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동위원회로 진행한다면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공동위원회 구성 시 정해진 시간내에 모든 분야를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장단점이 있음. 내년에는 건축심의까지 담당하여 경관심의회와 함께 통합심의를 진행하려고 함
- 담당자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함. 모든 업무가 협업업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협업했을 때 효과가 있음을 알아야 담당자들의 인식이 바뀔

■ 사업 간 연계를 위해 심의대상 확대 시 예상되는 문제

- 부서마다 보는 눈높이가 다르므로 이를 맞추는게 중요함. 도와 지자체 사업 담당자의 눈높이가 다름
- 심의 시 담당자가 봐야 할 부분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어

야 함.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역할이 잘 안됨. 도에서 지자체 담당자에게 개발계획과 경관계획의 방향에 대한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순환보직으로 사업 담당자가 바뀌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한계가 있음

■ 사업 간 또는 타 부서와의 연계추진 시 도의 역할, 시·군의 역할

- 연계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사무분장을 만드는 것임. 담당부서와 담당자, 역할을 명시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명확하게 사무분장을 한다면 가능함. 예산, 공사, 기획, 총괄 등 명확한 역할분담에 따른 사무분장을 해야 함
- 사무분장은 사업 기획단계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
|----|---|
| 소속 | 00시 00과 00팀 |
| 일시 | 2018. 11. 21. 10:00 ~ 11:00, 서면조사 추가 진행 |

■ 타 부서 사업이나 업무와 연계

- '디자인정책팀' 신설(17.7)시 분장사무에 '디자인협업'이 신규사무로 지정됨에 따라, 각 부서의 사업 중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음
- 내부지침으로 디자인정책팀(전문직으로 구성) 신설 시 조직관리팀에서 필요업무 협의가 있었음
- 디자인협업은 각 부서에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중간에 디자인이 추가되는 것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이므로 사업 담당자가 디자인 협업 신청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협업을 하면 좋지만 일이 많아질 것 같으면 협업 신청을 안함. 그러므로 디자인 지원은 사업 담당자가 반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음
- 타 부서와 의견충돌은 있음. 디자인 관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주지만 반영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음
-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타 부서 담당자, 디자인 측면에서 모든 권한을 주는 담당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 열심히 하게 됨. 담당자들이 디자인 지원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90% 국장이나 시장 등의 결재과정에서 디자인협업을 진행하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 이미 국장 결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적으므로 그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함

■ 타 부서와의 연계 필요성

- 필요함. 대부분의 사업에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디자인이 포함됨

■ 전담조직의 역할, 타 지자체에서 디자인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려면

- 디자인 전담조직으로 디자인정책팀과 디자인 행정팀으로 구분됨. 디자인 정책팀에서는 경관,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등의 모든 종합계획 수립, 디자인 기획 및 전략수립, 정책개발의 역할을 함. 디자인행정팀에서는 조례제정, 위원회 운영 등 디자인을 행정전반에 적용하는 업무를 함
-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지자체에서 이해해야 전담조직 구성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반복적인 공무원 교육이 필요함

■ 사업 연계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사항

- 담당자의 권한 및 의지에 한정하여 디자인협업이 진행되므로, 디자인담당자의 역할과 권한이 축소될 수 있음
- 하지 않아도 될 일(디자인)이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전폭적인 지원(사업담당자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이 필요함
- 타 부서 사업 또는 업무 협력을 위해서 내부방침 또는 조례에서 디자인협업의 의무화가 필요함

■ 사업 간 연계를 위해 심의대상이 확대된다면

- 제도화(조례) 된다면 수행할 것임
- 심의업무의 양적증가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함

■ 사업 간 또는 타 부서와의 연계추진 시 도의 역할

- 15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항목의 경우, 도 조례에서 다루어주면 도움이 될 듯 함

■ 현재 사업추진 시 중요한 것, 필요한 것

- 공공디자인 사업이 시설사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양적으로 많은 결과물, 미적인 결과물로 평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담당 공무원 및 주민 등의 의식교육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사업 전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민이 공모사업을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임
- 주민들의 인식, 사업컨텐츠, 원활한 사후관리 시스템 등이 확보된 지역에 한하여 공모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위의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방향을 이원화해야 함. 우선 시설물 사업으로서, 물리적인 환경개선의 경우에 한정하며 지자체별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물을 개선해 나가는 게 목적인 사업, 그리고 주민주도 사업으로서 유형적인 결과물은 시설물이지만, 주민참여(컨텐츠개발~디자인)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무형의 성과(주민협력, 마을개발, 역량강화 등)가 목적인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
|----|-----------------------------|
| 소속 | 00군 00과 00팀 |
| 일시 | 2018. 11. 16. 15:00 ~ 16:40 |

■ 타 부서 사업이나 업무와 연계

-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도비 포함 사업들을 심의 운영하여 디자인을 지원해주고 있음
- 현재 역량강화 사업 담당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담당업무 중 농식품부 개발사업 대상지 발굴 시 정보를 공유하여 역량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고 있음. 이것은 담당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아마 담당자가 바뀌면 이러한 업무 연계는 없어질 것이라 생각함. 이외에 타 부서 사업이나 업무와 연계는 거의 안하고 있음

■ 타 부서와의 연계 필요성

- 디자인이 필요한 부서는 매우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디자인 전담팀이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하여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디자인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 디자인 전담직이 중요하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신규직원이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므로 조직의 상황을 잘 모르고 타 부서와 친분이 없어 업무 협업은 실질적으로 어려움
- 무엇보다 기관장이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 전문직 한명을 뽑았는데 휴직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통 공무원 조직은 3년이 되면 순환되는데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보게 되므로 힘들것임
- 현재 디자인 전문직이 옥외광고물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업무과다로 디자인 업무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오히려 옥외광고물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디자인 업무는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임. 타 지자체의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은 마찬가지로 상황일 것임
- 팀 조직구성할 때 디자인과 구분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안됐음. 시 단위는 디자인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군 단위의 경우 디자인 전담팀이 없음. 디자인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줄 필요가 있음. 팀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이 안됨. 일반직이 아니라 홍성이나 논산과 같이 전문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전담부서는 팀장, 경관 공공디자인분야, 광고물의 3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 범죄예방이나 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등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규직원으로 계속 대체되는 상황으로 광고물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전반적으로 기관에서 디자인 전담조직은 구성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이 중요함. 전담조직이 없으면 디자인에 비중을 둘 수가 없음. 할 일은 많은데 조직이 여건이 안되므로 아쉬움

- 전담부서가 있다면 타 부서와의 컨트롤, 규제나 가이드라인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디자인컨설팅 받아야 될 것은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음
- 행정직이나 기능직의 경우 타 부서로 이동하려고 하므로 건축직이 디자인 전담직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음. 건축직은 전문직이므로 계속 관련 분야 업무를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 사업 간 연계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사항

-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너무 많으므로 디자인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 상황에서 하나의 행정절차가 추가 되는 것이 싫을 것이며,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있을 것임

■ 사업 간 연계를 위해 심의대상이 확대된다면 예상되는 문제

- 심의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타 부서의 반발은 없을 것이나, 심의의 효과를 느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대상 확대보다는 디자인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관련 담당부서와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심의의 효과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므로, 심의 대상은 줄였으면 하고 대신 통합계획이나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함
- 공공디자인 조례상에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어도 감사 대상, 계약심사 하는 것이 아니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대상이 너무 많아서 업무에 차질이 생김
- 심의보다 전담조직이 있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장의 현황과 주민의식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디자인컨설팅이 심의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사업 수행자(업체)가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좋겠으나 그게 아닌 상황이므로, 심의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디자인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음. 그러므로 타 부서의 디자인 관련 사업의 디자인 질 향상을 위한 심의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 현재 사업추진에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

- 디자인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역량이 부족하고 디자인 마인드가 부족해서 의견수렴하기도 어렵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음
- 현재 사업비나 사업기간으로는 주민역량 강화를 할 수 없으므로 S/W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된다면 좋을 것 같음.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된다면 기본계획비용을 수립해도 됨
- 디자인 전담조직 구성이 어려운 현재 조직의 실정을 반영한다면 모든 부서의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부서 간 협력을 위한 T/F팀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 현재 공모사업 추진 시스템

-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SW사업을 먼저 추진한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물론 디자인 아카데미 교육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상지 주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1회에 그치므로 마을 현황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안됨
-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 대상지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공모 선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의 역할

- 지자체 입장에서는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침 등 큰 방향성을 제시해주었으면 좋겠음
- 도에서는 15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해줬으면 좋겠음. 현재 담당자는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구분도 확실히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심의는 어떤 사업과 규모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음

| | |
|----|-----------------------------|
| 소속 | 충청남도 00과 00팀 |
| 일시 | 2018. 11. 20. 13:00 ~ 14:00 |

■ 타 부서 사업이나 업무와 연계

- 현재 타 부서와 협업을 하고 있지는 않음. 협업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긴 함
- 타 부서와 협업을 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타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업기획 시 사업을 연계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음.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관심이 없음

■ 타 부서와의 연계 필요성

- 디자인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좋을 것 같긴 함. 의지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음
- 동네자치 공동체 시범사업은 마을단위에서 마을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마을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현재 도에서는 후속사업만 지원해주고 있으며 향후 1~2년내에 도 지원은 없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임. 논산이나 당진의 경우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음. 그러므로 이 사업과 연계를 하게 된다면 대상지를 선정 및 추진하는 읍면동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음
- 경관 또는 디자인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이 있다면 받을 의향이 있음. 설명을 듣기 전에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경관이나 디자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 동네자치 사업에서 주민들이 마을 전시회나 생활환경 가꾸기, 안심 순찰대 등 공공디자인팀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문가 활용 분야

- 충남은 농촌지역이 많으므로 동네자치 공동체 시범사업의 경우 농촌계획 전문가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음
- 주민자치 전문가는 거의 없으므로 현재 전문가 활용은 하고 있지 않음

■ 사업 간 연계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사항

- 사업마다 주관 중앙부처가 다른 실정으로 이것이 도의 조직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어 부서마다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협업이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임
- 또한 예산 자체가 팀별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 업무를 하기에 바쁘는데 타 부서와 협업하여 일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도 건축도시과에서 지자체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타 부서 공람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만 관심있는 사람만 볼 것임.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할 때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홍보차원에서 시군,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홍보할 수 있음
- 동네자치 공동체 사업의 후속사업으로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를 공문으로 보내도록 하여 공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는 있음. 동네자치 후속지원 사업에 예시로 공공디자인사업, 범죄예방사업 등을 명시하여 사업을 홍보하는 방안이 있음
-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동네자치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의지가 있는 마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므로 건축도시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낸다면 연계사업 추진 의향 있음
- 협업을 하게 된다면 도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역할이 필요하고, 시·군에서는 대상지 선정 시 역할이 필요할 것임(실질적으로 대상지 선정 및 추진은 읍면동에서 함). 후속 연계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등이 있으며, 지자체에서 관련 부서와 협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명시를 하는 방법이 있음
- 일부 시·군에서는 공동체과를 만들어서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등 유사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조직구성을 하고 있는 곳들이 생기고 있음. 도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이번에 반영이 안됐음

■ 현재 사업추진에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

-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민 대상 교육이 많으며,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오고 있음. 중복되는 교육 사업이 많으므로, 교육 내용 간 연계를 해도 좋을 것 같음

| | |
|----|-----------------------------|
| 소속 | 00시 00센터 00팀 |
| 일시 | 2018. 11. 16. 10:00 ~ 11:00 |

■ 타 부서 사업이나 업무와 연계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 시 도시정책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때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받으라고 하여 진행하고 있음
- 조직내 전산에서 부서 간 협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고는 있지만 잘 활용하고 있지 않음
-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타 부처사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공무원 조직 특성상 협업하려고 하지 않음. 의사결정권자가 부서 간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업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함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자치,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귀농귀촌, 복지 등의 분야와 관련이 있어서 관련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난 후에 진행해볼 생각임. 지금까지 디자인 및 경관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으나 오늘 설명을 통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의 필요성을 느꼈음

■ 타 부서와의 연계 필요성

- 디자인 사업과의 연계에 대해서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할 때 사업비 3천만원 중 900만원이 컨설팅 비용임. 컨설팅 사업은 주민 교육 진행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교육진행 시 디자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사업에 공모하고 선정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므로 미리 주민들의 디자인 인식을 개선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 도 공공디자인팀 디자인 아카데미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도 농촌마을지원과에서 희망마을 선행사업 대상은 디자인 아카데미 교육을 받도록 방침을 정하고 공공디자인팀에 협조요청을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함. 현장포럼이나 선행사업 할 때 디자인 아카데미 교육과 연계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도와 시·군 해당부서와 한 달에 한번씩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 공공디자인팀이 같이 참석해서 디자인 아카데미나 공모사업 추진 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임. 도에서 시·군에 시달할 때 도 공공디자인팀 협조를 받도록 방침을 정하면 될 것임
- 공무원 조직의 성향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점차 달라지고 있으므로, 디자인 전문직이 조정역할을 맡게 되면 될 것 같음. 건축직 공무원이 담당자였다면 디자인컨설팅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함. 현재 지침이나 방침이 있어서 디자인컨설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전문직이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받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것을 도에서 정확히 지시 또는 방침을 내릴 필요가 있음

- 선행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은 풍물단 운영 시 장비구입비, 마을입구에 경관조성(식재조성 등)이 있음. 그러므로 현장포럼이나 교육진행 시 디자인 아카데미와 연계추진하여 경관조성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 사업 간 연계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사항

- 타 부서 사업과의 협업을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가장 중요함. 현재는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공모사업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하고 있으나, 내년 조직개편 시 마을만들기팀, 마을공동체팀의 마을공동체과가 생기면 희망마을 사업이 마을공동체과로 이관되고, 농촌개발사업은 건설과, 현재 부서에서는 농촌관련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각자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줄어들 것 같음
- 충남도 공모사업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각 관련 부서 팀장 T/F팀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업을 위해 필요할 것 같음
- 도 공공디자인팀 공모사업과의 연계추진에 대해서 부담은 없음. 실과 전체에 문서를 보내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음
- 타 부서와 연계나 협력 시 가장 필요한 것은 과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과장의 지시가 필요함(의사결정권자)

■ 현재 사업추진에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

- 경관교육을 그동안 받은 적이 없는데 농식품부 공모사업 추진 시 경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담당자들은 받을 의향이 있을 것임. 담당자뿐만 아니라 주민들 역시 경관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우리시에도 디자인 전문직이 있는데, 총괄조정 역할을 디자인 전문직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
|----|-----------------------------|
| 소속 | 00군 00과 00팀 |
| 일시 | 2018. 11. 15. 10:30 ~ 11:30 |

■ 타 부서 사업이나 업무와 연계

- 주 업무가 도로사업이나 공원조성임. 도로사업의 경우 디자인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펜스 정도이므로 디자인 주무부서와 굳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음. 팀내에 건축직이 있으므로 별도로 타 부서와 협업할 필요성은 못 느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싶지만 디자인 전문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 관련 협의를 해도 의미가 없음
- 공원조성의 경우 조성 후 관리 부분은 환경산림과의 업무이므로 인계를 위해 설계에 관해 협의는 함

■ 타 부서와의 연계 필요성

- 같은 부서내에 디자인 주무팀이 있으므로 협의가 필요하다면 할 의향은 있음
- 타 부서와 연계했을 때 의견반영의 어려움, 행정절차의 복잡함, 사업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에 대한 우려는 없음. 디자인팀 내에 전문직이 있다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므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 사업추진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자(팀장, 과장, 군수 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이나 전문가 자문없이 진행할 경우 의사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게 됨
- 담당 사업 대상이 디자인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업무부담은 있지만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단지 심의에 의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 같고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는 됨. 이보다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과 같이 설계사와 사업 담당자와의 의견조율 등을 통해 현장방문과 자문을 해주는 방식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됨

■ 전문가 활용

- 전문가는 특별히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함.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이 유용함
- 예산목을 공사 관련된 것만 세우므로 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예산목은 새로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복잡함이 있어서 꺼려지게 됨. 하지만 용역업체에 디자인 시안을 받는 예산으로는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역업체를 이용했음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연구성과

2018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발전방안
-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 충청남도 관광지 안내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년

- 충청남도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
-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 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디자인 가이드라인

2016년

- 충청남도 농촌주거환경 개선방안
-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사업 발전방안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2015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 충청남도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
- 충청남도 홍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4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시스템 개발 연구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공사장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경관·공공디자인 실태조사

■ 사업 간 연계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사항

- 공원조성 사업 등 선정기준에서 주민교육사업 완료된 지역만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면 효과는 좋을 것 같으나, 미리 증빙자료 등 준비해야 하고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잘 모르므로 어려울 것 같음. 하지만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같은 공원과 주변까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음
- 하지만 타 부서 사업과 연계 추진한다고 하면 누군가 총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업무가 많아지므로 부담이 됨. 왜냐하면 부서별 맡은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임
- 충남도 또는 중앙부처 추진 공모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 실정임(이런 업무를 계속 했던 담당자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찾아봄). 몇 년 전 공모사업 리스트를 충남도에서 만들어서 배부한 적이 있음
- 디자인 조정팀에서 각 부서 사업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총괄업무를 담당한다면 부서 간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타 부서에게 협업하자고 먼저 얘기할 조정부서가 필요함

■ 현재 사업추진에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

- 공원조성의 경우 시설계획 설정된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고, 또한 사업기간이 보통 1년정도이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함. 근린공원의 경우 필요하나 작은 어린이공원은 배치 시설물은 정해져 있으므로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실시설계단계에서 수정하면서 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함
- 현재 사업 추진하면서 디자인이나 경관 부분은 공공디자인 디자인컨설팅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므로 앞으로도 필요 시 이용할 것이며 이 제도가 보다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음

연구진

연구책임

박혜은 전임연구원

내부연구진

방재성 책임연구원

오병찬 책임연구원

김성희 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안수지 소장(㈜아라디디자인&ENG 디자인연구소)

내부 심의위원

권영현 수석연구위원

이충훈 수석연구위원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황진찬 팀장(충청남도 공공디자인팀)

외부 자문위원(가나다 순)

윤진옥 대표(한국문화경관연구소)

이형복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채완석 팀장(경기도 공공디자인팀)

주최 및 협력기관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김관호 과장(건축도시과)

황진찬 팀장(공공디자인팀)

안동수 주무관(공공디자인팀)

김유진 주무관(공공디자인팀)

박성훈 주무관(공공디자인팀)

2018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인쇄·발행 2018년 12월

발행처 충청남도

연구기관 충남연구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인쇄처 세기인쇄출판

•본 보고서의 판권소유는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에 있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복제나 전제가 불가능함